

저출생 시대 교육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원
- 연구기간 : 2024.7.~2024.12.
- 연구책임자 : 서용석(한국과학기술원)
- 공동연구원
 - 김세미(한국과학기술원)
 - 심현기(공주대)
 - 김형만(사단법인 아이야)

- 이 연구는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히려함

요 약 문 (국 문)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는 한국 교육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스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저출생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계획과 연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먼저 ‘인과 계층 분석(Casual Layered Analysis)’을 활용해 저출생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문헌조사와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했으며,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저출생이 가져올 미래의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적·가치관적·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교육·돌봄·지역재생을 결합한 복합학교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학교 자치가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핀란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편적 교육 접근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50년을 시계로 분석한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미래 첨단 교육환경은 분명 많은 기회를 열어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격차·윤리 문제·제도적 공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을 통한 교육 혁신’과 ‘인간적 가치·윤리 중심의 교육’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반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Macro, Meso, Micro 레벨에서 제안하였다. Macro레벨에서는 미래 교육비전 및 거버넌스 확립과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 Meso레벨에서는 지역 및 학교 차원의 운영체제 혁신과 교사역량 강화, Micro레벨에서는 학생 주도 학습 및 융합형 교과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반해 ‘교육 품질 고도화,’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 ‘생애 학습 이동성,’ ‘지역 중심 학습,’ ‘교육 인프라 재확립’ 등 다섯개의 영역에서 18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저출생 문제는 교육계만의 과제가 아닌 사회·문화·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중심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과 접근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가 미래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1.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범위	1
4) 추진 체계 및 분석(사고)의 틀	2
2. 미래환경 변화와 저출생 심화 요인 분석	5
1) 인과 계층 분석	5
2) 인과 계층 프레임을 통한 저출생 심화 요인 분석	7
3. 2000년 이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초·중등 교육 정책 변화	21
1)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정책 변화	21
2)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 정책 변화 분석	28
4. 저출생 관련 해외 (교육)정책 및 개혁 사례	51
1) 핀란드	51
2) 캐나다	56
3) 일본	61
4) 싱가포르	67
5) 시사점 요약	72
5. 미래 교육의 방향성	75
1) CLA 분석	75
2) 기존 문헌 및 정책 분석	78
3) 해외 사례 분석	82
4) 시나리오를 통해 바라본 미래 초·중고 교육환경의 변화	87
5) Macro, Meso, Micro 레벨에서의 정책 방향성	97
6. 분야별·단계별 추진 과제	104
1) 미래 추진 과제의 지향점과 영역	104
2) 영역별 추진 과제	109
3) 영역에 따른 단계별 과제 추진 방안	124
참고문헌	129
부록 1. 2050년 미래 초·중고 교육의 4가지 시나리오	133
부록 2 주요 통계 자료	141

그림 목차

[그림 1] 과업 추진 체계도	2
[그림 2] 추진 과제 도출 프로세스	4
[그림 3] 출산율에 따른 총인구 변화 시나리오(‘25~’70)	7
[그림 4] 출산율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변화 시나리오(‘25~’70)	7
[그림 5] 병력규모 추이(2012~2022년)	7
[그림 6] 미래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8
[그림 7] 총인구, 학령인구, 학령인구 구성비 추이 (1970~2060년)	8
[그림 8] 2024년 3월 1일까지 지역별 폐교 현황	10
[그림 9] 지역별 지방소멸지수 및 지방소멸 변화 속도	10
[그림 10] 내외국인 인구 구성비(2022~2024)	11
[그림 11] OECD 국가의 영구이주 규모 추세 비교	11
[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20
[그림 1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24
[그림 14] 늘봄학교 범주	28
[그림 15] 현 국가행정전달체계 vs. 관계적 관점의 다자간 연합관계망	29
[그림 16] 늘봄학교 개념도	32
[그림 17]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	32
[그림 18] 유아·보육 관리체계 모습 (2023년 기준)	35
[그림 19] 퀘백주 vs 다른 캐나다 지방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	57
[그림 20] 퀘백주 vs 다른 캐나다 지방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및 출산율	57
[그림 21] 미래 교육시스템과 학습환경 개요	101
[그림 22] 초중등교육과 저출생 사이의 악순환과 선순환 고리	102
[그림 23] 인적자본 투자 대비 회수율	103
[그림 24] 모두를 위한(for all) 생애 학습의 모습	104
[그림 25] 교수와 학습에 대한 지식과 실행의 연계	106
[그림 26] 교수학습에 있어서 과학, 기술, 예술의 상호 작용	106
[그림 27] 미래의 인재상	107
[그림 28] 유초중등교육과 인재의 양성 및 활용의 동태적 연계	108
[그림 29] 유보 및 초중등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체계	127
[그림 30] 가칭 유보 및 초중등교육 정책 추진위원회의 구상도	128

표 목차

〈표 1〉 CLA를 활용한 저출산 원인 분석	5
〈표 1〉 CLA를 활용한 저출산 원인 분석	6
〈표 2〉 초·중등학교 학생 수 전망 결과	9
〈표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4차)의 교육부 소관 정책과제와 주요 내용	22
〈표 4〉 학생 수 감소 대응 교육정책 유형 및 관점	25
〈표 5〉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 이슈 구조	26
〈표 6〉 저출산 인구변동에 대한 교육 분야의 정책적 대응방안	27
〈표 7〉 초등 늘봄학교 정책 변천	30
〈표 8〉 유아교육 기본계획 핵심과제	36
〈표 9〉 보육 기본계획 핵심과제	37
〈표 10〉 미래지향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업무(안)	38
〈표 11〉 유아교육·보육 담당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조직 비교	39
〈표 12〉 시·도청 보육 담당 및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인력/부서 현황	39
〈표 13〉 시·도청 보육담당 인력 및 부서 현황	39
〈표 14〉 일본정부의 과거 저출산 대책 현황	61
〈표 15〉 후쿠이현 사바에시 총인구	65
〈표 16〉 싱가포르 정부의 베이비 보너스 총 지급액 (단위: 싱가포르 달러)	68
〈표 17〉 싱가포르 정부의 아이 발달 계좌(CDA) (단위: 싱가포르 달러)	68
〈표 18〉 SkillsFuture 주요 프로그램	70
〈표 19〉 Macro, Meso, Micro 레벨 별 분석 결과 및 정책 이슈	100
〈표 20〉 창의적 학습을 위한 혁신적 교수학습 유형	105
〈표 22〉 5대 영역 18개 추진 과제	109
〈표 22〉 영역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과제	126

1.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교육적 영향력 가시화

- 지난 20여년 간의 저출산 기조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미 많은 초중고사 통폐합되었으며, 대학들 또한 같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
 - 전체 학령인구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349만 명 감소(30% 감소)했으며, 2040년 학령인구는 447만 명으로 2020년 789만명 대비 4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동시에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지역의 교육의 질 또한 하락이 예상
- 향후 저출생의 기조는 50여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과거 학령인구 증가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최적화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필요

2) 과업 목적

- 저출생 시대의 부응한 미래 교육 방향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안) 제시
 - 국가교육위원회의'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발전계획에 담길 수 있는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도출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교육 재설계, 인재양성 방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정책 과제 제시

3) 과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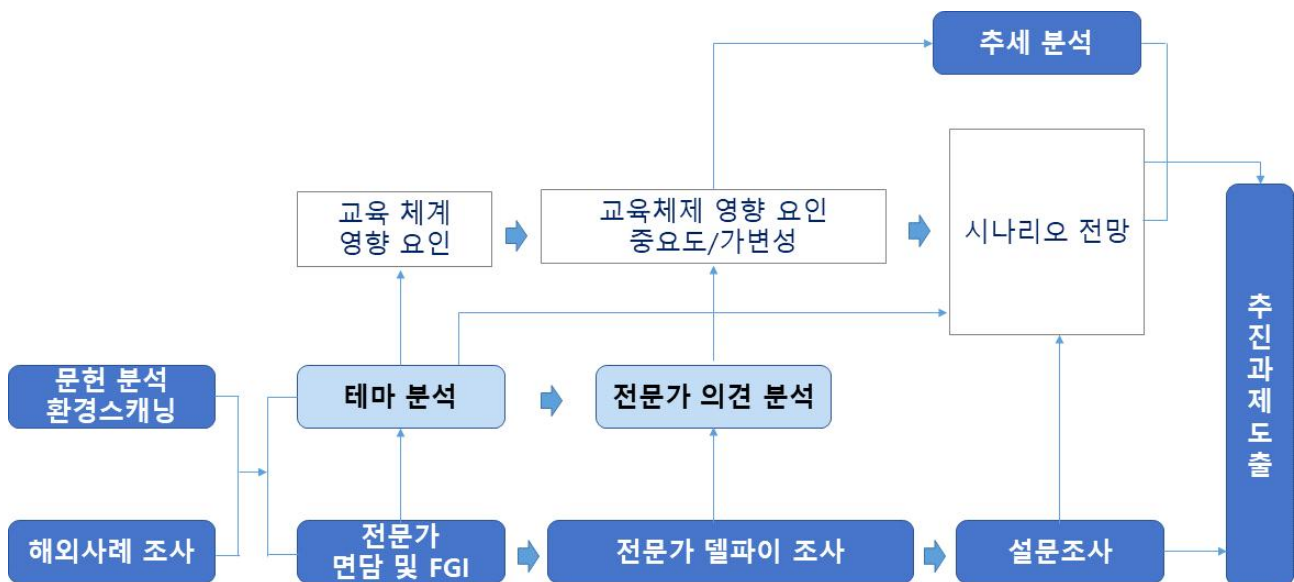
- 교육의 대상은 생애주기별로 유·초·중·고 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나, 본 과업에서는 초·중·고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그 범위를 한정
 - 교육의 방향성과 목표, 교육 운영 체계 및 구조
 -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조직, 교육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

- 교육에서 다루는 학습 주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나 강사의 역할과 기능,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와 환경

4) 추진 체계 및 분석(사고)의 틀

■ 추진 체계

[그림 1] 과업 추진 체계도



- (연구진 역할 분담) 세부 분야별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 회의 외에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를 통해 주요 쟁점 도출 및 핵심 추진과제 발굴
- (관련 정보 수집)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인구 관련 각종 현황 및 추세자료 수집
 - 인구 추세 및 학령인구 추정 관련 데이터: 통계청 및 교육부·KEDI 교육통계센터 데이터 활용
 - 고등교육기관 운영 현황(고등교육기관 수, 학생 수, 충원율, 중도탈락률 데이터): 교육부·KEDI 교육통계센터 데이터 활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KUCE) 대학알리미 데이터 활용
- (전문가 자문) 인구, 교육,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 확보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 과제 도출에 활용
 - 다학제적 관점의 교육 진단 및 전망을 위한 사회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현재 초중고, 대학교육에 대한 진단(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수 변화 관련, 대학 구조조정, 입시제도 및 대학정원, 대학등록금, 고등교육 재정지원 등), 미래 대학

교육에 대한 전망 등

- 국회, 기업, 공공기관, 학계, 문화예술, 교육계, 사회복지·서비스, 대학생
- (관련 기관과의 협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 저출생 및 인구구조변화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추진 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통계·행정자료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 기존 선행연구, 통계 및 각종 조사결과, 행정자료 등을 수집·활용하여 교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 등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 교육정책 혁신에 관한 국내·외 기초 연구 및 보고서, 정부 정책 지침서 및 관련 연구보고서, 정부 발표자료, 교육재정 관련 국회 예·결산 자료 등 활용
 -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 도출하고,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 자료를 최대한 활용
- (의견수렴)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기초 연구 결과물을 기반으로 분야별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자문하고 관련 정책을 상시적으로 의견수렴
 - 교육정책 관련 문제 및 쟁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자문 등
 - 정부 관계자, 데이터 분석 전문가, 교육정책 전문가, 교육기관 소속 담당자
- (해외 사례 조사 분석) 핀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의 저출생 관련 현황 및 정책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 과열된 입시 경쟁, 수도권 집중, 사회적 불평등 및 교육 격차, 정서적 불안 및 전인적 발달 부족 등 한국사회의 교육 이슈 맥락에서 시사점 도출
- (미래 시나리오 분석) 저출생 심화가 가져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미국 하와이 대학의 '4가지 대안 미래(Four Generic Alternative Futures)*' 시나리오로 전망
 - 4가지 대안 미래는 '지속적 성장(Continued Growth),' '붕괴(Collapse),' '규율(Discipline),' '변혁(Transformation)'의 원형으로 분류하고 분석
 - 저출생 기조의 지속은 미래 한국사회의 중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하나의 단선적인 예측이 아닌, 복수의 시나리오 형태로 예측하고 분석
 -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교육 영역에서 어떠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파악
 -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desirable)'하며 '선호하

는(preferred)' 미래를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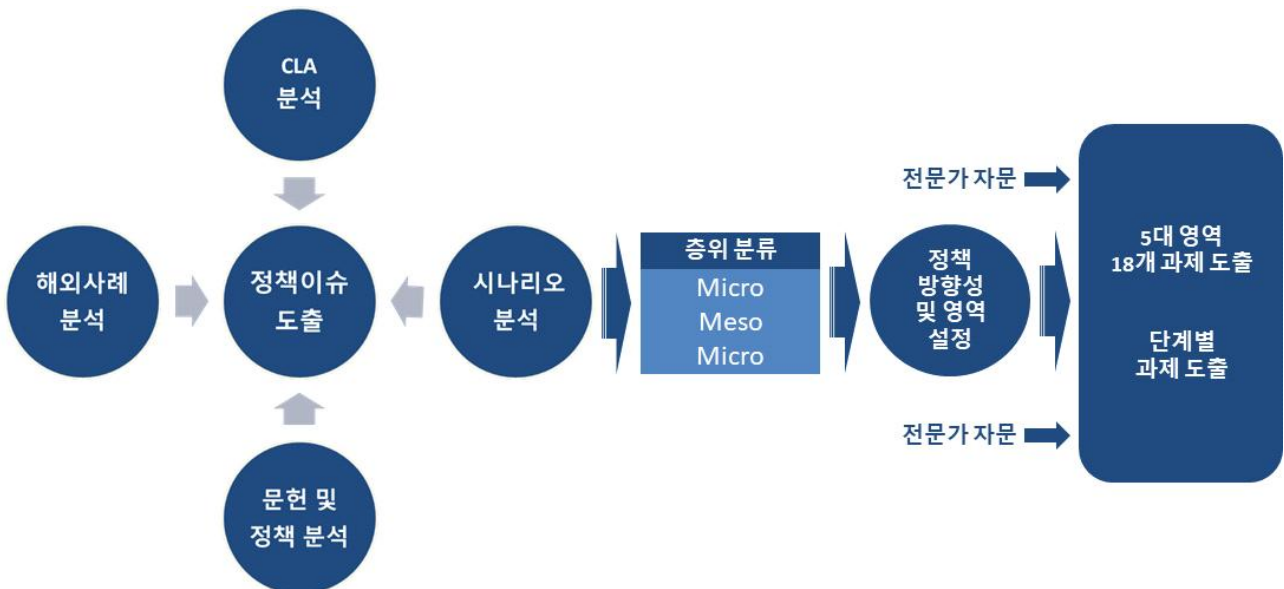
■ 미래 방향성에 입각한 분야별·단계별 추진 과제 제시

○ 단·중·장기 단계별로 Macro, Meso, Micro 레벨에서 추진 과제 제시

	Macro	Meso	Micro
단기 (1~2년)			
중기 (5~10년)			
장기 (10~20)			

- Macro 레벨: 국가 차원의 교육 정책 방향: 미래 교육 비전 및 거버넌스 확립, 법·제도·재정 기반 강화, 미래 역량 중심 국가 교육과정 개정 등
- Meso 레벨: 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차원의 실천 전략: 지역 및 학교 차원의 교육 운영 체제 혁신,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사 공동체 지원, 학습 환경 및 인프라 구축 등
- Micro 레벨: 학교·교실 차원의 교육 활동 및 학습 방법: 학생 주도 학습 및 개별화 교육, 융합형 교과 운영 및 교수·학습 혁신, 학습자 성장 중심 평가 및 피드백, 인성·사회성·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

[그림 2] 추진 과제 도출 프로세스



2. 미래환경 변화와 저출생 심화 요인 분석

1) 인과 계층 분석

- 미래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과계층분석(CLA, Casual Layered Analysis)'의 적용을 통해 저출생 원인을 분석

■ 인과 계층 분석(Casual Layered Analysis, CLA)

- Casual Layered Analysis는 복잡한 사회적 이슈, 미래 시나리오, 시스템 변화를 탐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 및 미래학 방법론으로, 호주의 미래학자 Sohail Inayatullah에 의해 개발 (Inayatullah, 1996; 2004; 2005; 2009; 2017; 2022)
 - CLA는 표면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문제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
- CLA는 서로 다른 이해 수준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계층으로 구성
 - 표면적 문제(Litany): 가장 눈에 띄고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으로, 표면적인 이슈, 트렌드 또는 데이터를 다루며, 미디어, 대중 담론, 일상적인 대화에서 드러나는 내용을 포함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
 - ※ 예시: 실업률 상승, 기후 변화, 정신 건강 악화.
 - 시스템적 원인(사회적 구조): 이슈의 근본적인 시스템적, 제도적, 정책적 원인 등 문제나 트렌드를 유지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요인을 포함
 - ※ 예시: 경제적 불평등,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산업 관행, 비효율적인 정책.
 - 세계관(담론): 시스템 구조를 형성하는 이념, 신념, 패러다임을 탐구하며, 문화적 및 사회적 내러티브가 행동과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 예시: 소비주의, 국가주의, 성장 지향적 경제 사고방식.
 - 신화/은유: 세계관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인 내러티브, 상징, 집단적 원형(archetype)을 탐구하며, 문화적 신화와 은유가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
 - 신화/은유 단계에서는 문제의 감정적, 상징적 뿌리를 드러내며, 사고방식이나 내러티브를 전환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
 - ※ 예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이다," "삶은 경쟁이다," "아메리칸 드림."

■ 인과 계층 분석(CLA)의 활용

- CLA는 복잡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변혁적 변화를 상상하는 데 유용

하며,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

- 미래 사고: 시스템적 변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신화와 내러티브를 파악하며 대안적 미래를 탐구
- 정책 개발: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시스템과 이념적 원인까지 해결하는 정책 설계
- 조직 변화: 기존의 가정을 도전하고, 혁신 또는 적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
- 사회 연구: 계층별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문화적 또는 사회적 역학 관계를 이해

○ 기후 변화 영역에서의 CLA의 적용 사례

- 표면적 문제: 지구 온도 상승, 자연 재해 증가, 산림 파괴.
- 시스템적 원인: 화석 연료 의존, 산업형 농업, 미흡한 글로벌 정책.
- 세계관: 무한 성장 중심의 경제 체제, 인간 중심주의, 단기적 사고방식.
- 신화/은유: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다," "지구는 무한한 자원이다."

○ CLA를 활용하면 정책 변화(시스템적 수준)부터 문화적 캠페인(세계관 수준), 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신화적 전환까지 다양한 개입 방안에 대한 설계가 가능

- 저출산의 원인을 CLA 프레임에 적용할 경우 <표 1>과 같이 정리가 가능

<표 1> CLA를 활용한 저출산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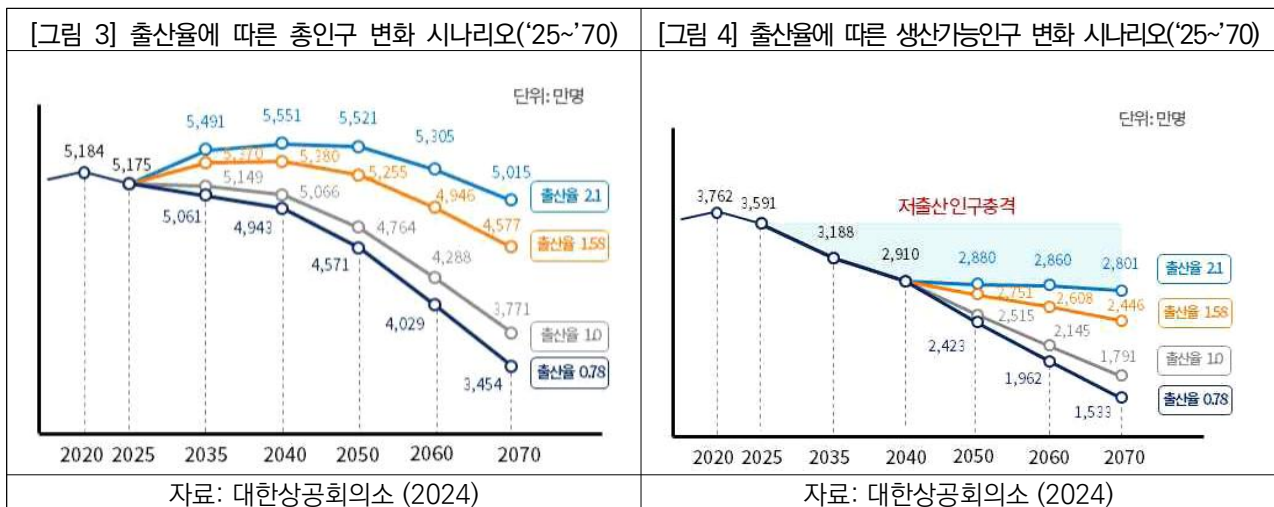
단계	내용	핵심 질문	예시
사건, 현상	표제, 문제, 이슈의 정의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출생
구조적 요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	무엇이 이를 야기했는가?	과도한 경쟁, 고용·주거 불안, 노동시장, 사교육비 결혼 제도의 경직성
세계관	구조적 요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 믿음	어떠한 지적인(이념적) 정당화 과정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개인주의, 양성평등, 종교, 전통적 가치관의 희석, 소비(물질) 지상주의
신화와 은유 내러티브	사회 내면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무의식, 기대, 심리, 욕구, 욕망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기대(예상)은 무엇인가?	무자식이 상팔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2) 인과 계층 프레임을 통한 저출생 심화 요인 분석

(1) 표면적 문제(Litany)

■ 생산가능인구 감소

- 한반도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한반도미래연구원, 2024)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출산율 2.1명이 회복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분석시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40년부터 2,800만명대 규모 유지



-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유지('22년 기준 0.78)되거나 소폭 상승할 경우, 경제활동에 중요한 생산가능인구는 '20년 3,762만명에서 '70년에는 1,533~1,79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2024)

■ 병역자원 감소

-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50만여 명 수준으로 10년 전인 63만 9천여 명과 비교해 약 28%에 달하는 13만 9천여 명이 감소 (국방백서, 2022)

[그림 5] 병력규모 추이(2012~2022년)



-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유지 등의 가정하에 향후 상비병력 수급을 예측한 결과, 15년 후인 2038년에는 39만 6천여 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간부(20만 명)가 현역 병사(19만 6천 명)보다 많은 구조로 변화됨을 의미 (KIDA, 2023)

[그림 6] 미래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단위: 천명)



자료: 자료: 국회도서관 KIDA 자료 재인용 (2023)

■ 학령인구 감소

-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1980년(1440만 명)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 감소
- 2023년에는 725만9000명으로 1980년도와 비교하면 50.4%나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700만 명대 밑으로 내려가고 2030년에는 4.0%가 감소해 600만 명대가 무너져 50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
- 2060년에는 학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1970년 대비 4분의 1 수준 (김병욱 의원실, 2023)

[그림 7] 총인구, 학령인구, 학령인구 구성비 추이 (1970~2060년)



자료: 통계청 (2023)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 및 중등의 학령기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큰 규모의 학생 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김형만 외, 2024: 92)
-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5년 단위로 연평균 - 3.3%, -7.5%, -3.2% 각각 감소할 전망이며, 2035-204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이 2.8%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출산율 전망에 따른 것임. 중학교는 2025년 이후 매 5년 단위로 연평균 - 4.5%, -8.1%, -2.5% 각각 감소할 전망임. 고등학교는 2020년부터 매 5년 단위로 - 0.8%, -0.14%, -7.1%, -6.4% 각각 감소할 전망
- 이와 같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5년에 비해 2040년에는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므로 학교의 운영체계가 재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지역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학교의 존립이 어려움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

〈표 2〉 초·중등학교 학생 수 전망 결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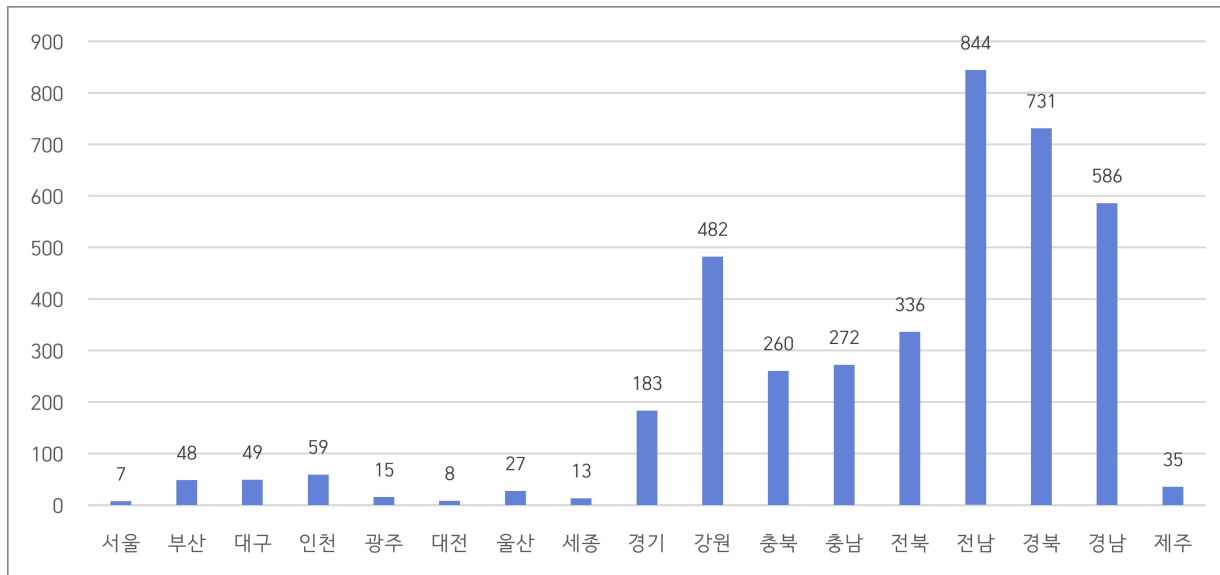
학교	2020	2025	2030	2035	2040	연평균 증가율			
						20-25	25-30	30-35	35-40
초등학교	2,692,164	2,273,162	1,535,555	1,307,763	1,498,427	-3.3	-7.5	-3.2	2.8
중학교	1,315,846	1,353,768	1,075,317	704,393	620,050	0.6	-4.5	-8.1	-2.5
고등학교	1,346,598	1,292,645	1,205,695	832,772	596,935	-0.8	-1.4	-7.1	-6.4
합 계	5,354,608	4,919,576	3,816,568	2,844,928	2,715,412	-1.7	-5.0	-5.7	-0.9

자료: 김형만 외(2024), p.92.

- 학교소멸과 지역소멸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
- 이상과 같이 그동안 학생 수의 빠른 감소에 따른 폐교의 진행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학교소멸에 의한 지역소멸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 유추 가능¹⁾
- * 2024년 3월 1일 현재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의 폐교 수는 3,955개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884개교, 경북 731개교, 경남 586개교, 강원 482개교, 전북 336개교, 충남 272개교, 충북 260개교, 경기 183개교 등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폐교 수가 많았음

1) 폐교는 2016년에 교육부가 마련한 초중등학교 폐교 기준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은 초중등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및 중등 180명 이하 등을 기준으로 학교의 통폐합 또는 폐교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 학부모의 2/3 이상이 통합을 찬성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준해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왔음.

[그림 8] 2024년 3월 1일까지 지역별 폐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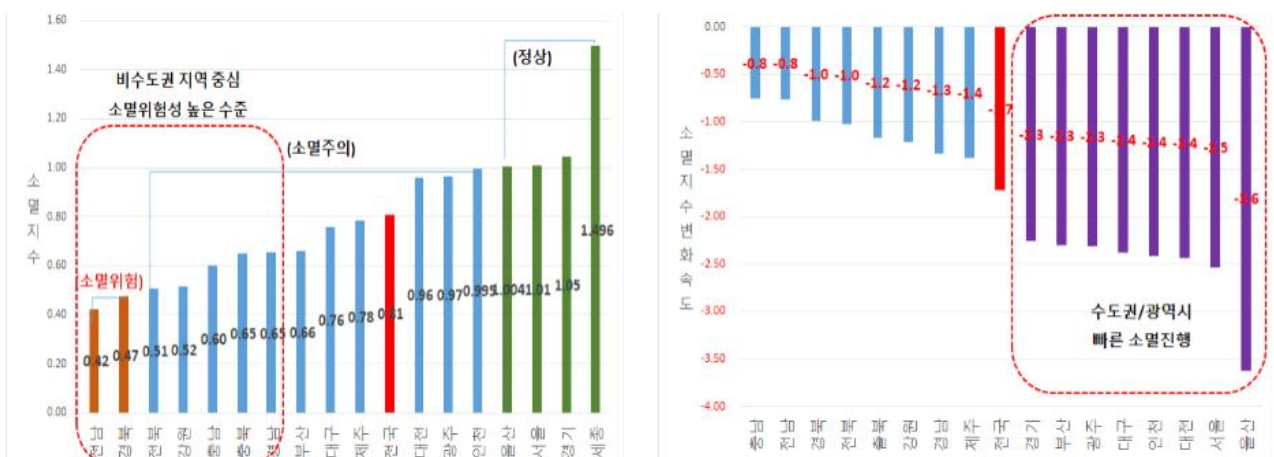


자료: <https://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none>.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²⁾를 고려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멸의 위험성이 높아 당분간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지방소멸 변화의 속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높아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에 학생 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³⁾

* 특히, 인구소멸지수가 매우 낮은 지역(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나타나는 학교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의 유지를 위한 대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그림 9] 지역별 지방소멸지수 및 지방소멸 변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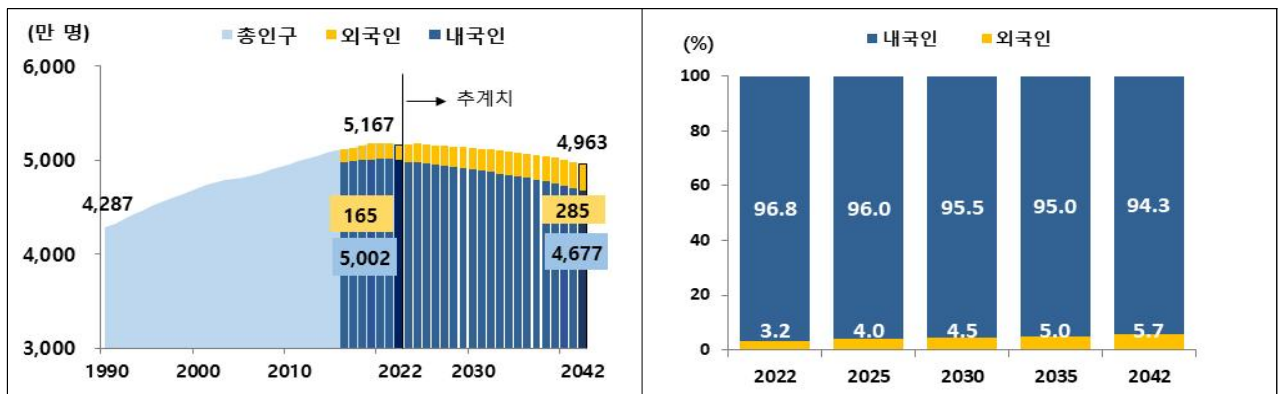
자료: 허문구 외(2022: 18), 백원영 외(2024)에서 재인용

- 2) 지방소멸지수는 15-4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1미만이면 소멸주의 지역, 0.5미만은 소멸 위험진입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이상호, 2018; 백원영 외, 2024).
- 3) 허문구 외(2022:18)가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는 혁신활동(1인당정상연구개발비), 산업구조 고도화(전산업 다양성 지수), 고부가가치기업(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지역성장(천명당 종사자 수)으로 구분된 4개의 부문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글로벌 경쟁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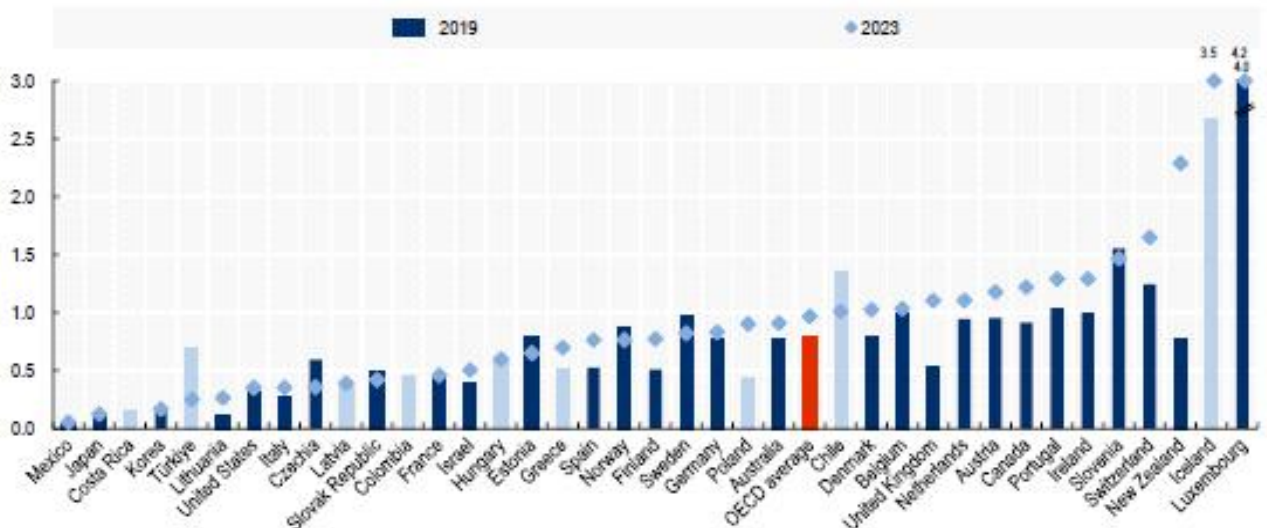
- 내국인 인구와 달리 외국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3.5%에서 2042년 5.7%로 증가할 전망이며,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영구이주 규모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은 외국인 유입을 고려할 때 미래의 학습수요는 다양화될 것임 의미하며, 따라서 미래에는 외국인 교육을 위한 대안 모색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

[그림 10] 내외국인 인구 구성비(2022-2024)



자료: 통계청(2024.11), 보도자료, p.4.

[그림 11] OECD 국가의 영구이주 규모 추세 비교



자료: OECD(2024),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4, p.22.

(2) 시스템적 원인(사회적 구조)

가. 경제적 요인

-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려운 경제 구조는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

■ 고용 불안정과 긴 노동시간

- 비정규직 증가: 청년층 고용에서 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계약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
- 낮은 임금 수준: 초임과 중위 소득의 상승 속도가 느려 경제적 자립 지체
- 노동시장 성별 격차: 여성은 임신과 출산 이후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출산에 대한 부담감 증가
- 긴 노동시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되어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며, 여성은 육아와 경력을 동시에 유지하기 힘들어 출산을 기피
- 노동인구 감소: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

■ 높은 주거비와 부동산 문제

- 주택 가격 폭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전세 및 월세 부담: 한국의 전세 제도는 초기 목돈이 필요하고, 월세는 매달 상당한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 축적의 속도를 늦추고,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육아 부담

- 출산 후 경제적 비용 증가: 산후조리, 의료비, 육아용품 등 초기 육아 비용이 급증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2017년(598곳)에 비해 20.5% 감소
 -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이용 기준)은 2017년 241만원에서 2022년 307만원으로 27.4% 상승 (김경희, 2023)

나. 사회적 요인

■ 성 역할 고정관념

- 육아의 성별 불평등: 한국은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문화가 강하며,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
- 사회적 인식 부족: 남성의 육아 참여와 동등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문화는 여전히 부족

■ 고령화로 인한 경제 부담

- 고령자 부양 부담: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는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결혼과 출산 여력을 약화
 - 저출산과 고령화는 상호 영향을 주며,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출산 문제를 심화
- 결혼비용 부담: 결혼식, 신혼여행, 집 마련 등 결혼에 드는 초기 비용이 상당
- 출산과 양육의 전통적 압박: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

다. 교육 및 경쟁 구조

■ 과도한 사교육비

- 경쟁적 입시 제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부모의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한국사회에서는 교육 경쟁이 심화되어 사교육비 부담이 막대하며,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
- 교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부모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심화

■ 부모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

- '완벽한 부모' 압박: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가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 경쟁적인 육아: 조기 교육, 어학 능력, 다양한 취미 등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

라. 정책적 요인

■ 실효성 낮은 출산 장려 정책

- 단기적 현금 지원: 정부가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제도적 지원의 한계: 양육비 지원,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역별, 계층별 격차가 존재

■ 주택 및 세제 정책 부족

- 신혼부부 주택 지원 부족: 주택 지원 정책이 있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제한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
- 출산 가구 세제 혜택 미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양육 지원 부족

- 미흡한 육아휴직 제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고, 기업 문화가 이를 방해
- 보육시설 부족: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부족해 상당수의 부모가 자녀 보육을 사립 시설에 의존
 - 아울러, 보육 시설의 대기 시간이 길어,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불안감 증가
- 저출산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가 얹혀 있는 만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 이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 양성평등, 일-생활 균형, 경제 안정성 확보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선을 요구

(3) 세계관(담론)

가.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

■ 행복의 다원화

-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다"는 단일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행복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
- 여가와 자기 계발 중시: 여행, 취미, 건강관리 등 자아를 위한 활동이 결혼과 출산

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증가

- 양성평등의 확산: 성별 역할 구분은 현대 사회에서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의 필연성을 더 낮추는 결과를 초래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가치 감소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경제적, 환경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출산이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 확산
- 출산의 사회적 보상 약화: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일이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보상이 감소

■ 개인주의의 확산

- 자아실현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 변화: 현대인들은 가족과 출산보다 자신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거의 "결혼-출산-양육"이라는 인생 설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경력, 자기계발, 취미와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
 -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 강화
- 자율성의 강조: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출산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치부
- 경험 소비의 증가: 자녀 양육보다 여행, 취미 생활 등 개인적인 경험에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이 증가

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 결혼에 대한 의무감 약화

- 사회적 압박 감소: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약화되었으며,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덜 비난받는 환경을 조성
 - 과거에는 결혼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경향 증가
- 독신 생활의 긍정적 인식: 혼자 사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독신이 낙후된 선택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의 방식으로 정착
 - 과거에는 미혼 상태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독신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대
-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추세 증가: 과거에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권장되

었지만, 현대에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

- 결혼 없이도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비혼주의가 확산

- 결혼 제도의 실용적 관점 강화: 결혼이 사랑과 가족 형성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경제적, 실용적 조건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졌습으며, 결혼을 "이득"보다는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
- 전통적인 결혼식, 혼수, 상견례 등 복잡한 결혼 절차와 관련된 전통적 관습도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 감소

- 결혼과 출산의 분리: 전통적으로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
- 출산은 곧 경제적 부담: 과거에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가져왔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
- "자녀는 노후의 보험"이라는 전통적 인식도 약화되었고, 자녀를 낳지 않아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시스템(연금, 보험 등)이 자리 잡으면서 출산의 필요성감소
- 출산의 선택화: 전통적으로는 결혼 후 곧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는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
-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삶(DINK족 Double Income No Kids, 비혼주의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

다. 전통적 가치관의 희석

■ 가족 중심 문화의 약화

- 과거에는 가족이 개인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개인의 행복과 성취가 우선시
- 확장가족에서 핵가족, 1인 가구로: 전통적으로 확장가족(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형태)이 주요한 가족 형태였다면, 현대에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며 전통적 가족 개념이 약화
-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감 변화: 전통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부모들은 "희생"보다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성 증가
- 자녀를 통한 성취와 보람을 삶의 핵심으로 여기던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선택을 더 쉽게 고려

- 가족보다 개인의 중요성 강조: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

■ 성 역할과 전통적 관습의 약화

- 전통적 성 역할의 해체: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맡는 역할 분담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적 성 역할 구분이 약화
 -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남성도 가사와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출산 기피로 연결
-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거부: 결혼과 출산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현대 여성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역할로 여겨지며, 이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 증가
 - 여성들이 개인의 경력과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상이 희석

■ 공동체 의식의 약화

-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과 행복을 우선
-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해체: 과거에는 지역 사회와 대가족 구조가 자녀 양육을 지원했지만, 현대에는 개인이 자녀 양육의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출산에 대한 부담감 증가
- 종교적 가치관의 약화: 종교적 신념이 약화되면서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의 의무를 강조하는 종교적 관점도 희석되며, 특히 젊은 세대는 종교적 관습이나 의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이 강화
- 혼인을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 결혼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가족적 책임으로 여겨졌으며, 독신은 비윤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었고, 결혼을 통해 가문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

■ 유교적 전통과 가치관의 희석

- 유교적 전통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깊이 뿌리내린 사상으로,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가치가 약화되거나 변질되면서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는 다양한 양상이 발현
 - 유교적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압박이 감소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유교적 전통에 반발하며, 비혼을 선택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
- 효(孝)와 가문의 연속성: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손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강조
 - 이를 통해 조상의 영광을 기리고, 가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의무로 간주
- 가부장제 중심의 가족 구조: 가문의 번영과 혈통 유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유교적 가치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관념
 - 아들 낳기를 강요하던 문화는 점차 약화되었고,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얻으면서 전통적 출산관이 붕괴
- 유교적 전통에서는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켰으며,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행위로 간주
 -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연속성보다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면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희석

(4) 신화와 은유(내러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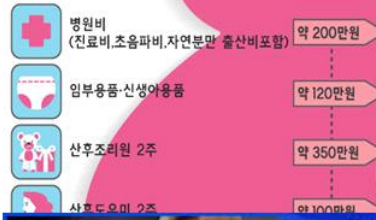
■ 내러티브란(Narrative)?

- 내러티브(Narrative)란 한국사회 기저에 흐르는 심층 서사로 우리사회의 가장 근원적 인지 수준
- 내러티브에는 개개인들의 특정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경험, 인지, 미래에 대한 이미지(Image) 등이 융해

■ 저출산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비용(돈)’

- 결혼, 출산, 양육에는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도 포기해야 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은 고갈되고, 생산인구는 줄고, 경제는 축소된다는 등의 내러티브가 근간을 형성
- 정부도 출산을 경제적 지원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연결하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산모 예진씨가 출산에 쓴 비용



2024 결혼비용 리포트



자녀 1인당 양육비용

2021년 월평균, 4055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직접지원: 출생신고금 신청
지원대상: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계 방향으로 90일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500만원~2,000만원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5년 분할지급)
2024. 1. 31. 출생아: 500만원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2024. 1. 31. 출생아: 1,000만원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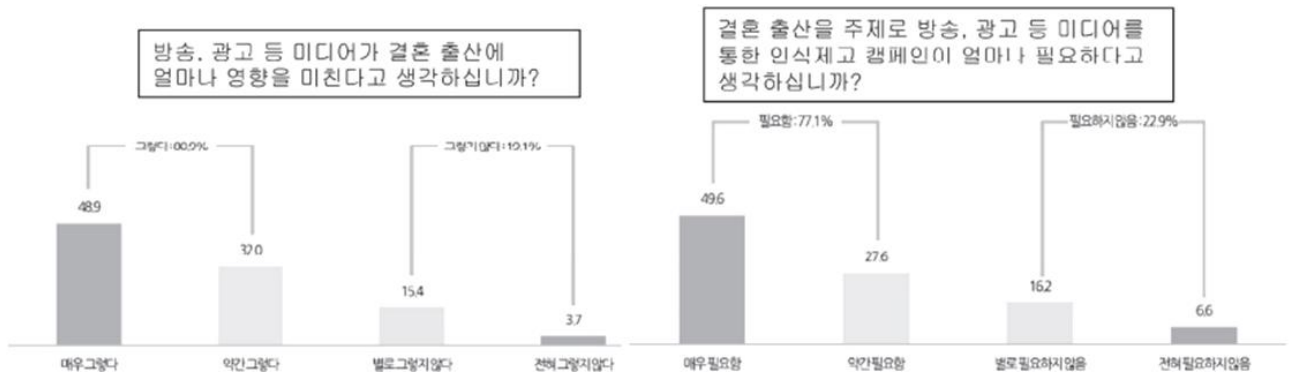
■ '비용(돈)'에 매몰된 내러티브 전환 필요

-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내러티브 필요
 - 예를 들어, 가족의 소중한 가치, 가족이 주는 행복 등으로 우리 사회의 내러티브 전환이 필요



- 우리 사회의 내러티브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미디어는 연일 저출산으로 인한 비용 문제나 경제적 지원 규모만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청년세대의 저항을 유발
 - 결혼, 출산, 양육이 주는 기쁨과 행복, 가족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기사나 콘텐츠 제작을 대폭 확대
 - 결혼과 출산, 육아의 어려움 등 과장되고 부정적 콘텐츠 제작과 편성은 지양
 - 아동, 청소년, (미혼)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전략 수립

[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3)

3. 2000년 이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초·중등 교육 정책 변화

1)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정책 변화

- 학령인구 감소는 2000년대 초부터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이자 교육 이슈
 - 학령인구 감소를 비롯한 출생아 수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감소는 현재까지도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국가 수준에서의 난제로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얹히고 설킨 복잡계적 현상
 -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기존의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그동안 정책 동향의 성격이 어땠는지, 관련 정책들의 거시적인 흐름과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담은 자료들을 분석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

(1) 인구 억제 정책 (~1990년대)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해 오던 인구를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투입하여 억제해왔음
 -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을 거친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일명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폭발적인 인구 성장 시기
 - ※ 이 시기 동안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98%였으며, 합계출산율은 6.3명
 - 1960년대 당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와 사회 인프라 수준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경제적 문제를 우려
 - 1960년대부터 출산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가족계획’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표적인 가족계획 정책으로는 출산억제 캠페인 활동, 해외이민 정책 추진, 「모자보건법」 제정을 통한 인공임신 중절의 합법화 등이 존재
- 이러한 국가 주도하에 진행된 인구억제 정책의 성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증가율은 지속 감소하여,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이하인 2.06명으로 감소
- 이후 합계출산율은 2001년 합계출산율 1.30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사회에 돌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
-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감지한 정부는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인구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신인구정책으로 전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년-2022년)

-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대두된 것은 2000년대부터이며, 점차 본격적으로 공론화
- 점차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여, 당시 집권한 노무현 정부도 이러한 국민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권 초기인 200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신)
 - 2005년 5월, 국회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자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을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
 - 범정부 차원에서 4번의 주기를 거쳐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수립·발표

〈표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4차)의 교육부 소관 정책과제와 주요 내용

시기	정책 과제	주요 내용
제1차 계획 (2006-2010)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제2차 계획 (2011-2015)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 분야 제도 개선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 개선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선순환적 직업능력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개발체계 확립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가족형성에 유리한 조성	•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 유치원 종일반 확대 • 초등 중일돌봄교실 확대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교육비 경감 대책	
제3차 계획 (2016-2020)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 맞춤형 보육 • 돌봄지원체계 강화 • 교육개혁 추진: 교육·고용체계 개편, 공교육 역량 강화, 사교육 부담경감, 대학등록금 부담경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 대학구조개혁 추진 •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제4차 계획 (2021-2022)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감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조성 •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완화 •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 • 전문인재로서의 성장경로 구축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 교육 인프라 조정

자료: 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대한민국 정부, 2005; 2010; 2015; 2020)

(3) 현재 인구위기 대응·적응 정책(2022년)

-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현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제시([그림 1] 참고)

[그림 1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 교육 관련 정책과제로 여겨지는 핵심과제로, ①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②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제시
-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에 대한 사항으로 늘봄학교(전일제) 추진을 위한 전담 운영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다양화가 제시
-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사항으로는 중기 교원 수급계획 조속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제시

(4) 교육부 정책 변화 분석: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정책 유형화

○ 그동안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주제로 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는 그

리 많지 않으나, 종합적 관점과 이슈 유형화, 그리고 종합적 대안 등을 마련하고자 수행한 연구는 여러 정책보고서 등에서 확인 가능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정책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정리
- 김정애 외(2015)의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와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미래예측을 위한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과 요구되어야 할 ‘미래교육 4대 핵심 정책’과 ‘학생수 감소 대응 3대 정책’을 제안
 - 미래교육 4대 핵심 정책은 ① (학교기능/형태)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학교 역할 재설정, ② (인간상/교육목표) 초·중등교육에서 인간상과 교육목표 재설정, ③ (토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④ (교원) 미래형 교원 역할에 맞는 교원 양성·역량 강화이며, 학생수 감소 대응 3대 정책은 ① (교원) 미래형 교원 역할에 맞는 교원 양성·역량 강화, ② (학교인프라) 미래지향적인 풍요로운 학습환경(공간, 시스템, 자원 등) 조성, ③ (재정) 미래교육 패러다임과 학생별 질적 교육에 맞는 재정 확보가 목표
- 박남기(2021)는 저출산 관련 유·초등교육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슈 유형을 구조화
 - Lowi의 정책 유형 분류 방식에 따라, 향후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유·초등교육 관련 이슈의 유형을 ‘내용’과 ‘연관성’ 차원을 기준으로, 두 가지 이슈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
 - 유·초등교육 정책 유형을 정책 대상과 정책 영역, 정책 목적으로 분류하였고, 정책 대상 기준 이슈 유형은 국가와 사회, 교육청, 학교, 교육 참여자인 교원, 학부모, 학생, 재외동포로 구성
 - 정책 영역 기준의 유형으로는 교육과정과 매체 및 교수법, 교육시설과 여건, 교육환경, 교원역량이 제시
 - 정책 목적 기준의 유형은 과거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주요 목적이었던 국가경쟁력(인력의 질)과 현재와 향후 정책의 목표인 개인 삶의 질(개인 행복도)로 구분

〈표 4〉 학생 수 감소 대응 교육정책 유형 및 관점

유형	현재 관점	미래 관점
교육재정	• 학생 수에 기초한 교육재정 수요 산정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에 대한 절대적 투자 규모 감소	•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여건 마련이 가능한 재정 수요 산출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다문화, 탈북, 학업 부적응, 학습부진, 영재 등)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가중학생 개념 도입 • 학습 멘토 및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교원 수급	-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별 교원배치 기준 재검토 -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초·중등 교원수급조절	- 교원양성기관의 기능 변화 - 신규교원 양성 시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융복합 교과지도가 가능하고 다양한 역할(멘토, 코치, 역할모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양성 - 교원연수, 재교육 기능 강화 - 학교의 역할 변화 및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직원 양성과 역량 강화
학교 시설	- 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 폐교, 유휴시설 재활용	- 개별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유연한 통·폐합 - 미래학교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급 간 통합학교운영 및 미래형 교수학습 추진 - 학교의 물리적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유비쿼터스 학습환경 구축 - 평생교육체제에서의 지역사회학교 기능 확대

자료 김경애 외(2015). 학생 수 감소 시대 미래지향적 육체제 조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p.163.

- 연관성 차원에서의 저출산 관련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구조는 직접적 이슈와 간접적 이슈로 나뉘며, 직접적 이슈는 1차, 간접적 이슈는 2차, 3차로 다시 구분

〈표 5〉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 이슈 구조

유형		개념	예시
직접적	1차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 감소가 초등교육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	폐교 등 학교시설, 교육여건, 인력 공급 급감, 교육과정 개편 필요
간접적	2차	저출산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아이들 성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으로 인한 변화가 초등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생기는 교육 이슈	부모 교육력 약화, 생활지도 어려움 증가, 학생들의 협력 역량 약화, 경제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교육 여건 악화
	3차	저출산 현상과 미래 사회 변화가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이슈. 특히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이 어우러져 생길 이슈 부각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갈등 심화, 일자리 급변, 고독한 개인 증가

자료: 박남기(2021) 저출산 시대 대응을 위한 초·중등교육 관련 이슈와 정책 방향 탐색. 열린교육연구, 29(1), 189-216.

- 연구자는 기존 정책들은 수립시 1차적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포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선 간접적 이슈 또한 같이 고려 필요
- 간접적 이슈 중 2차적 이슈는 저출산이 가정과 사회,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으로 인해 유·초·중등교육에 생기는 교육 이슈를 의미

- 3차 이슈는 저출산 현상이 미래 과학기술·정치·경제·사회·문화 변화, 개인 특성 변화와 맞물리면서 교육에 미칠 영향, 그리고 복합적으로 생겨날 이슈를 말함
- 우해봉 외(2021)는 인구변동, 저출산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교육, 노동, 아동청소년, 여성 등 여러 대상과 분야에 대한 개혁 과제를 제안
 - 교육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급격한 인구변동의 원인 완화(mitigation)’를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인구변동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의 고착화 등이 제기
- 교육 분야의 대응방안으로, ‘원인 완화를 위한 교육정책’과 ‘사후적 적응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
 - 첫째, 원인 완화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출산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한 인구와 가정교육의 강화, 유아교육·보육의 공교육화 강화를 통한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 사교육비 경감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의 부담 경감이 필요
 - 두 번째로, 향후 저출산에 따른 사후적 적응을 위한 과제로는, 유·초·중등분야에서는 ①소규모 학교 내실화(단, 소규모 학교의 무분별한 통합은 지양함), ②교원 수급 조절 및 교사 자격 체제 개편, ③통합학교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 및 학교급 간 연계를 통한 학교 기능 재배치, ④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⑤학교시설 복합화 등 학교 공간 재구조화 활성화, ⑥중등학교의 균형성 제고 등을 제안
- 앞으로 유연한 교육체제의 구축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른 학교급 제도의 활성화, 사학 의존형 교육제도에서의 탈피, 지역과의 동반성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표 6〉 저출산 인구변동에 대한 교육 분야의 정책적 대응방안

유형	대응방안
유·초·중등교육	• 소규모 학교 내실화 • 교원 수급 조절 및 교사 자격 체제 개편 • 통합학교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 및 학교급 간 연계를 통한 학교 기능 재배치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학교시설 복합화 등 학교 공간 재구조화 활성화 • 중등학교의 균형성 제고
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 개선	• 유연한 교육체제의 구축과 운영 개선 • 학습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른 학교급 제도의 활성화 • 사학 의존형 교육제도에서의 탈피 • 지역과의 동반성장 체제로의 전환

자료: 우해봉 외(2021).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pp.353-383.

2)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 정책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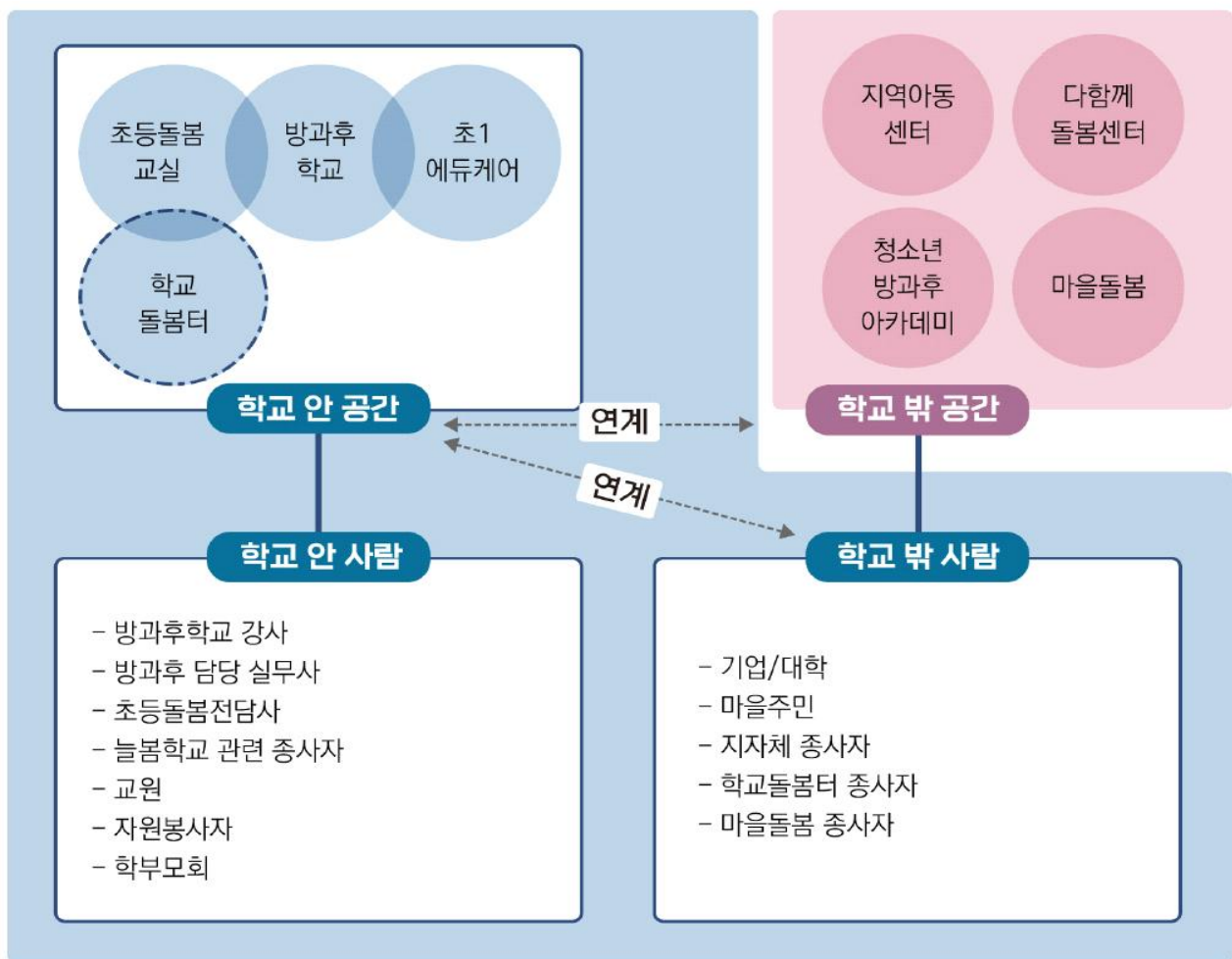
(1) 교육복지 개선(늘봄학교)⁴⁾

■ 배경

○ 늘봄학교 정책 정의

-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에 있어서, 학교 ‘안’ 시설로 공간을 한정

[그림 14] 늘봄학교 범주



자료: 이성희 외(2023), p10.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시범)사업(2023~2026), 보건복지부에서 학교의 유휴시설 및 공간을 활용해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늘봄학교

4) 이성희 외(2023).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RR20203-02.

의 대표적인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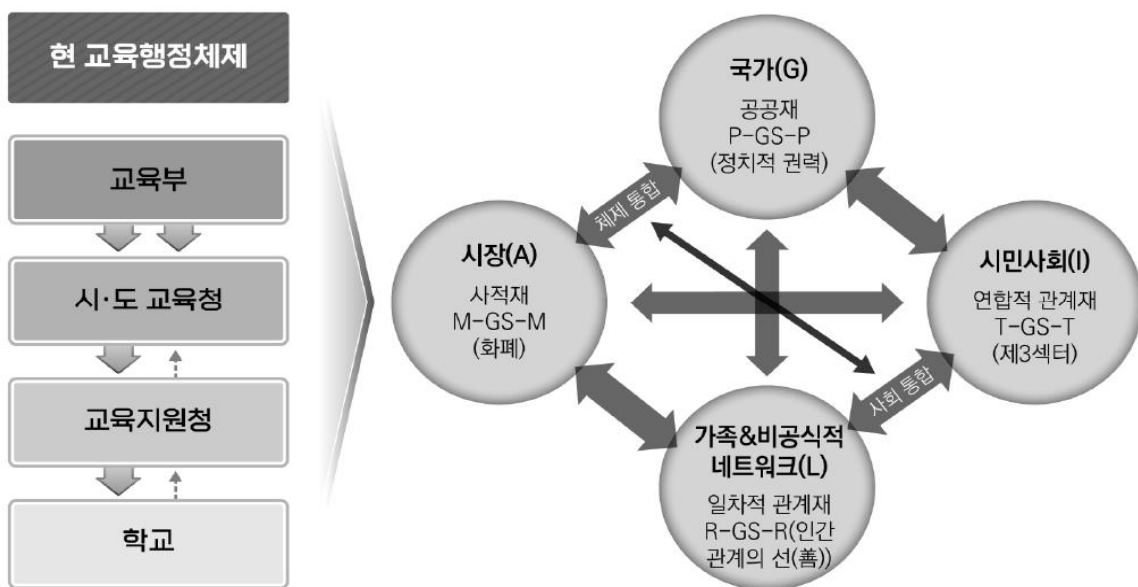
※ 학부모 자원봉사자, 마을교육공동체, 민간기업, 대학 혹은 지자체 산하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안에서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교육과 돌봄을 제공

○ 관계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과 교육

-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공적인 체제로 개념화되었던 학교가 사실은 학생의 생활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국가체제와 학생의 생활세계가 상호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인 ‘관계적 관점’이 필요
- 관계제는 인간들이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익보다는 공익(혹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인간 주체들이 관계를 맺을 때 새롭게 생산되는 (경제적 가치로 치환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 대표적인 돌봄, 호혜, 협력, 신뢰 등(Donati, 2021)
- 관계제(돌봄, 신뢰, 애정, 협력 등)가 사라졌을 때의 천문학적인 기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재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관계제로서의 교육과 돌봄(이성희 외, 2021: 250 재인용)

○ 관계적 관점의 다자간 관계망 모형(Donati, 2021)([그림 15] 참조)

[그림 15] 현 국가행정전달체계 vs. 관계적 관점의 다자간 연합관계망



자료: Donati(2021), p.43 재구성.

- 기능주의 관점의 국가 중심의 위계적 행정체계를 넘어서서, 관계적 관점의 체제(제1섹터인 국가, 제2섹터인 시장)와 생활세계(제3섹터인 시민사회, 제4섹터인 가정과 마을)가 관계를 맺는 다자간 협력관계망에 기초한 운영체제를 통해서만이 지역사회의 교육과 돌봄이 온전히 실현
- 특히 사회적 가치인 관계재로서 개념화된 교육과 돌봄은 주로 제4섹터인 가정과 비공식적 네트워크, 제3섹터에서 발생

■ (초등) 늘봄학교 정책 변동

- 초등학교 대상의 초등 늘봄(방과후 교육·돌봄) 정책과 관련한 정책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초등 늘봄 정책 관련 논의의 정책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함
- 초등 늘봄 정책과 관련된 변천은 크게 네 단계로 분류
 - 태동기: 초기인 1995~2003년은 정부의 주도로 학교 기반의 방과후 교육·돌봄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체계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기
 - 도입기: 2004~2009년 사이 초등학교 대상의 학교 기반 방과후 교육·돌봄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고,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 밖 방과후 교육·돌봄 정책 사업이 도입되기 시기
 - 확산기: 2010~2013년 사이 기존의 학교 기반 돌봄 정책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고, 전국으로 운영 규모 및 시간 등을 확대, 강화해 나간 시기
 - 발전기: 2014~현재까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돌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발전이 도모되어, 범부처적 협력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표 7〉 초등 늘봄학교 정책 변천

시기	내용	연도	주요 정책 사항 및 운영 현황
태동기 (1995-2003)	정부 주도의 방과후 교육·돌봄 정책의 태동	1995	• 5.31 교육개혁안: 방과후 교육활동 제안 도입
		1996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 시달: 개인의 소질, 적성 및 취미, 특기 신장, 사교육비 절감 목적 추가
도입기 (2004-2009)	학교 안팎 방과후 교육·돌봄정책 의 체계적 제도화 시행	2004	•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명칭 사용,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 시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도입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정책 시행
		2005	• 초등보육교실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시범운영(28개교)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시행
		2006	• 초등 저학년 대상의 보육 프로그램 방과후교실 전면 시행
		2007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사업 운영(천안, 울산), 아이돌보미 사업 관리기관 지정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 ‘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300개교) • 돌봄시간 야간 확대
확산기 (2010-2013)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돌봄정책 확대·강화	2010	• 초등학교 내 보육 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변경 • 여성가족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시범사업 운영
		2011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2011.7)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시범 운영: 연중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6시반~9시 아침돌봄, 방과후~17시 오후돌봄, 17시~22시 저녁돌봄 운영)
		2012	•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초등돌봄교실 7,400개 교실로 확대, 2016년까지 1~6학년으로 확대 계획 •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이하의 모든 취업부모 대상)
발전기 (2014-현재)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교육·돌봄정책 확대 및 범정부적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2014	•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 초등돌봄교실 3,983실을 추가 확충하여 2014년 11,378실로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점학교 운영 및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2017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 시행
		2018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체제
		2021	•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
		2023	• 초등학교 교육 및 돌봄 체계로 ‘늘봄학교’ 추진: 2023년 1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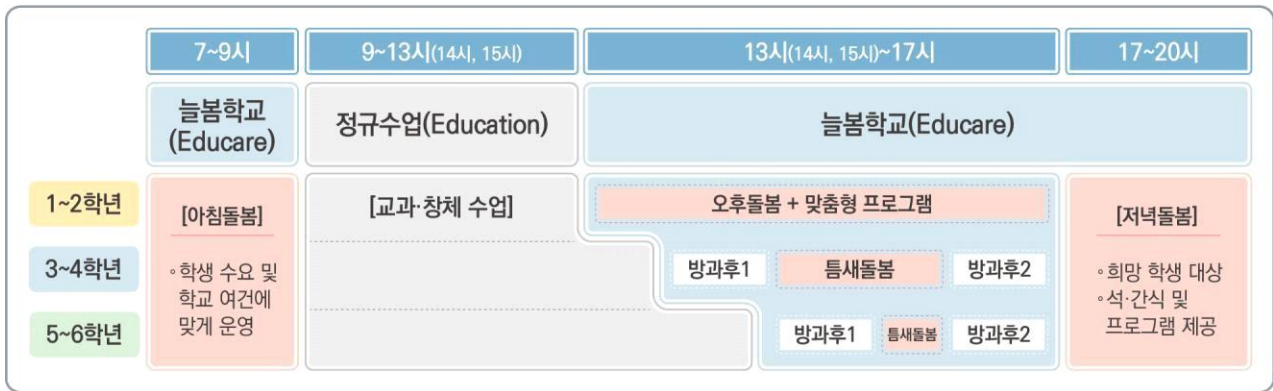
자료: 이성희 외(2023), pp.48-49 재인용.

■ (초등) 늘봄학교 현황

○ 늘봄학교 개념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2023년 교육부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 추진’을 제안
-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화되고, 학교가 끝나는 오후 시간에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 발생하며,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령인구 급감한다는 현실에서 출발 (교육부, 2023)

[그림 16] 늘봄학교 개념도



자료: 교육부(2023), p.8.

○ 늘봄학교 운영 현황

- 초등 돌봄교실은 2022년 4월 기준 1만 4,970개의 교실에서 29만 2,068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지난 5년간 2,990개 실(25.1%)이 증가
- 그러나 꾸준한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대기 인원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
- 2022년도에 신청인원 30만 5,218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1만 5,106명의 대기 인원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그림 13] 참조)

[그림 17]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



자료: 교육부(2023), p.5.

■ (초등) 늘봄교실 요약 및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 늘봄 정책은 방과후 교육과 돌봄의 영역이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으로 추진된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음
 - 최초 태동기(1995~2003)에서, 각 부처별 정책들이 제도화된 도입기(2004~2007)를 거쳐, 학교돌봄의 경우에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일괄적 명칭이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운영이 확산된 확산기(2010~2013)와 범부처별 협력과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적 체제 구축을 통해 빈틈없는 방과후 교육·돌봄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기(2014~현재)에 와 있음
- 첫째, 정책 변천을 통해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 늘봄 정책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음
 - 정책의 태동 및 도입 초기에는 IMF 시기와 겹치며 빈곤 계층 가정 아이들의 증가로 인한 복지적 성격과 사교육 증가라는 사회 문제이자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성격이 강조
 - 2010년대 확산기에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사업의 운영 규모와 시간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
 - 최근 들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국가가 양질의 보편적인 방과후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노정
 - 특히,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지금, 초등학교 학령기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초등늘봄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
 -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초등늘봄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그동안 시기와 부처에 따라 방과후 교육과 돌봄 정책의 주체와 중심 공간의 초점이 다르게 운영되어왔음
 - 주로 학교 내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은 교육부의 소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학교 밖 돌봄 혹은 마을 돌봄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수행
 - 이러한 분절적인 사업을 연계시키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 등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

- 돌봄서비스의 지역별 격차에 따른 시설, 인력 처우 등의 문제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존재
- 이뿐만 아니라 돌봄을 넘어 초등학생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내포
- 2023년 추진되는 늘봄학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질 높은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모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학교 기반의 운영체계 구축을 시도
-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 늘봄 정책은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접근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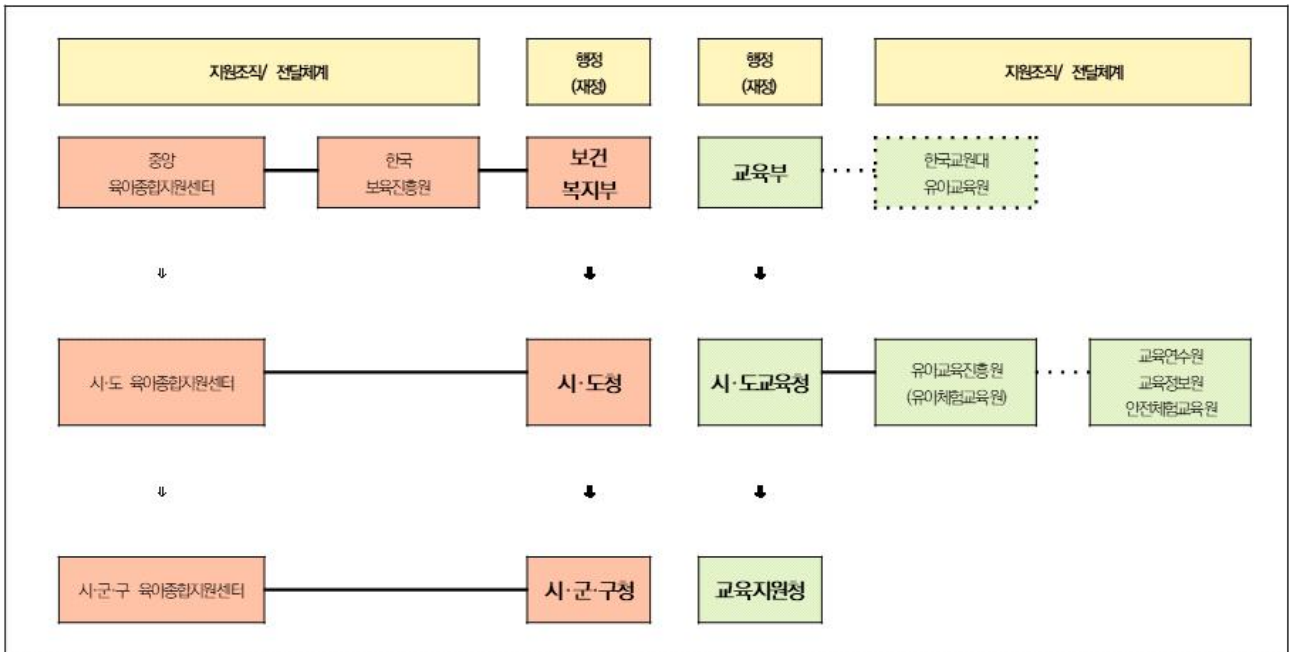
(2) 유아교육 확대(유보통합)⁵⁾

■ 배경

-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과 관련한 행정 관리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며,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함
- 중앙단위 (2023. 4. 기준)
 - 보건복지부: 2023년 까지 보건복지부의 부서를 살펴보면, 장관 아래 제1차관 내 인구정책실에는 보육정책관이 있음. 보육정책관은 다시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그리고 보육기반과로 분류되어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 왔음
 - 교육부: 교육부의 부서를 살펴보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래 차관 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에는 유아교육정책과가 있음
- 지방단위
 - 시·도와 시·군·구: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교육과 등에서 유치원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함
- 기타 조직
 - 유아교육진흥원: 각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

5) 김아름 외(2023).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01.

[그림 18] 유아·보육 관리체계 모습 (2023년 기준)



- 유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된 유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를 근거로 설립
-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은 교사연수와 연구, 유아체험을 3대 기능으로 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 현장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사업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 정책변동

- 우리나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보육중장기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본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 기본계획의 경우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계획('09-'12)에서부터 시작하여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3-'27)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방과후과정 포함)과 교원, 그리고 유아교육 지원체계(학비부담경감, 유치원운영 효율화 포함)의 3개 요소가 기본계획에 빠지지 않고 공통의 핵심과제로 구성됨
 - 제3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양질의 유아교육, 미래교육 인프라로 우수한 '질'(quality)과 저출산과 유아 환경의 디지털화 등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대응으로서 지역 특성에 따른 국·공·사립 기관의 병·단설 유형과 규모의 운영, 그리고 실내외 공간, 누리포털과 거버넌스, 시스템 등 '인프라'의 중요성과 유초연계 및 학교급간 연계협력이 강조되는 확장성을 보이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3. 4)

- 지난 2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과 취약 유아 지원까지 담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학부모 참여와 급간식과 보건 등 안전한 환경을 강조하는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음

〈표 8〉 유아교육 기본계획 핵심과제

핵심 과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선진화 추진 계획 (‘ 09-’ 12)	제1차 (‘ 13-’ 17)	제2차 (‘ 18-’ 22)	제3차 (‘ 23-’ 27)
비전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실현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1	유아학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 기회 확대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2	선진 유아교육제도 구축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 교육문화 조성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3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내실화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발달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4	우수 교원 배치·활용	교원의 전문성·자긍심 강화	유아교육 혁신을 통한 행정시스템 구축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5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4). 제3차(2023-2027), p.9.

- 보육 기본계획의 경우, 2006년 새싹플랜(‘06-’08, 여가부)에서 시작하여 (1차보완) 아이사랑플랜(‘09-’1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3-’17), 제3차(‘18-’22), 제4차(‘23-’27)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이르고 있음
- 보육 기본계획은 ‘부모 비용부담 완화’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질 관리’ 위주로 정책의 핵심과제가 구성됨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역량’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와 지원체계’, ‘보육서비스 기반’에 대한 핵심과제 구성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현금지원 등 ‘부모 양육지원의 확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의 구분(운영시간, 이용시간, 근로시간)이 논의되어 왔음

〈표 9〉 보육 기본계획 핵심과제

핵심 과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 (‘ 09-’ 12)	제2차 (‘ 13-’ 17)	제3차 (‘ 18-’ 22)	제4차 (‘ 23-’ 27)
비전	아이와 부모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보육·양육서비스의

핵심 과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 (' 09-' 12)	제2차 (' 13-' 17)	제3차 (' 18-' 22)	제4차 (' 23-' 27)
	행복한 세상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위해 함께하는 사회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1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2	수요자 맞춤 지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보육체계 개편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3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4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부모 양육지원 확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5	전달체계 효율화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	-
6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2022. 1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중, <수립배경 및 그간 중장기 보육계획 주요 내용>. p.11의 내용을 정리

- 유아교육과 보육 핵심과제와 최근에 강조되는 주요 동향(키워드)을 살펴보았을 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업무로서 미래교육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미래 통합된 업무는 현행 유아교육·보육 업무의 공통점과 각 특장점(전문화·차별화된 업무), 그리고 미래에 교육과 돌봄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는 양질의 통합된 환경에서 예상되는 업무
 - 첫째, 저출산의 기조로 지역별로 인프라 규모와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관 서비스/프로그램과의 연계협력과 통합 운영'이 요구
 - ※ 이는 유아교육-보육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유관 서비스/프로그램과의 확장된 연계 협력과 통합적 (또는 거점형) 운영은 유보통합 업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둘째, 서비스 질 평가와 모니터링,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평가와 모니터링은 서비스 및 기관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교원평가,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업무로 반영 필요
 - 셋째,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교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가운데, 교육-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교육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여기에 부모교육과 부모참여, 지역사회 연계와 유관기관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
 - ※ 이는 보육정책의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지원의 업무 이관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및 수요자 부모의 참여와 구체적 연계협력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의미

〈표 10〉 미래지향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업무(안)

ECEC 공통 핵심업무	최근 동향(추가)	미래 유보통합 통합 업무 (공통필수기능+통합어젠다)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돌봄(틈새돌봄, 방학, 긴급돌봄, 돌봄공백의 이슈) • 실내외 놀이중심 • 원격교육(디지털전환) • 다양한 연계협력-이음교육	• 영유아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방과후과정-돌봄, 놀이) • 지역별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급간 통합·연계 운영
교원/인력: 양성·자격-처우-연수-평가, 직원/보조인력 운영		• 교직원 배치, 양성, 연수, 급여, 복지
질관리: 평가, 컨설팅/장학	•	• 질관리(컨설팅장학)와 평가
평가: 서비스, 교원, 아동	• 아동 관점: 아동권리, 발달모니터링, 상담/정신건강, 급식-건강 안전	• 아동발달 모니터링 및 종합적 지원
인프라 및 수급 관리-설치운영	• (또다른 의미의) 통합 거점 • 공간: 위치, 시설·설비	• 인프라-전달체계 관리 - 시설설비-공간 운영 (기준) - 공공성/접근성 제고
비용지원(인건비-운영비, 누리과정·보육료지원 등)		• 부모 교육비·보육료(표준비용) • 기관운영비/교직원인건비 지원
부모협력, 지역사회 연계	• 연계/전이: 교육·보육·돌봄-보호-건강·의료	• 부모참여와 지역사회 연계 • 유초연계와 전이, 유관기관 협력
행재정시스템(회계), 통계자료	• 디지털 플랫폼/포털 운영	• 회계관리, 행재정시스템, 통계 • 수요자 (통합) 플랫폼 운영
	• 장애통합	•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
	• 취약계층 포괄적 지원	•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 포괄 지원 확대

자료: 김아름 외(2023), p.67.

■ 담당조직 및 업무 현황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 교육부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정책과 1개과 11명 및 7개의 유관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유아교육정책과에서 유치원 관련 주요 기능을 담당하되, 책임교육정책실 4개 부서 및 교육자치협력안전국 3개 부서가 유치원 관련 일부 기능을 담당
-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담당 부서는 1국 3과(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29명으로 구성

〈표 11〉 유아교육·보육 담당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조직 비교

교육부	보건복지부
• 1과(유아교육정책과) • 정원 11명('23.)	• 1국 3과 • 정원* 29명('23.) *보육 업무 담당

자료: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2023. 4. 기준).

○ 지방 광역 단위

-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지역은 동일함.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모두 전담부서(보육/유아교육만을 담당하는 '과'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함)가 존재
- 다만, 시·도청의 경우 사회복지와 일반행정직렬 공무원이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및 교육행정직렬에서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

〈표 12〉 시·도청 보육 담당 및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인력/부서 현황

시·도청(17개)	시·도교육청(17개)
• 전담 부서 없음 ※ 서울·경기·인천: 전담 부서 有 • 현원* 160명('23.4월) * 보육 업무 담당 ※ 사회복지, 일반행정직렬	• 전담 부서 없음 ※ 서울·경기: 전담 부서 有 • 현원 194명(정원 173명) ('22.9월) ※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렬

자료: 김아름 외(2023), p.50 재인용.

〈표 13〉 시·도청 보육담당 인력 및 부서 현황

시·도	담당 과	소관팀 수	현원(명)
서울	영유아보육담당관	5팀(영유아정책팀, 영유아지원팀, 영유아기반팀, 보육사업팀, 특화보육팀, 보육관리팀)	30
부산	출산보육과	3팀(보육행정팀, 보육평가팀, 보육지원팀)	15
대구	출산보육과	2팀(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8
인천	영유아정책과	3팀(영유아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16
광주	아동청소년과	1팀(보육팀)	8
대전	아동보육과	1팀(보육지원관리팀)	9
울산	복지정책과	1팀(출산보육팀)	5
세종	여성가족과	2팀(보육기획팀, 보육지원팀)	9
경기	보육정책과	5팀(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보육컨설팅팀, 보육품질관리팀)	23
강원	복지정책과	1팀(보육지원팀)	4
충북	복지정책과	1팀(보육지원팀)	4
충남	복지보육정책과	1팀(보육지원팀)	5

전북	사회복지과	1팀(보육정책팀)	6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1팀(보육지원팀)	4
경북	여성아동정책관	1팀(돌봄보육팀)	5
경남	가족지원과	1팀(보육팀)	6
제주	아동보육청소년과	1팀(보육정책팀)	3
총계			160

자료: 김아름 외(2023), p.51 재인용.

■ 요약 및 시사점

- 교육부가 유보통합 관리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이관(이양)받거나 협치가 필요한 정책기능 및 업무 부문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논의 필요
 - 단기적으로는 현행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의 3개 부처(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통합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기획
 -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 기능, 유아교육 기능, 보육 기능, 그리고 저출산 대응 기능을 포괄하여 갖출 수 있는 조직신설 추진
 - 현행의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업무와 유아교육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및 양육지원 업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관련 업무, 그리고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저출생 대응 업무를 모두 포괄하여 담당하는 범부처 차원의 조직 신설 제안 가능
 - 지방단위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구단위에 설치되지 못한 곳은 시·도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제공

(3) 교원 정원관리 정책⁶⁾

■ 배경

- 교원 정원 관리는 사회적 수요에 적절한 규모로 우수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교원을 양성, 확보, 배치하는 것을 의미
 - 교원정원 정책의 성과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학교 조직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며, 국가적 차원의 교육시스템 차원에서는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임(이길재, 2022)

6) 이길재, 이정미, 심현기, 박태양(2023). 시도교육청 교원 정원 운영 분석·진단. 교육부 교원정책중점연구소 수시연구-2.

- 교원 정원관리는 해방 이후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예비교원의 과잉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
 - 최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2023학년도 교원정원을 2022년 대비 2,982명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발표(교육부 보도자료, 2022.9.20.)
 - 이와 함께 2023년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기초정원 도입, 신도시 학교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 공교육 질 제고 실현을 위한 교원수급 정책을 추진 계획을 발표(교육부 보도자료, 2023.1.15.)
- 이와 같이 국가수준에서 환경적 변화와 교육현장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의해 책정된 교원정원은 각 시·도로 배정되됨. 각급학교에 대한 교원배치는 시도 교육감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도 및 규정 현황

-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
 - 교장·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
 -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교과전담교사를 0.75명 배치
 - 보직교사의 배치기준도 함께 규정
- 중학교 교원의 배치(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 배치
 -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
 - 보직교사의 배치기준도 함께 규정
-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 배치
 -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
 - 3학급마다 실업과 담당교사를 추가로 배치
 - 보직교사의 배치기준도 함께 규정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초등 및 중등 교원 배치 기준
 -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동법 시행령 23조

초 · 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초등 및 중등 교원의 정원 배정 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을 따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 [대통령령 제32499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3조(정원의 배정)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12. 31., 2010. 2. 26., 2012. 6. 29., 2014. 11. 1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26., 2012. 6. 29., 2014. 11. 1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26., 2014. 11. 1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3. 2.] [교육부령 제261호, 2022.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

- 이외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2. 1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구분	배정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2. 교사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 $\sum(\text{학생 수 구간}^* \text{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 \times \text{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도별 공립초등학교 총 수})$ (※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 학생 수 구간: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 **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 =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총 수 2.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교원 정원 관리 현황

- 학생수 구간, 학급수 및 정책적 수요에 기초해서 산정된 교원 정원을 시도에 배정하고 있음. 각 시도에 배정된 교원정원을 개별 학교에 배정할 때, 각 시도는 학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유형별로(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상이한 교원배치 기준에 근거하여 교원을 일선 학교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예시)

2. 교사	가.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
-------	---

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 요약 및 시사점

- 과밀학급 지역이나 신설학교가 필요로하는 교원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배정 산정 방식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산출의 기본이 되는 학급수를 정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과, 학급 수에 일정 모수를 곱하여 교원정원을 책정
 - 학급당학생수 기준 및 학급당 교원 산정 모수는 시도교육청 마다 차이가 존재
 - 개별 시도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원에 기초하여 교원을 배정하다보니, 과밀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인구 집중 현상으로 학교 및 학급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과밀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
 - 반대로 도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더라도 정원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낮추어 운용함으로써 시도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실제로,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의 편차가 큼. 예를 들어, 경기의 경우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초등 28명)에 따라 학급을 증가시키려 해도, 학급당학생수 과밀기준인 28명보다 3명 이상이 많아야 학급을 증가시킬 수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보다 높은 학급당학생수를 운영하고 있음
- 과소·과대 학교의 교원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 시 단위 교육청에서는 과대규모 학교에서 교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
 - 신도시의 경우 인구 집중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급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중장기교원수급계획들은 이러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음
 - 관할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을 경우, 통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 인원을 배정하게 되는데, 많은 시·도에서는 필요 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필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초등교원의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100명 이하의 과소학교의 경우 수업지원교사(교과전담교사)를 1명 추가 배치하지만, 전체학급이 3학급 미만인 학교에는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음

-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3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학교당 최소 8명의 교과 교사가 필요하지만, 정원 부족으로 7명을 배정함(김기수 외, 2015)

(4) 소규모학교 통폐합⁷⁾

■ 배경

- 교육부의 학교규모 정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규모적정화 권고 정책으로 구분됨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규모가 작은 학교를 폐교시키거나 소규모학교를 규모가 큰 학교에 흡수·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함
 - 소규모학교에 관한 정책적 접근은 주로 학교 통·폐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학교규모 적정화 및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으로 방향이 선회
 -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어 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주로 학생 수 및 통학거리 기준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간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
 -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교육 과정내실화 및 대안적 학교운영 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적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해 옴
 -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간 인구격차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학교는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소규모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우리나라 학교교육제도 및 학교정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류방란 외, 2018)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변천을 통해 나타난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정부주도형으로 추진
 - 제1기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초기
 - 제2기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기
 - 제3기는 정부의 통·폐합 정책 추진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시기
 - 제4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통·폐합을 재추진한 시기
 - 제5기는 정부 주도에서 시·도교육청 자율적 추진으로 전환된 시기

7) 김현미, 변희현, 이수정, 정은주, 주형미, 이상일 외(2022). 인구감소 대비 지역별 인구추계 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2-8. pp.78-120.

권순형, 정미경, 이강주, 허 주, 민윤경, 정혜주 외(20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21-01. pp.35-44.

- 제6기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기
- 각 시기마다 정부의 통·폐합 추진 강도에 차이는 있었으나,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추진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이후 보다 다양한 이슈로 발전됨
 - 대표적으로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측면과 소규모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양립적 논쟁 속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의 양면성을 보임
 -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폐합된 학교의 학생 통학거리 증가 및 교우관계 문제(이혜영·김지하·마상진, 2010),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악순환 현상 발현(최경환·마상진, 2009) 등 지역사회 전반에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도 발견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정부 주도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권고’와 ‘유도’방식 등으로 추진
 - 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혹은 원칙)과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로 제시되어 통·폐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었으나, 강제적인 집행은 아니었음

■ 정책 운영 현황

-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인사 우대 정책
 - 지난 1967년 ‘도서·벽지’에 소재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농어촌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을 목적으로 함
 -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 급지별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함을 규정
 -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에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근거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도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서·벽지학교의 대부분이 소규모학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지원 정책
 - 지난 2004년부터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음. 2021년 제4차(2020~2024)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학교교육 여건 지원 정책과제는 농·산·어촌 학교 환경 및 여건 개

선을 목적으로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학교시설 안전 강화',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등 세 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운영

- 대표적으로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지원',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농어촌 진로교육 강화',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해당됨(농림축산식품부, 2020).

■ 제도적 쟁점

-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하게 논의되는 제도적 쟁점은 소규모학교에 필요한 개별화, 다양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에 있음
 - 특히 교사의 역할 변화에 맞는 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
- 교사 자격 제도의 변화
 - 현재 교사 자격은 크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로 나뉘며, 중 중등학교 교사는 주로 하나의 전공 교과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사 자격 기준은 소규모 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사 자격 제도의 변화가 필요
 - 첫째, 현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는 교사 자격을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법령에는 초·중등 교원의 추가 보수교육을 통해 복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임
 - 실제 2001년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전국 교대생들의 임용고사 거부라는 집단 반발로 이어졌음
 - 복수 자격 취득 기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우선 통합운영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복수자격을 부여하고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전제상, 2022)
 - 둘째, 중등학교 교사가 다(多)교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현재 중등 교사 자격은 1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 담당 교과 교사의 부재를 순회교사 제도로 보완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1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는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인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와 연계하여 학생 선택권의 확대 및 소규모학교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음(교육부, 2021.12.10.)

○ 지방교육자치 체제 강화

- 미래 사회의 변화와 개별 학습자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 교육 자치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 필요
- 첫째, 지역사회의 교육현안을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자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예를 들면, 인구감소의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농어촌 또는 중소도시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현재로서는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둘째, 지역사회 내의 인적, 물적 자원과의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학교 안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 학습터를 확장할 수 있으며 그 예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학교⁸⁾를 들 수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의 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함
 - 첫째, 국가교육과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둘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및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됨
 - 셋째,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등 학교 내·외부적으로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
- 온전히 학교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 인사, 예산, 시설 등 학교 전반의 기능을 학교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의 제도화를 시사함

(5) 교육정책 한계 및 과제

8) 공유학교: 학교와 지역의 시설, 인력 등을 공유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협력학교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교육과정을 지역의 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학교인 공유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2022).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거나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교육 격차

- 절대적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별 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므로 학령인구 규모, 분포 및 변화 특성을 고려한 학교교육 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함
 - 학령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전체 인구보다 학령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 지역, 그리고 전국에서 7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즉, 비수도권 지역의 학령인구 소멸은 학교 소멸, 지역 소멸로 이어져 해당 마을이나 지역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바람직한 미래 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마다 학령인구가 적정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만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허브로 기능해야 함
 - 지역 내 유일한 학교를 활용해 교육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교육과 복지를 포괄하는 학교교육 책임 확대

- 학교의 단일 기능에 집중된 구조로 인해 교육과 복지 기능의 불균형이 발생함
 - 학교는 학습과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구조는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데, 예를 들면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가 폐쇄·축소되면, 학생은 장거리 통학의 부담을 안고 지역 주민 간의 연결 고리가 단절됨
 - 학령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추세는 지역 간 교육자원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 자체가 소멸하거나 축소되어 교육과 복지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
 - 이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 지역별 학령인구의 변화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복지 체계를 도입이 필요
 -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생존할 수 있도록 복합 교육 시설로 전환하거

나,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유연한 교육과정 및 교원 양성

- 현재의 교원 양성 체계는 주로 일반 학급 규모와 일률적인 교과 지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급 규모가 축소되거나 통합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교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지역 특화된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부족 문제가 심화 될 수 있음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은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다기능화 강화가 필요함.
 - 교사의 다교과 지도 역량 강화: 교원들이 하나의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를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양성
 - 지역 특화 교육 전문성: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 교원 임용 시 지역적 우선 배치를 통해 지역의 교육격차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지역기반 교원 양성 시스템 구축하여 지방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기반 교원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원을 양성하고, 지역 내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정책적 유연성 확보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중앙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필요
- 유연한 교육정책 운영을 위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함
 -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과 지역 간 원격교육 네트워크 구축

4. 저출생 관련 해외 (교육)정책 및 개혁 사례

1) 핀란드

(1) 개요

- 핀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PISA 평가에서 읽기·수학·과학 분야에서 2000년대 초 연속 3번(2000년, 2003년, 2006년) 1위를 차지하며 이상적인 교육 모델로 주목
- 핀란드 교육의 가치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보트를 탄 아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설명되듯이 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후쿠다 세이지, 핀란드 교육의 성공)
- 2010년 이후 PISA 순위는 점차 하락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성공적 교육모델로 전세계에서 주목
- 핀란드의 교육시스템은 전주기 학습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음.
 -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학생을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
 - 교육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간주하고 전주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
- 핀란드의 저출생 현상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는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복지를 통한 사회적 안정이 목표
 - 생애주기 동안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학습 시기별 필요한 학습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저출생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타겟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
 - 핀란드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 유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정책도 반영

(2) 교육정책 및 혁신 사례

■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Right to Learn, RTL)

-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 Right to Learn (RtL)은 핀란드 정부가 2020년에 발표한 교육 형평성 및 질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산 삭감 이후 발생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
 - 핀란드의 학업 성과가 하락하고 사회경제적 격차 및 이민자 학생들의 성과 격차가 커지자 정부는 교육의 형평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음. RtL은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목표
- 포괄적 학교 교육에서의 학습 성과와 형평성 강화
 - RtL은 포괄적 학교 교육에서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간 자원 배분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추진
 - 이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과 이민자 배경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간 학습성과 격차 완화에 기여
- 재정적 형평성 강화
 - RtL은 학교 및 ECEC 기관에 재정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 교육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가 목표
 - 필요 기반 자금 지원 메커니즘(needs-based funding mechanism)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학교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이를 통해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
- 사회적 격차 감소와 학교 분리 문제 해결
 - RtL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학교 간 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이민자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여 학교 내외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습 기회를 갖도록 사회적 통합을 촉진

■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접근법

- 주요 학생들을 유사한 특성의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서열화 하기 위한 평가를 지양
 -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있을 때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1985년 국가적 차원에서 학력별 반편성을 전면 중지
 - 학업 성취 차이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동일한 학습 집단 안에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

○ 3단계 지원 모델(Three-tiered Support Model)

- 학생을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으로 나누지 않고 일반 지원(general support), 집중 지원(intensified support), 특수 지원(special support)의 3단계로 교육을 실시
- 모든 학생을 동일한 관점에 두되 각 학생들의 학습 어려움 및 학습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 학습을 지원
- (모듈식 교육과정) 후기 중등학교를 무학년제로 바꾸어 학년별 교육과정이 아닌 각 단원 별로 나누어 설계된 모듈식 교육과정을 운영
- 학생들은 강의 커리큘럼을 보고 자신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계획

■ 청년 고용보장 제도(Youth Guarantee, YG)

○ 핀란드 재정부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남성의 실업과 저출산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

- 2008년 이후 25~34세 남성의 고용률은 87%에서 80% 이하로 감소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출산율 감소와 일치(Helsinki Times, 2018, 4월 10일).
-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계하여 청년 고용보장 제도를 도입

○ Youth Guarantee (YG)는 2013년에 공식 도입된 제도로 25세 이하의 청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교육, 또는 훈련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 2005년부터 시행된 사회 보장 제도를 기반으로 교육 보장과 결합하여 발전하였으며 2014년에 실행계획(Youth Guarantee Implementation Plan)을 발표

○ 원스톱 지원센터(One-Stop Guidance Centres, Ohjaamo)

- YG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2015년에 도입된 원스톱 지원센터 ‘오야모(Ohjaamo)’로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침을 제공하고 여러 부처와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실업과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 보장된 기회 제공

- YG는 25세 이하의 모든 청년과 최근에 학업을 마친 30세 이하의 졸업생들에게 3개월 이내에 취업, 교육, 또는 훈련 기회를 보장
- EU 권고안에서 제시된 4개월 기준보다 빠른 시간 안에 기회를 제공하며, 2018년

기준, 15세~24세 청년들 중 63.4%의 NEET를 지원하였는데 이 비율은 EU 평균인 38.9%보다 높은 반면 2017년에 비해 3.1%포인트 감소한 수치

○ 개인 맞춤형 지원

- YG는 청년들에게 개인 맞춤형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취약 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청년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NEET 비율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
- 핀란드 정부는 YG 이행을 위해 2018-2019년 기간 동안 4,500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청년들의 취업과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예방적, 사후적 조치 시행

■ 전문성 높은 교사 양성

- 핀란드에서는 1979년 이후 초중등 교사 양성이 석사학위 수준으로 개편되었고,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종합대학에서 통합적으로 양성하여 종합대학 내에 있는 여러 단과대학과 교육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
-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들로 하여금 인지과학 및 아동 발달에 대해 철저히 교육
 -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 준비과정에서 핵심교과인 읽기소양, 과학, 수학은 필수적 역량
 -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 교사 양성 시 ‘연구기반 교사교육(research-based teacher education)’ 모형에 기반하여 교사의 연구와 조사능력을 함양을 강조
 - 특히, 이론과 현장 실천 간의 조화에 역점을 둔 연구를 강조하여 내용(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및 현장 맥락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연구 역량 함양을 강조
- 핀란드 교사들은 각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낙오자 없는 교육을 수행
- 교사 간 협업, 학생에 대한 통합적 교육 제공, 학생과 지역사회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 공유 등을 강조하여 사회적 책무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 강조

■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한 이민자 교육정책

- 핀란드는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민자 유입을 적극 실행하였고,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긍정적 차별 정책을 통해 이주 아동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적 지원 제공

- (이주아동 관련 법 제도) 2009년 준비교육 지침 발표하여(핀란드 기본교육법 (628/1998)에 근거) 6~10세는 최소 900시간, 10세 이상은 최소 1,000시간의 준비 교육을 제공하고, 준비교육 중에도 동일한 교육 수준에 도달하면 기본교육으로 전환 가능
- 동등한 교육권 보장: 핀란드 평등법에 따른 무상교육 제공
- 모국어 교육 강조: 이민 학생들의 모국어 능력과 문화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 개인맞춤 학습계획: 이주 아동의 배경에 따른 개별 학습계획 활용
- 상담 및 지원 제공: 기본교육 전환을 위한 상담 세션 및 학부모 정보 제공
- 긍정적 차별 정책: 핀란드에 이주한 지 4년 이하의 이민 학생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 (1인당 최대 1,000유로)

■ 저출생 시대 교육혁신 사례로서의 시사점

- 통합교육 접근법에 따른 과도한 경쟁적 학습환경 지양
 - 학생들을 배경, 특성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서열화 평가를 지양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지양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 핀란드의 3단계 지원 모델(일반 지원, 집중 지원, 특수 지원)을 통한 맞춤형 학습 계획은 각 학생의 학습 능력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여 단 한명의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 핀란드의 모듈식 교육과정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저출생 시대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각 학생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여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인재로 양성시키는데 기여 가능
- 초중등교육-고등교육-취업 연계 강화
 - 핀란드의 전주기 학습 지원은 학생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과 향후 진로의 연계가 강화 전략 필요
 -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사회에서 활용하고, 경제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저출생 현상 완화에 기여

○ 교사 전문성 강화 및 자율권 부여 중요성

- 핀란드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인지과학, 아동 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받음.
- 이를 통해 교사 전문성이 강화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모든 학생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성공적인 학습 방식과 경험을 축적
- 이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효과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가능
- 교사 간 협업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공유

○ 포용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사회 통합 도모

- 모국어 교육 강화와 같은 이민자 학생 지원 정책은 이민자들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학생의 배경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핀란드 사회에 통합되도록 지원.
-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사회 통합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다문화 아동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2) 캐나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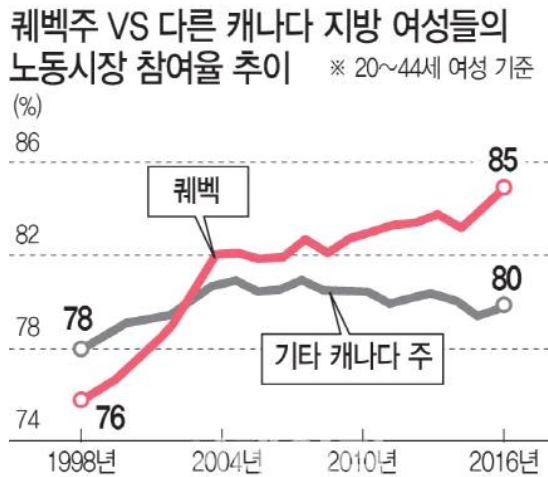
- 캐나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
- 이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정책 방향이며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

(2) 교육정책 및 혁신 사례

■ 퀘벡의 보편적 유아 보육 정책(Quebec's Universal day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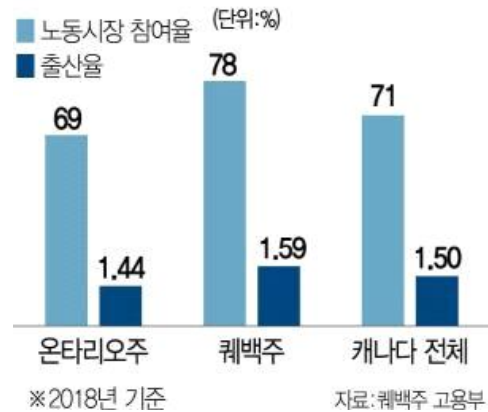
- (초저비용 공보육 정책) 퀘벡의 보편적 유아 보육 정책(Educational Childcare Act)은 1997년에 도입된 "\$5-a-day childcare program"으로 시작되었으며,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루 5달러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
- 여성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정책 시행 20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

[그림 19] 퀘백주 vs 다른 캐나다 지방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



자료 : 캐나다 통계청 (2017), 퀘백주 고용부(2018)

[그림 20] 3세 이하 자녀를 둔 퀘백주 vs 다른
캐나다 지방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및 출산율
3세 이하 자녀를 둔 캐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및 출산율



- (캐나다 1일 10달러 보육) 연방 정부는 이러한 퀘백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ELCC 프로그램(Early Learning and Child Care)을 설계하고 전국적으로 보육비를 하루 평균 10달러(\$10-a-day childcare)로 낮추는 정책을 도입(Baker, Gruber, & Milligan, 2005; People for Education, 2024)

○ 퀘백의 보편적 보육 정책은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을 확장하여 실시

- 1997년에는 4세 아동, 1998년에는 3세 아동, 1999년에는 2세 아동, 2000년에는 1세 아동까지 포함하여 전 연령의 유아에게 적용
- 이를 통해 퀘백은 4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Baker, Gruber, & Milligan, 2005)

○ 퀘백의 보육 서비스 유형은 보육의 형태, 운영 방식,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주요 형태로 구분(Eric, 2022; People for Education, 2024).

- CPE(Centres de la petite enfance), 비영리 보육 센터: 부모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관리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 아래 높은 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퀘백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2024년 기준, \$8.70)을 부담
- 가정 기반 보육(Home-based daycare): 소규모 가정 기반의 보육으로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루 8.70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나 CPE보다 서비스 품질이 비일관적
- 민간 보육(Private daycare): 정부 보조 없이 운영되는 영리 목적의 보육 서비스로 부모들이 전액 비용을 부담. 하루에 30달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며 서비스 품질

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

■ 지속가능한 교육비 지원 정책: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

- CESG는 자녀의 고등 교육비를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자금 저축을 장려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Government of Canada, 2021)
 - (매칭 기금 지원) 부모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 자녀가 만 17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년 저축액의 최대 20%를 매칭 기금으로 지원하며, 연간 최대 500달러까지 제공
 - CESG는 자녀 한 명당 \$7,200까지 제공하나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경우, 매년 \$50~\$100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저축은 등록교육저축계좌(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를 통해 관리되며, 자녀의 고등교육 등록 시 사용 가능
- CESG는 교육비 부담 완화로 부모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투자 의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
- 보편적 보육정책과 더불어 고등교육 자금 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캐나다는 부모가 출산과 양육 전반에 걸쳐 재정적 안정을 갖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 지방정부 중심 이민프로그램으로 저출생·지방소멸 동시 해결 및 포용적 교육정책 실시

- 캐나다 정부는 1999년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s, PNP)을 도입해 이민자들의 중소도시 및 비도시 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추진
 - PNP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일정 규모 이민자 수를 배분하고, 주정부가 필요에 따라 선호하는 이민자의 직종, 선발 기준, 자격 요건 등을 정해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제도
 - 이를 통해 중소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
 - 따라서, 이민자들이 지방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민자 지원 정책을 실시
-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
 - 높은 이민자 유입률로 인해 영어와 불어 외 제3의 언어 사용자의 증가 확인(The Star, 2017). 이를 반영해 이민가정 자녀의 모국어를 '계승어'로 정의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 지원 실행

- 계승어 교육은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사회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데, 보통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제2외국어, 혹은 외국어 교과로 분류되어 정식으로 학점 이수 가능
-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등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원주민과 이민자 간 공존과 조화를 지원

○ 원주민-이민자 학생 간 학업 성취도 격차 줄이기와 고교 졸업률 향상 추진

- 포용적 교육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온타리오 주의 교육정책이 대표적
- (초등 문해력 및 산술 능력 개발) 모든 아동 프로그램(Every Child Program)을 실시하여 유치원-초등 3년까지의 학급 규모 축소(20명 이하), 교사 연수, 읽기 · 쓰기 · 수학 프로그램 160개 개발, 문해력 · 산수 · 음악 · 미술 · 체육 등에 전문교사 2,000명 배정을 통해 학습성취도 격차 해소 추진
- (중등 학생 성공 프로그램 운영) 학생 성공 프로그램(Student Success Program)을 통해 리더십 역량 개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파악 및 교사 연결, 사업체 및 지역 사회 협력 프로그램 · 대학 과정 및 연습 훈련 과정 제공

■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과 교육의 질 개선으로 학령인구 유입 유도

○ 앨버타 주는 학교개선계획(Alberta Initiative for School Improvement, AISI)을 통해 주정부가 학교 현장 연구를 15년간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 ①수직적 시스템(전반적인 교육 조정은 AISI 교육협력자 운영위원회가 담당), ②수평적 시스템(사업 시행학교를 district별로 묶어 각 지구별 소통 및 협력 강화), ③방사형 시스템(교육 결과물, 자료 등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의 양방향 과정을 혼합 및 종합하여 전파), ④시간적 시스템(중장기적 교육개혁 관점에 집중)으로 운영
- (학교 주도 개선 프로젝트) 각 학교가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설계한 개선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정
- (맞춤형 교육) 각 학교가 지역적 필요와 학업 격차를 고려하여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설계
- (지역 사회와의 협력) 학부모,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 학습 환경 조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지역 전문가와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교육 과정 운영
-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매력도를 높여 학

령인구 유입을 의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정책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통·폐합을 시행하면서도 교육 접근성과 지역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집중
 - 학교 통·폐합 정책은 각 주의 지역적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
 - 이러한 정책은 학교 자원을 최적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발전
- (온타리오 주) 학생 수에 기반한 예산 지원 체계를 채택하여 등록률 감소가 심각한 학교는 통합 또는 폐교 대상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Pupil Accommodation Review Guideline(학생 수용 검토 지침)을 통해 폐교 절차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
- (매니토바 주) 공립학교법에 폐교 중단(moratorium on closing schools) 조항을 추가하여 교육부 장관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폐교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의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 사회 중심 학습센터로 전환하고, Neighborhoods of Learning Program(학습 중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
- (서스캐처원 주) SchoolPLUS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를 다목적 커뮤니티 허브로 전환하여 공공보건 서비스, 직업관련 교육, 공공도서관, 예술 및 문맹퇴치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활동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강화

■ 저출생 시대 교육혁신 사례로서의 시사점

- 보편적 보육정책 도입으로 여성 노동 참여 및 출산율 제고
 - 퀘벡 사례에서 저비용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율 상승과 출산율 유지 효과를 확인
 - 연령별 보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수혜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접근 필요
-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으로 학령인구 감소 문제 대응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
 - 앨버타 주의 AISI 사례처럼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 필요를 반영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습 환경 개선 가능

○ 학교 통·폐합 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학습, 복지, 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서스캐처원 주 사례처럼 학교를 다목적 커뮤니티 허브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매력도를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 장기적 교육 자금 마련 지원

- CESG와 같은 매칭 기금을 통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
-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

○ 포괄적 교육 접근성과 질 개선

- 학생 중심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연수 확대
- 온타리오 주의 "모든 아동 프로그램"처럼 학급 규모 축소와 전문 교사 배치를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

3) 일본

(1) 개요

- 일본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부터 엔젤 플랜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정책과 법률을 도입하였고, 보육, 교육 지원, 일과 양육의 양립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전개

〈표 14〉 일본정부의 과거 저출산 대책 현황

시기	주요 저출산 관련 정책	비고
1994년 12월	엔젤 플랜,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1995~99)	관계부처 합의
1994년 12월	저출산대책추진 기본방침, 신엔젤플랜(2000~04)	관계부처 합의
2001년 7월	일과 양육 양립 지원 등의 방침	각의 결정
2003년 9월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2003년 9월 시행),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2003년 7월부터 단계 시행)	법률
2004년 6월	저출산사회대책 대강	각의 결정
2005년 4월	지방공공단체·기업 등 행동계획 책정·실시(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에 의거)	지자체 행동계획
2010년 1월	어린이·양육비전	각의 결정

2012년 8월	어린이·양육지원법 등 어린이·양육 관련 3	법률
2014년 12월	장기비전·종합전략	각의 결정
2015년 3월	저출산사회대책 대강	각의 결정
2015년 4월	차세대양육지원대책 추진법 연장(2015. 4~2025. 3)	법률
2016년 4월	어린이·양육지원법 개정(시행)	법률
2016년 6월	일본1억 총활약플랜	각의 결정
2018년 4월	어린이·양육지원법 개정(시행)	법률
2018년 7월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공포)	법률
2019년 10월	어린이·양육지원법 개정(시행)	법률
2020년 4월	대학 등에서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법률
2019년 12월	장기비전·종합전략(제2기)	각의 결정
2020년 5월	저출산사회대책 대강	각의 결정
2020년 12월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 방침	각의 결정
2021년 5월	어린이·양육지원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2022. 4 시행)	법률
2021년 12월	어린이정책의 새로운 추진체제에 관한 기본방침 (2023년 어린이가정청 설치 포함)	각의 결정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재인용(2023)

- 모든 학생이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
- 일본은 최근 COVID-19 팬데믹 이후 교육문제에 대응하는 접근에 집중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환경 강화 정책 도입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개혁을 통해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협력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 저출생 및 인구 감소 현상 해결 추진

(2) 교육정책 및 혁신 사례

■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 및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무상화 추진

-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저출산 대책을 담은 ‘어린이·육아 지원법’을 2024년 초에 승인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소득 한도가 사라지고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여 교육비 지원
 - 현재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것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여 0~2세는 1인당 월 1만 5000엔(약 13만원),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월 3만엔(약 27만원) 지급

- (3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 등록금 무상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 장려, 학령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교육의 기회 균등성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 실시 예정
- 기존 시행되었던 저소득(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자녀의 대학 수업료 감면 및 장학금 지원을 중산층(연간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였으나 2025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화 추진

■ Leave No One Behind (Isha & Wibawarta, 2023; MEXT, 2020a)

- 'Leave No One Behind (LNOB)'는 UN이 2016년에 채택한 접근 방식으로 일본은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LNOB 방식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에 주력
- 초중등 GIGA (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 School Program
 - 학생들에게 1인 1대 컴퓨터와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ICT 학습 환경 개선 및 언제 어디서든 학습 환경 제공
 -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력을 통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행 상황을 분석 및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 등을 통해 학습 효과 극대화
 -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통신비 지원과 함께 디지털 기기 제공을 통해 교육 격차 감소에 집중
- 고등교육에서의 ICT 환경 지원
 - ICT 인프라 개선: 고등 교육 분야에서는 원격 학습을 확대하기 위한 ICT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대학에 온라인 학습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고등 교육 기관들은 라인 수업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 일본 정부는 고등 교육 기관이 원격 학습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카메라, 오디오 장비 등)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MEXT, 2020b)

- ESD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UNESCO가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와 태도, 행동을 교육에 통합하는 국제적인 교육 방향으로 일본은 ESD의 선도국이며 ESD를 국가적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학생들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ESD는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적용
- 학생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이해 환경, 평화, 문화 다양성, 인권 등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여 교육 과정 개편
- 지속가능성을 교육 체계에 통합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발전을 도모
- 학교-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교육 주제로 제공하고 학습자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ESD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시민사회, 기업,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
-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제공
- UNESCO와 협력하여 글로벌 ESD 네트워크 구축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모범 사례 공유 및 확산
- 글로벌 관점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경제적 안정성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길러 미래역량 강화에 기여

■ 국내 유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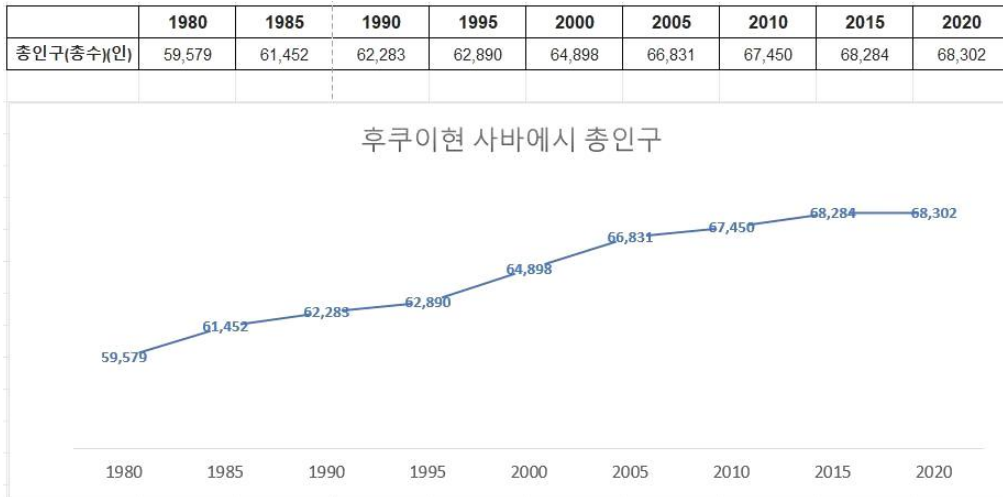
- 일부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소규모 교육 등의 특색을 살려 도심 학생을 지방 학교로 유치하는 ‘국내유학(또는 지방유학)’을 적극적으로 실시(김지영, 2018)
- 시마네 현은 국내유학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2010년 54명이던 외부 입학생이 2017년에는 183명으로 세 배 증가하여 모범 사례로 평가
- 일본 28개 도도부현에서 약 200개 공립 고등학교가 국내유학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유학을 경험한 학생 중 약 40%는 지역사회와 장기적 관계를 유지 선호
- 국내유학을 경험한 학생의 3/4이 개인적 성장을 실감

■ ‘이토록 멋진 마을’ 후쿠이현 사례(박성우, 2019; Fukui Prefectural Government, 2024)

- 후쿠이현은 초중학교 학력평가 1위, 대졸 취업률 1위, 정규직 사원 비율 1위, 노인 및 아동 빈곤율과 실업률 최하위 지역이며, 일본 내에서도 비교적 출산율이 높고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 일본 최고의 행복도시로 평가
- 2015년 국제조사에 따르면 사바에시는 총인구 6만 8284명으로 2010년도에 비해

1.2%증가했다. 2020년에는 6만8302명으로 느는 등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일본의 현황과 대비

〈표 15〉 후쿠이현 사바에시 총인구



자료 : 사바에시 (2022)

- 지역 커뮤니티와 교육을 결합하여 지방소멸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한 대표적 사례
 - 후쿠이현에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 학교-부모-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단순히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는 교육 수행
 - 후쿠이현 지역이 보유한 제조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 R&D를 강화와 학생들의 지역 취업 및 창업기회 무한제공
- 후쿠이현의 교육을 관찰하기 위해 일본 전국과 해외에서 연간 2,000명 이상의 교사가 방문
 - (교과교실제) 학년 및 반으로 교실을 구분된 교실에서 전 교과 수업을 받는 방식이 아닌 '수학의 교실' 등 모든 과목을 교실을 따로 만들어 학생들이 찾아가서 배우는 교과중심의 교육방식을 운영
 - (무학년제) 학년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하나의 단위(클러스터)로 묶어 학습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학습 환경을 제공
 - (벽이 없는 교실) 교실 사이의 벽을 없애 학생들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의사소통 능력, 인간관계 형성 능력, 협업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의 신장을 유도

- (학습거점방식을 통한 교사전문성 제고) 교사에게 교직대학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들은 교직대학원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서 교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도 전문성 제고 기회 제공
- (교사 네트워크 강화) 교사들 간 소통의 장벽이 없이 교육사례와 의견을 교환하는 '원형 탁자' 모델을 개발해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 제공

■ 저출생 시대 교육혁신 사례로서의 시사점

○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 접근성 강화

- 일본은 아동수당 확대와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계층의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 이러한 정책은 부모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며, 교육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

○ 디지털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 GIGA School Program을 통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제공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 확대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교육 소외 지역에서도 고품질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도 원격 학습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

○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미래 역량 강화

-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와 행동을 배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
- ESD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지원

○ 지역 특화 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 후쿠이현 사례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학습과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취업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이러한 교육 모델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매력을 높여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와 교육의 지속 가능성 증진에 기여

○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조성

- 무학년제, 교과교실제, 벽이 없는 교실 등은 학생 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증진하

며, 다양한 학습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학생 주도 학습 환경은 개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인구 감소 시대에도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데 기여

○ 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후쿠이현의 교직대학원 교육 기회 제공, 교직대학원 교수의 학교 방문 및 교사지원 사례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모범적 모델로 작용
- 교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는 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교사 간 시너지 효과 창출

○ 국내 유학을 통한 도심-지방 인구 균형 유도

- 도심 학생을 지방 학교로 유치하고, 학생과 지역 간 장기적 관계 형성을 유도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
- 국내 유학은 지방 학교의 매력을 높이고 도심과 지방 간 인구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며, 지방 교육과 지역사회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지속 가능 모델로 작용

4) 싱가포르

(1) 개요

- 싱가포르는 2022년도 사상 최저 수준인 1.05명의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기록하며 저출생 현상이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로 대두
- 싱가포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재정적 인센티브, 양육과 일 병행 지원, 연애 및 결혼 장려라는 세 개의 큰 틀 안에서 시행
 - 그 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베이비 보너스와 아이 발달 계좌를 자동으로 발급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 그 외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청약 우선권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시
- 싱가포르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원 양성에 집중
 -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노동력 강화를 위한 직능 개발 훈련 제시
 - 외국인 인력 유입 확대 정책도 병행하여 우수하고 능력있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업 성취도 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들에게 영어와 더불어 모국어 교육

을 지원(황에스더, 2018).

(2) 교육정책 및 혁신 사례

■ 양육비 지원

-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싱가포르 정부는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로 불리는 장려금을 지급하며, 첫째와 둘째에게는 총 8,000달러, 셋째 자녀 이상은 총 10,000달러가 출산장려금으로 지급

〈표 16〉 싱가포르 정부의 베이비 보너스 총 지급액 (단위: 싱가포르 달러)

자녀 수	2012.8.26.~2014.12.31 출생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첫째와 둘째	\$6,000 ⁸⁾	\$8,000
셋째와 넷째	\$8,000	\$10,000
다섯째 이후	\$0	\$10,000

자료 :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2022)

-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이 발달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CDA에 정부가 3,000달러를 초기 발달 자금으로 지급하고, 이 계좌에 부모가 1달러를 넣을 때 정부에서 1달러를 넣어주는 매칭 형태로 지원금 제공

〈표 17〉 싱가포르 정부의 아이 발달 계좌(CDA) (단위: 싱가포르 달러)

자녀	초기발달자금	정부 매칭	총 정부 지원 금액
첫째	\$3,000	최대 \$3,000	최대 \$6,000
둘째	\$3,000	최대 \$6,000	최대 \$9,000
셋째	\$3,000	최대 \$9,000	최대 \$12,000
넷째	\$3,000	최대 \$9,000	최대 \$12,000
다섯째 이후	\$3,000	최대 \$15,000	최대 \$18,000

자료 :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2022),

■ 이민자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모국어 학습(Learning Mother Tongue Language) 강화(황에스더, 2018;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c; 2023d)

- 싱가포르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이 정책은 1966년부터 시행되어 학생들이 언어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유도
- 싱가포르 교육부는 유아기부터의 모국어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언어 노출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언어에 대한 흥미

를 키우고 학습 능력을 향상

- 모든 싱가포르 학생들은 모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는 것이 의무이며,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가 공식 모국어로 제공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민족적 배경에 따라 해당 언어를 학습
 -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4가지 핵심 역량(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강화하며 고급 모국어 학습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 개발
 - 다만, 해외에 장기간 거주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모국어 학습 면제 가능하며 이때 중학교 입학시험인 PSLE나 중학교 졸업자격 시험인 GCE O-Level 시험에서 모국어 대신 해당 언어로 평가

■ 삶을 위한 학습(Learn for Life)(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18; 2022; 2023a; 2023b)

- 싱가포르의 ‘Learn for Life’는 시험 성적에 치중하는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개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신장시키는데 집중
- ‘Learn for Life’ 교육개혁에서는 평가 방식 다양화, 중간고사 폐지 등 학생들이 시험 부담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2019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모든 시험과 가중 평가를 폐지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점진적으로 중간고사를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성적에 대한 부담 경감
 - 상호작용, 과제, 퀴즈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시험 대신 수업 중에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 21세기 필수 역량 함양을 강조
- 전과목 기반 밴딩 시스템(Full Subject-Based Banding, SBB) 운영
 - SBB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기 다른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이는 학생 개인의 학습 필요와 강점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업 성과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동시에 강화

■ 평생교육지원정책 SkillsFuture(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인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제시하고 국민의 직무 역량 향상 및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 직업훈련 시스템을 고안

〈표 18〉 SkillsFuture 주요 프로그램

학생	사회초년생	경력자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ECG)		
초·중·고, 직업학교(ITE), 전문학교(Polytechnic),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사들이 진로 상담을 제공		
Individual Learning Portfolio(ILP)		
교육, 직업훈련, 경력 개발 안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제공		
Enhanced Internships	SkillsFuture Credit	
직업학교와 전문학교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기술과 소프트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2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이 대학을 비롯해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 역량 강화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S\$500을 지원하고, 추후 주기적으로 금액을 충전해주는 제도	
Young Talent Programme(YTP)	Earn and Learn Programme(ELP)	Skills-Based Modular Courses
국제적 소양을 갖춘 전문 산업인 육성을 위해 대학생들과 전문학교(Polytechnic)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획 지원	직업학교와 전문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을 전공 관련 기업에 매칭시켜 12~18개월 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업이나 직무 전환을 돕는 단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SkillsFuture Study Awards
		싱가포르 미래 경제를 선도할 유망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장학금 (S\$5,000)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매년 최대 2천 건 지원
		Skills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
		40세 이상의 경력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비를 90% 보조
		SkillsFuture Fellowships
		중점 산업 분야 기술을 연마하고자 하는 경력자들에게 S\$10,000의 장학금을 제공
		P-Max
		경력사원·관리·간부직 구직자를 중소 기업에 매칭시키는 프로그램
		SkillsFuture Mentors
		중소기업과 멘토를 매칭해 경험 및 노하우 전수
		- 그 외 고속연 인력 대상 경력개발 지원(Sectoral Manpower Plans), 잠재력 높은 인재개발을 위해 보조금 지급(Skills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 등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 SkillsFuture는 SkillsFuture Council이 총괄하고 인력부(MOM), 교육부(MOE), 인

력 개발청(WDA)이 주무부처로 참여하여 새로운 정부 산하기관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지원

- 싱가포르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실무 중심의 기술을 가진 노동력 육성을 목표로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수십 년의 경력 근로자까지 개인에 맞는 평생 직업훈련을 제공
- 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 교육 및 훈련 강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춘 실질적인 기술 습득 촉진, 기업과 협력하여 직장 내 학습 및 업스킬링(재교육) 촉진 추구

■ 저출생 시대 교육혁신 사례로서의 시사점

○ 저출생 극복과 인적자원 육성 동시 달성

- 베이비 보너스와 아이 발달 계좌(CDA)를 통한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경감하는 동시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SkillsFuture)을 통한 노동력 질적 향상, 국가 경쟁력 유지

○ 다문화 사회를 위한 포용적 교육 모델

-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을 통한 다문화 학생의 사회 통합과 정체성 유지 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문화 인재 양성

○ 시험 중심 교육에서 평생 학습으로의 전환

- 성적 중심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혁신하고 평가 방식 다양화와 중간고사 폐지를 통한 학업 부담 완화
- 전과목 기반 밴딩 시스템(SBB)을 통한 맞춤형 학습 제공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강화
- 시험 성적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시경쟁 완화와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데 모범사례로 참고 가능

○ 사회 역동성 강화와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

- SkillsFuture를 통한 연령별 맞춤형 직무 역량 개발 및 기술 습득 지원
- 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교육과 기업 협력을 통한 노동 시장 적응력 제고

○ 교육과 경제 정책의 긴밀한 연계

- 교육 정책과 경제 목표를 연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구현
- 교육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

5) 시사점 요약

○ 국가별 시사점

국가	시사점
핀란드	- 평생학습과 형평성 강화: 성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 제공. 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 가능 - 통합교육 접근: 모든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학습 집단 안에서 학습할 기회 제공하고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듈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통합적 접근법은 경쟁보다 학생 흥미와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청년 고용 지원: 청년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 계층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 교사 전문성 강화: 전공 과목 외 기초 소양에 대한 역량 중시, 인지과학 및 아동발달에 대한 교육 실시, 연구과 조사능력 강조를 통해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의 역량의 중요성 강조 -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을 누구나 동일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학습 격차에 따른 지원을 제공
캐나다	- 유아 보육 정책: 저렴한 보육 서비스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 또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여성 노동 참여 제고 -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 필요를 반영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습 환경 개선 - 학교 통·폐합 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학습, 복지, 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폐시설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활용 활성화 - 장기적 교육 자금 마련 지원: 정부 매칭 기금을 통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 포괄적 교육 접근성과 질 개선: 학생 중심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초·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연수 확대
일본	-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 접근성 강화: 아동수당 확대와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정책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계층의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 디지털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디지털 학습 환경과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인재 육성을 도모

국가	시사점
	- 지역 특화 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후쿠이현 사례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학습과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취업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국내 유학을 통한 도심-지방 인구 균형 유도: 도심 학생을 지방 학교로 유치하고, 학생과 지역 간 장기적 관계 형성을 유도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
싱가포르	- 저출생 극복과 인적자원 육성 동시 달성: 베이비 보너스와 아이 발달 계좌(CDA)를 통한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경감하는 동시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SkillsFuture)을 통한 노동력 질적 향상, 국가 경쟁력 유지 - 다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사회적 통합: 학생들이 모국어 학습을 통해 다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 시사점을 제공 - 입시 경쟁 완화와 교육 경로 다양화: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교육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사회회 역동성 강화와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 SkillsFuture를 통한 연령별 맞춤형 직무 역량 개발 및 기술 습득 지원

○ 한국사회 이슈별 시사점

이슈	시사점
과열된 입시 경쟁	■ 핀란드 ✓ 통합교육 접근법: 서열화 평가 지양, 모듈식 교육과 맞춤형 학습으로 경쟁 대신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집중 ✓ 교사 자율권: 교사의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로 학생 개별화 학습 가능 ■ 싱가포르 ✓ 시험 중심 교육에서 평생 학습으로 전환: PSLE 점수 단순화, 중간고사 폐지, 창의적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SkillsFuture: 학업 중심에서 기술 중심 경로로 다변화
수도권 인구 집중	■ 일본 ✓ 국내 유학제도: 도심 학생을 지방 학교로 유치해 지방 인구 활성화 및 교육 격차 해소 ✓ 지역 특화 교육: 후쿠이현의 체험형 학습과 산학 협력으로 지역 정착 유도 ■ 핀란드 ✓ 지역 기반 교육 시스템: 수도권과 지방 간 동일한 고품질 교육 제공 ✓ 지방 정착 장려: 지역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인구 균형 유지 ■ 캐나다

이슈	시사점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 ✓ 앨버타 주의 AISI 사례처럼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 필요를 반영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습 환경 개선 가능
교육 기회 불평등 및 격차	▪ 캐나다 ✓ 보편적 보육정책: 퀘벡의 저비용 보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을 상승 ✓ 지역 맞춤형 정책: AISI와 같은 학교 주도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협력 ▪ 일본 ✓ GIGA School Program: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및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 다문화 학생 지원: 이민자 맞춤형 교육으로 포용적 사회 실현 ▪ 핀란드 ✓ 3단계 지원 모델: 학습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 기회 보장
정서적 불안 및 전인교육 필요	▪ 핀란드 ✓ 포용적 교육시스템: 이민자 학생을 위한 모국어 교육 강화로 사회 통합 및 정서적 안정 ✓ 전주기 학습 지원: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 시스템으로 사회적 안정성 확보 ▪ 싱가포르 ✓ 학생 중심 교육: 시험 부담 완화와 창의적 학습 환경 제공 ✓ 탄력근무제(FWA):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 및 가족 중심 환경 조성
교육과 경제 · 사회 · 환경 연계 부족	▪ 싱가포르 ✓ SkillsFuture: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국가 경쟁력 및 경제 지속 가능성 확보 ✓ 경제 목표와 교육 연계: 교육을 통해 산업 수요에 맞춘 기술 인력을 배출 ▪ 캐나다 ✓ CESG 매칭 기금: 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학교 통합-지역사회 연계: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전환하여 경제 활성화 ▪ 일본 ✓ ESD와 지속 가능성: 교육과 환경, 지역사회 발전을 결합하여 지방 경제와 교육 지속 가능성 강화

5. 미래 교육의 방향성

1) CLA 분석

(1) 구조적 원인(시스템적 요인) 차원의 교육정책

■ 공공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및 질적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역별 국공립 기관을 꾸준히 확충하고, 질 높은 교사 지원 및 시설 개선 추진
- 저출생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보육 시설을 ‘필수 사회기반시설(공공재)’로서 운영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 온종일 돌봄·방과후학교 강화

- 초등 저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습 및 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예: 방과후학교와 지자체 돌봄센터의 통합 운영)
-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풍부한 교육·놀이·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시설 확대

■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공교육 질 제고

- 교사의 전문성 강화(교사 연수, 협력교사 제도), 교과과정 혁신(탐구·프로젝트 중심 수업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 대체 효과 창출
- 학교에서 ‘맞춤형 학습 지원(기초 학력 보조, 심화 학습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환경 조성

○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역별·소득별 맞춤형 장학금(초·중·고 무상교육, 교재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확대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및 지방대 활성화 정책과 연계

■ 부모 역량 지원 및 가족친화적 제도

○ 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예비부모·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 재정 관리’, ‘육아 심리’, ‘공동 육아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가칭) 부모학교’ 도입으로, 지역마다 육아·가정교육에 접근성 제고

○ 교사-학부모-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학교 내 학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한 부모 쉼터 및 육아 커뮤니티 제공
- 자녀 교육 및 돌봄을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예: 가족친화인증 확대, 기업 연계 돌봄 프로젝트)

(2) 세계관(가치관) 차원의 교육정책

■ 다양성·포용성 교육 확대

○ 젠더 평등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 교육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젠더 평등,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일·가정 양립 사례 등을 다루도록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편
- “결혼=필수, 출산=의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

○ 사회적 돌봄과 공동체 의식 함양

-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는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공동체와 협업·연대하는 프로젝트 수업(지역봉사, 협동 프로젝트 등) 활성화
- 교육 과정 속에서 ‘공공성’, ‘연대’,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배치

■ ‘삶의 행복·성장’을 강조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 경쟁 중심에서 ‘전인적 성장’으로

- 무한 경쟁과 성취만을 강조하는 교육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체육·인문학 등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중시
- ‘더 좋은 대학 진학’이 아닌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진로·직업 교육으로의 전환(기업·대학·지역사회 멘토링 등)

○ 부모 역할 재정의

-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감이 아닌,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확산
- 교사 연수를 통해 ‘부모님과 관계 맺기’, ‘가정-학교 간 소통’ 등의 영역을 중점

학습하여, 가정의 부담이 학교·사회와 공유될 수 있는 문화 마련

■ 개인주의와 공동체 가치의 균형 잡기

○ 개인의 자유 vs. 공동체의 연결

- 교육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자율성, 창의성)를 존중하면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협동학습 등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가치 체험
- 자기 주도적 학습과 더불어 '관계 맺기' 역량(소통, 공감, 팀워크 등)도 필수 역량으로 교육

(3) 내러티브 차원의 교육정책

■ '가족'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다양한 서사 확산

○ 교육·미디어 협력 프로젝트

- 교육 현장(학교, 도서관 등)과 미디어(방송, 신문, SNS 등)가 협업하여, 결혼·출산·육아를 '비용(돈)'보다 '행복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영상·교재·캠페인 제작
- 부모나 자녀가 직접 '행복 스토리'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정부 지원 및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

○ '다자녀 = 희생'이라는 부정적 내러티브 해소

- 실제 다자녀 가정의 긍정적 경험담,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가족 문화 콘텐츠(뮤지컬, 연극, 에세이 공모전 등)를 지원
- 지역 축제나 박람회에서 다자녀 가족, 입양 가정, 한부모 가족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가족 서사'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

■ 생애주기별·체험형 콘텐츠 개발

○ 유·초등 대상: '함께 자라는 기쁨' 체험 교육

- 또래나 동생, 이웃과 함께 놀이·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동'과 '돌봄'이 주는 즐거움을 어릴 때부터 체득
- 동물 돌보기, 식물 재배, 공동체 놀이 등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

○ 청소년·청년 대상: '미래 가족 설계' 프로그램

-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의 실제 사례와 경험담을 공유(멘토-멘티 연결, 미니 강연, 주거·재정 설계 워크숍 등)
-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라는 가치에 대한 긍정적 내러티브를 만들고, 동시에 현실

적인 준비(예: 재무 설계, 주거 계획, 육아휴직 활용법 등) 정보를 제공

■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이야기

○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 지자체가 학교·지역 단체·주민 센터와 협업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 행사를 기획(가족 운동회, 축제, 문화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일’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부모가 된 사람들을 응원·도와주는 긍정적 서사가 확산되도록 유도

○ 공동육아 협동조합, 코워킹스페이스 활성화

- 부모가 함께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 친화적 코워킹스페이스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이러한 실천적 사례가 언론, SNS 등에서 적극 홍보됨으로써 ‘함께 양육하는 문화’ 서사를 정착

■ 결론 및 시사점

○ 구조적(시스템) 개선: 공공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부모 역량 및 재정 지원, 사교육비 부담 완화 같은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

○ 세계관(가치관) 전환: 결혼·출산을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개인·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행복’과 ‘성장의 기회’로 재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형성 필요

○ 내러티브 변화: ‘저출산 = 국가적 손실’, ‘결혼·출산 = 비용 부담’이라는 부정적 서사를 넘어, 가족과 육아가 만들어내는 긍정적 관계와 공동체적 가치 이야기의 확산 유도

※ 이 세 가지 축이 긴밀히 연동될 때, 저출생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데에 기여

○ 교육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문화와 시스템을 바꾸는 핵심 매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2) 기존 문헌 및 정책 분석

(1) 초등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고도화

○ (거버넌스) 학교-지자체-지역사회 협력체계 법제화

-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학교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을 분담하고, 민간·마을교

- 공동체(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
- 「초·중등교육법」 또는 별도 지침에 지자체와 학교의 돌봄 업무 분장과 공동운영 규정을 명시해 예산·인력 배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재정·인력) ‘늘봄학교’ 전담 운영비 지원
 - 초등돌봄교실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예체능, 진로활동 등) 운영비를 특교(특별교부금) 또는 지자체 매칭 형태로 확대
 - 전담 돌봄·방과후 코디네이터(정규직 또는 무기계약)를 학교당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 행정업무 부담 경감
 - 방과후 강사·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시급 인상·교육연수 제공 등)으로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품질 제고
- (프로그램) 맞춤형 방과후 교육과정 개발
 - 교육부 주도로 ‘방과후 공공 콘텐츠(온라인 플랫폼)’를 구축해, 창의·예체능·미래 역량(코딩, AI 등)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공유
 - 지역별 특색(농어촌·도시·문화·역사 등)을 반영한 프로젝트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 (예: 마을연계 생태교육, 지역기업 연계 진로체험 등)

(2) 유아교육 확대(유보통합) 실질적 추진

- (조직 개편) ‘유보통합 추진본부’ 신설
 - 교육부 내 별도 국(局) 단위 조직으로 유·보통합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기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보육기반과(3개 과)의 기능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이관
 -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정책(가족·보육·여성)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가칭)인구가족정책청’ 또는 ‘사회부’ 설립을 검토
- (현장 지원) 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통합
 - 시·도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기능을 일원화하거나, 물리적으로 ‘통합 거점 센터’로 묶어 유아교육·보육 통합지원
 - 시·군·구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동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가 복지부·교육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도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품질 관리) 교사 자격·평가체계 재설계
 - 유치원 정교사·보육교사 자격을 단일화하여, (가칭) ‘유아교육·보육 통합교사’ 양성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

- 통합된 평가(기관평가+보육품질평가) 모형을 개발해, 어린이집-유치원-유보통합기관에 동일 기준으로 평가·컨설팅을 제공

(3) 교원 정원관리·교원수급 체계 개선

○ (교원수급 산정) 지역 실정 반영 모델 고도화

- 교육부가 시·도별 정원을 배정할 때, 단순히 학생 수 구간만이 아니라 과밀학급 비율, 신도시 개발 계획, 농어촌 소규모학교 비율 등을 가중치로 반영
- 중·장기(5~10년) 교원수급 계획에 지역소멸 위험지수를 공식화해, 농어촌·벽지 학교 교원정원은 '기초정원(최소 운영 인력)'을 보장

○ (교원 역량) '다(多)교과 지도' 지원 체계

- 중등교원에게 2개 이상 교과를 복수 전공하거나, 1급 정교사 연수 시 다교과 지도를 위한 추가 과정 이수 시 추가 자격 부여
- 초·중등 복수자격을 제한적으로라도 인정(예: 통합운영학교 근무 희망자 대상), 소규모학교·벽지학교 교원 배치 유연성 확보

○ (특수지역 지원) 가산점·전문직 제도 연계

- 도서·벽지·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일정 기간 근무 시, 승진·전직(장학사·교육전문직) 가산점 폭을 상향 조정
- 특별근무수당, 숙소·주거환경 개선 등 교원 처우를 개선해 지방·벽지 근무 기피 해소

(4) 소규모학교·통합학교 운영 혁신

○ (통폐합 대신) '교육복합센터형' 소규모학교 활성화

- 통폐합 유도보다, 복합화(학교+도서관+문화·체육시설+복지시설)로 지역 커뮤니티 중심지 역할을 부여
- 유허교실을 지역 돌봄, 평생학습, 사회복지 시설로 전환해 학교 운영비를 보조하고, 지역민의 거점 시설로 활용
- 학생·교원·지역주민이 함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역상생학교' 모델(예: 농촌 체험학습장, 마을 공동체 사업 등)

○ (통합운영학교) 초·중·고 교과 연계 강화

- 지역·인구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은, 초·중, 중·고 통합학교 또는 12년 일관 통합운영학교 제도를 확대

- 이 경우 교원 자격(초등+중등) 혼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 마련,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 중등 교원이 초등 생활지도, 초등 교원이 중등 일부 과목을 협력·순회 지도가 가능토록 규정 보완

○ (인센티브) 통폐합 대신 지역주도학교 육성 지원

- 소규모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특성화학교'로 지정하여 재정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장학금 등)
- 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통·폐합 여부를 자율 결정하되, 유지·보완 시 충분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

(5) 교육·복지 연계 & 디지털 전환

○ (교육복지 융합) '학교복지 협력관' 배치

- 시·도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복지 협력관(복지전문 인력)을 배치해, 마을 돌봄, 청소년 상담, 정신건강 지원, 다문화학생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통합
-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교육 통합서비스(멘토링, 심리상담 등) 운영

○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 원격학습센터' 구축

-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규모학교 내 ICT·네트워크 시설 우선 지원
- 하나의 시·군·구에 '원격학습센터'를 세워, 희망 학생이 온라인 실시간 수업(전문 강사, 우수 교사)이나 AI 튜터링 활용
- 지자체가 ICT 장비 예산을 매칭하고, 지역 내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일부 무료·저비용 지원 추진

○ (데이터 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시스템

- 교육부가 AI 기반 학습이력 통합관리 시스템(K-에듀테크 플랫폼) 구축: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교과서, 학습자료, 평가 결과를 일괄 연동
- 교사는 학급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학생 학습 데이터(성취도, 흥미도, 취약 영역)를 실시간 파악해 차별화된 피드백을 제공

■ 결론 및 시사점

○ 학생 학습권 & 돌봄권 보장

- 늘봄학교, 유보통합, 지역복합시설화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교육 품질 및 돌봄 공백 최소화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 격차 완화

- 소규모학교 복합화, 지역 특화 교육·산학 연계, 디지털 원격학습센터 등으로 비수도권·농산어촌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지역정주 인구 유입 효과 기대

○ 교원역량 고도화 & 학교자치 확립

- 다교과 지도, 지역기반 교원 양성, 소규모학교 자율경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유연성 확보
- 학교자치와 지자체 협력이 강화되어, ‘학교-지자체-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안정화

○ 미래 사회 대비 역동성 확보

- AI·디지털 전환, 평생교육 연계, 지역사회 복지 허브 기능 등 복합적·통합적 학교 체제로 전환
- 교육이 단순히 ‘교과 가르침’이 아니라, 돌봄+복지+지역재생+디지털 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 + 지자체의 실행 +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혁신”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만,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도 공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해외 사례 분석

(1) 과열된 입시 경쟁

■ 해외 사례 요약

- 핀란드: 서열화 평가 지양, 모듈식 교육과 맞춤형 학습, 교사 자율권 확대
- 싱가포르: 시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PSLE 점수 단순화, 중간고사 폐지, 창의적 사고 중심 교육 강화, Skills-Future로 학업·기술 경로 다변화

■ 한국 교육정책 시사점

- 평가방식 다양화 및 단순화
 -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순화하고, 학생의 창의력·적성·협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모색
 - 자격증·실습·프로젝트 중심 평가 등 대안적 평가 방식 도입으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 유도

○ 교사의 자율성 확대와 지원 강화

-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목표를 반영하여 수업과 평가를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 부여
- 교원 양성·연수 단계에서 '맞춤형 교육 설계' '학습 코칭' 등의 역량 함양을 강화함으로써, 교사가 창의적인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시 중심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 대입 전형에서 고교 학습 과정을 넘어 실습·연구·프로젝트 등의 경험을 평가하는 방식 확대
- 기술·직업 훈련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진로 경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시 경쟁 완화

(2) 수도권 인구 집중

■ 해외 사례 요약

- 일본: 국내 유학 제도를 통해 도심 학생의 지방 학교 유치, 후쿠이현 체험형 학습과 산학 협력으로 지역 정착 유도
- 핀란드: 수도권·지방 모두 동일한 고품질 교육 제공, 지방 학생 맞춤형 교육과 정착 장려
- 캐나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AISI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 극복,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습 환경 개선

■ 한국 교육정책 시사점

○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격차 해소

- '국공립 학교 시설·교원 배치·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 강화
- '지역 혁신학교' 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젝트·체험형 학습을 설계함으로써 학생·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자체와 협력한 '국내 유학' 혹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 일본의 '국내 유학' 사례처럼, 수도권 학생이 일정 기간 지역 학교에서 교육·문화·취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 이를 통해 지방교육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 대학(전문대, 지역대 등)과 지역 기업이 연계해 현장 실습, 인턴십, 창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
- 교육이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직업적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

(3) 교육 기회 불평등 및 격차

■ 해외 사례 요약

- 캐나다: 퀘벡의 저비용 보육정책으로 여성 경제활동·출산을 상승, 지역 맞춤형 정책(AISI)으로 지역사회 협력
- 일본: GIGA School Program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 이민자 맞춤형 교육
- 핀란드: 3단계 지원 모델을 통한 학습 능력별 맞춤형 지원

■ 한국 교육정책 시사점

- 보편적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보육·유아교육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강화
 -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여, 소득·지역·가족배경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학교 현장에 고성능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사·학생 대상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 확대
 -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외 지역에는 온라인 학습 및 디지털 장비 지원을 우선 강화하여, 지역 간·계층 간 격차 축소
-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
 - 학습 부진·특수교육·이중언어(다문화) 등 학생 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핀란드의 3단계 지원 모델 참고)
 - 학교 내 상담 교사·교육 복지사·지역사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4) 정서적 불안 및 전인교육 필요

■ 해외 사례 요약

- 핀란드: 이민자 학생을 위한 모국어 교육 강화, 전주기 학습 지원으로 사회적 안정성 확보
- 싱가포르: 학생 중심 교육(시험 부담 완화, 창의적 학습 환경), 탄력근무제(FWA)로 부모 육아 부담 경감

■ 한국 교육정책 시사점

- 전인교육 강화 및 학습 부담 완화
 - 인지 발달뿐 아니라, 정서·사회성·도덕성 등을 고루 성장시키는 전인교육 강화
 -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자율 프로젝트나 협동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움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
-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등 가정 친화적 제도(고용 정책)와 교육정책 간 협력을 유기적으로 추진
 - 학교는 지역 복지기관, 상담센터, 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생과 가정에 종합적·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한국어 보충 교육 등 다층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정서적 안정 및 성공적 학습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교류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민자·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성취도 제고

(5) 교육과 경제·사회·환경 연계 부족

■ 해외 사례 요약

- 싱가포르: SkillsFuture를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산업 수요와 교육의 긴밀 연계
- 캐나다: CESG(매칭 기금)를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 통합 시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전환
- 일본: ESD(지속가능발전교육)로 환경·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을 결합, 지방 경제 활성화 유도

■ 한국 교육정책 시사점

○ 평생교육 체계 확립으로 경제·사회 변화 대응

학생 시절뿐 아니라 성인 대상 재교육, 직무 능력 향상, 기술 전환 지원 등 지속적인 학습 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직업·기술교육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생·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전략 수립

○ 환경·지역사회 문제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

- 기후위기, 지역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환경적 이슈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운영
- 지역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대학,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캐나다의 CESG처럼 국가가 일정 부분 매칭 지원을 하는 교육비 저축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
- 보육·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교육재정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교육 투자 지속

■ 결론 및 시사점

- 경쟁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미래 역량에 집중하고, 이를 평가·인증 방식 고도화
-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활력 제고: 수도권-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균등화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교육 모델 마련
- 보편적 교육복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보육·유아교육, 디지털 인프라, 다문화 학생 지원 등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정책 강화
- 정서적 안정과 전인교육: 학생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심리·정서 지원, 가정과의 협력,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행복 교육' 실현
- 교육-사회-경제-환경 연계: 평생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 연계한 실천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이 국가·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
- '경쟁 완화와 다양성 존중', '균등한 교육 접근성 보장', '평생학습 기반 형성', '지역사회·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으면, 한국 교육이 저출생·인구감소 시대 및 미래사회 변화에 한층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대응이 가능

4) 시나리오를 통해 바라본 미래 초중고 교육환경의 변화

(1) 방법론: 미국 하와이대학 마노아 학파의 4가지 대안적 미래 준용

- 미국의 1세대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Jim Dator)는 “네 가지 일반적 미래(Four Generic Futures)”라고 불리는 틀을 제시
 - 이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원형(또는 ‘공통 이미지’)은 사회·경제·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미래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

■ 지속적 성장(Continued Growth)

- 핵심 개념: 미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술 혁신, 전반적인 진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 (현재의 문제와 기회의 지속)
 - 시장 확대, 다양한 소비재 증가, 향상된 생활수준
 - 기술을 통한 문제(예: 기후변화, 자원 부족 등) 해결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
 - 정부와 제도가 변화에 적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성장 모델을 유지

■ 붕괴(Collapse)

- 핵심 개념: 생태학적 재앙, 사회적 불안, 경제 위기,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해 사회 (또는 사회 내부의 특정 제도·시스템)가 붕괴한다는 시나리오
 - 세계 공급망, 거버넌스(통치 구조), 사회 질서가 붕괴
 - 자원이 희소하거나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갈등이 심화
 -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움직임 등장

■ 규율(Discipline)

- 핵심 개념: 사회가 자원 사용, 개인 행동, 경제 활동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공동체 가치, 지속가능성, 질서를 중시함으로써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 생태학적·사회적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범·규제·제약(예: 배급제, 에코 거버넌스 등) 도입
 -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웰빙과 관리(stewardship)를 강조
 - 집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인적 자유나 소비 선택을 일정 부분 희생

■ 변혁(Transformation)

- 핵심 개념 기술적 돌파구, 영적 깨달음, 혹은 패러다임 전환적 사회 운동 등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고하고 조직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미래

- 완전히 새로운 제도나 사회 구조(예: 탈(脫)희소성 경제, 새로운 정치체제, 급진적인 문화 변화)의 등장
- 기존 체제의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가치관·정체성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
- 혁신적 기술(예: AI, 바이오테크), 새로운 공동체 형태, 의식의 전환 등을 통해 인류나 지구 차원의 진화 가능성

(2) Four Generic Futures를 준용한 미래 초중고 교육환경의 변화의 4가지 시나리오

■ Continue: 문제와 기회의 공존



□ 시나리오 개요

- 2020~2030년대의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경제·기술·교육 시스템이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
- 국가 주도 하에 '디지털 전환'과 '미래역량 교육'이 꾸준히 추진되어, 새로운 기술과 교육 방법이 보급되지만, 기존의 입시 경쟁 구조와 사교육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지 않는 상황

□ 주요 특징

- 기술 통합형 학습 환경
 - 초·중·고 교실에 VR/AR, AI 튜터, 메타버스 교실 등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교사와 학생 간 대면 수업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
 - 디지털 교재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확대되어 교과 과정과 개인별 맞춤학습이

일부 정착

○ 입시 경쟁 지속 & 사교육 활성화

- 기존 입시제도(수능 등)와 평가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경쟁 심리가 유지
- AI/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사교육 플랫폼’이 등장하여 사교육 시장은 더욱 세분화·정교화

○ 국가 주도의 미래교육 정책

- 코딩·AI·데이터 리터러시, 창의력, 협업 능력 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진행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산업 인재 양성”을 계속 강조
- 다만, 이러한 교육정책이 입시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제 교실 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속도는 제한적

□ 교육 시사점

- 기회의 불평등 심화: 기술 기반 교육 인프라가 도시·수도권 중심으로 잘 갖춰지면서, 농어촌·소외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
- 혁신 vs. 기존 제도 충돌: 혁신적 학습방법과 전통적 입시제도가 충돌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Collapse: 학교의 파산



□ 시나리오 개요

- 기후변화, 자원 위기, 경제 불안정, 인구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국가와 사회 전

반이 위기와 불안정 상태에 위치

- 재정 악화와 사회적 갈등이 겹치며 교육 시스템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아,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 수업이나 시설 유지가 어려운 상황

□ 주요 특징

- 교육 인프라의 붕괴 및 지역 간 격차
 - 극단적 기후재해, 자원 부족, 행정기능 약화로 인해 교육기관 유지가 어려워지는 지역들이 발생
 - 학교 설비 및 디지털 인프라가 파손되거나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해 노후화되는 경우가 많아져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
- 교사 부족 및 교육 인력 유출
 - 잦은 사회 혼란(예: 인프라 붕괴, 치안 불안)으로 인해 교사의 이탈 가속화
 - 교육 관련 전문 인력들이 해외나 대도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농어촌·도서 지역 교육이 사실상 마비
- 비공식·대안 교육의 부상
 - 정규학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자생적 학부모 그룹이나 지역 커뮤니티가 소규모로 교육을 담당하거나 온라인 자율 학습이 증가
 - 정규 학력 인증의 의미가 약해지고 '생존 기술 교육'(예: 재난 대비, 자립형 농업, 지역사회 협력)이 더욱 강조

□ 교육적 시사점

- 기본적 학습권 보장 어려움: 국가 차원의 안정된 교육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지면 서, 사회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미래 세대의 역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 분산·자율 학습 체제: 공식 제도의 붕괴로 인해, '학교'라는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벗어난 다양한 학습 형태 등장 가능

■ Discipline: 강력한 통제와 규제 기관으로서의 학교

□ 시나리오 개요

- 기후위기와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지속되고, 이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부나 특정 기관(혹은 단체)의 강력한 개입과 규율이 강조
- 교육에서도 탄소 중립, 자원 절약, 공동체 의식 등을 중점으로 '절제된 생활양식'과 '도덕·윤리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정책이 시행



□ 주요 특징

○ 공공·공동체 중심의 교육 강조

- 개인 간 경쟁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헌신'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 마련
- 학급 단위의 협동 과제, 지역사회 봉사, 환경관리 활동 등이 정규 커리큘럼의 큰 비중을 차지

○ 교육행정의 강력한 통제

- 교육부(또는 정부 기관)가 전국의 학교 운영과 교육 내용을 강하게 일원화하여 관리
- 학생들의 생활 패턴(온라인 활동, 휴대폰 사용, 소비 습관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규범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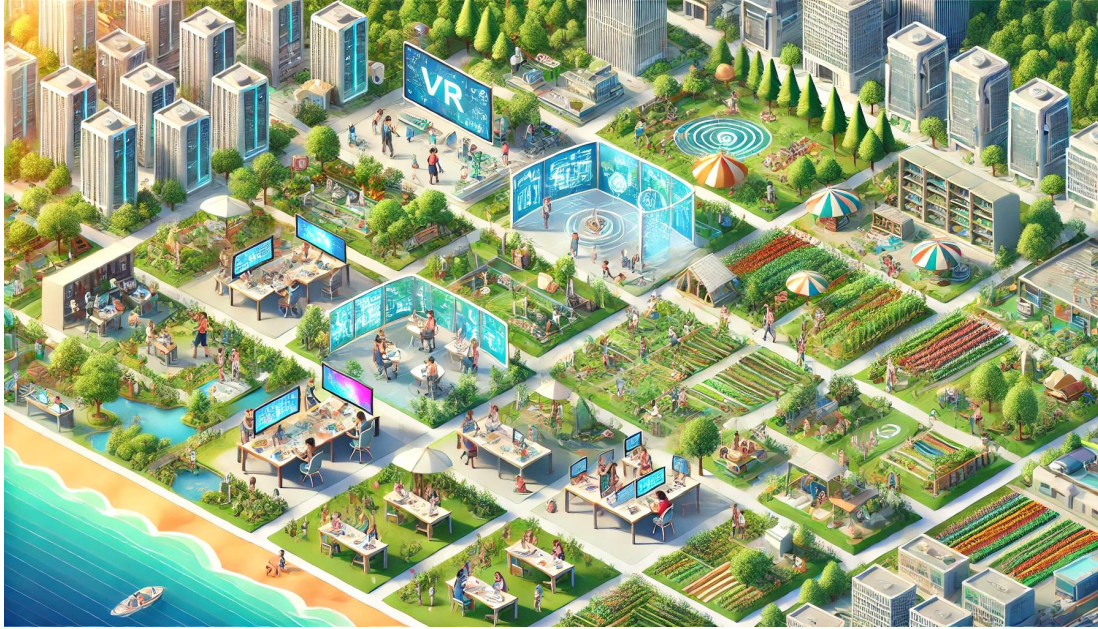
○ 에너지·환경 중심 교육 콘텐츠

- '지속 가능성', '기후위기 극복', '윤리적 소비' 등에 관한 내용이 필수 과목으로 편성
- 교실·교사·학생 모두 자원 절약 실천을 일상화(예: 전기·물 사용 통제, 학교 텃밭 운영, 교복·생활용품 공유 등)

□ 교육적 시사점

-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제약 가능성: 강한 규율 체계로 인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 도전과 개성 표현이 제한
- 사회적 가치 내재화: 한편으로는 공동체 의식과 환경윤리를 체득한 학생들이 많아지며, 미래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문화를 형성

■ Transformation: ‘학교’라는 개념의 축소



□ 시나리오 개요

- 급진적 기술 발전(AI,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등)과 문화·가치관 변화가 맞물려, 지금의 교육·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 2050년경에는 ‘AI 교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블록체인 기반 학습 인증’ 등 아직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혁신 기술이 일상 속에 자리 매김

□ 주요 특징

- AI와 인간 교사의 ‘협력 교육’
 - AI 교사는 학생의 학습 스타일, 능력, 흥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인간 교사는 정서적 지지·상담·윤리적 문제 해결 등에 집중
 - 교사는 ‘코치’나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이 변화하며, 학생들은 능동적·자율적으로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됨
- 표준화된 학제와 교육 과정 해체
 - 초·중·고라는 구분이 모호해지고, 학생들은 능력과 진로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수강
 - 학교라는 공간 역시 물리적 의미보다,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학습 커뮤니티의 개념이 강해진다.
- 학습 성과의 다차원적 인증
 - 블록체인·분산 ID 기술 등을 활용해 학교뿐 아니라 온라인 수강, 지역사회 활동,

개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습 이력이 공식적으로 인정

- 전통적 '성적표' 대신, 융합적·종합적 역량을 평가하는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주류로 정착

□ 교육적 시사점

- 교육의 개별화·탈중앙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동기를 찾고, 다양한 경로로 역량을 쌓으며, 이를 사회에서도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인간 교사의 역할 재정의: 정보 전달자에서 '인간적·정서적 지도자', '심층학습 조력자'로 교사의 가치가 재평가
- 교육의 본질적 변화
 - 지식 전수가 아닌 '학생 주도 프로젝트'가 학습 중심이 되며, '인간 교사+AI 교사'의 협업을 통해 휴머니즘과 기술이 결합된 교육 확산
 - 학교가 제도·물리 공간보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전환

■ 시나리오가 주는 시사점

- 기술 발전과 저출산·기후위기 등 사회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육의 모습이 크게 변화
- 교육 격차, 계층 간 불평등, 지역 격차 등은 각각 다른 양상으로 더욱 심화될 수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존재
- 공교육의 공동체적·공익적 가치가 과거보다 강조되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공존
- 인간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보다 멘토·코치·윤리적 가이드로서 중요해지고, AI·에듀테크와의 협력이 필수
- 궁극적으로 2050년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다시 제기되며, 각 시나리오마다 다른 해답을 제시

(3) 시나리오별 교육정책 방향

■ AI 교사 활용 체계 확립과 교원 역량 재정의

- AI 교사 표준 및 인증 제도 마련
 - AI 교사의 알고리즘적 편향, 학습 경로 설계 정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공

표준 및 인증 체계 필요

- AI 교사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및 관련 기관이 충분한 기술 검증과 품질 관리 수행
-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프로그램
 - 지식 전달을 담당하던 교사의 역할이 '정서적·윤리적 멘토', '관계 조정자'로 확장되는 만큼, 교원 양성과정 및 현직 교사 연수과정의 전반적 개편
 - 프로젝트형 교육, 상담·코칭 역량, AI 분석 결과 활용 능력 등을 강화하는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입
- 새로운 교육 직무와 인력 수요 대응
 - AI 교사의 시스템 관리, 데이터 해석, 윤리적 검수 등을 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문가가 필요
 - 정부 차원에서 교사·에듀테크 전문가·데이터 엔지니어가 협력할 수 있는 '교육혁신 센터' 설치·운영 고려

■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습 인프라 구축

- 보편적 디지털 학습권 보장
 - VR 교실,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첨단 기기가 기반이 되면서, 경제력·지역 격차에 따라 학생 간 학습 환경 차이가 더욱 커질 가능성 상승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학습 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를 적극 확대하고,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무상 기기 지원, 인터넷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
- 지역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 지원
 - 도서·산간 지역, 농어촌 등은 첨단 인프라 구축 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 특화 에듀테크 사업'을 설계해, 지자체별로 필요한 VR·AI 설비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운영 노하우 전수
-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 대규모 IT 기업, 에듀테크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학습 환경 마련
 - 기업은 기술과 자본을, 정부는 제도와 규제·정책적 지원을 맡는 형태의 파트너십 모델 구축

■ 블록체인 포트폴리오 시스템의 운영 및 표준화

- 블록체인 기록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 학생들의 학습 결과, 프로젝트 성과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기록되려면, 블록체인 프로토콜 표준화와 관리 기관(공공 혹은 민간 합동) 필요
- 데이터 위·변조 및 중복 기록 방지, 네트워크 보안, 장애 대응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포트폴리오 평가 기준 및 활용 방안 정립

- 과거의 '점수·등수'가 아닌,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 협업 능력, 창의성 등이 주요 지표가 되면서, 이를 평가하는 객관적·합리적 기준 설정
- 대학·기업·정부기관 등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할지에 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선을 최소화

○ 학생·교사의 데이터 관리 권한 명확화

- 포트폴리오에 저장되는 정보가 학생의 사생활이나 개성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데이터 공개 범위·접근 권한에 대한 세부 정책 마련
- 학생이 자신의 기록을 일부만 공개하거나, 특정 시점에 자동으로 폐기·익명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제도화

■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법적 규제 마련

○ 생체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BCI,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뇌파, 집중도, 정서 상태 등 민감한 생체 정보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활용 범위,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설정해 남용을 방지

○ AI 알고리즘 윤리·투명성 보장

- 학생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로나 과제 난이도 조정 등에 있어, AI 알고리즘의 편향(Bias) 문제나 오판 위험이 존재
- 알고리즘 개발·검증 과정에서 윤리위원회나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AI 추천 경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

○ 데이터 주권 확립과 학생 보호

- 학생들은 자신의 생체 정보 및 학습 기록에 대한 주권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불이익 없이 '데이터를 거부할 권리'도 주어져야 하며, 해당 데이터로 인해 교육적 기회를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인간 교사와 AI 간 협업 구조 설계

○ AI 교사-인간 교사 간 역할 분담 체계화

- AI 교사가 실시간 학습 분석과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책임진다면, 인간 교사는 정서적 지원, 윤리적 판단, 팀 프로젝트 조정 등을 핵심 역할로 전환
- 이를 위해서는 'AI 주도 학습'과 '인간 교사 멘토링' 사이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커리큘럼 설계 지침 마련

○ 멘토링·상담 전문성 강화

- 인간 교사가 주로 정서·관계·윤리 분야를 담당하게 되므로, 상담학·심리학·갈등 조정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
- 교사 자격 기준에 '심리 상담 능력', '윤리적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되도록 법·제도 개선 검토

○ 협업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 인간 교사와 AI 교사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의 학습 이력, 정서 상태, 프로젝트 참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이를 통해 중복 평가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정밀한 맞춤형 지도·멘토링 체계 확보

■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프로젝트 중심 학습 확대와 사회 연계

- VR·AI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확산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실질적 협력 구조 마련
-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가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기록·평가되는 선순환 모델 구축

○ 산업계·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업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학생들은 기업 및 연구기관을 통해 최신 기술·현장 경험을 획득
- 지역별 AI/에듀테크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스타트업·연구소·학교 간 지식 교류와 자원 연계를 촉진

○ 장기적 모니터링·평가 체계

- 정책 시행 이후, AI 교사의 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 정도, 개인정보·데이터 윤리 등의 상황을 꾸준히 트래킹하고 평가
- 주기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정책을

보완·개선하는 순환 구조 마련

■ 결론 및 시사점

- 2050년 시나리오에서 나타난 첨단 교육환경은 분명 많은 기회를 열어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격차·윤리 문제·제도적 공백을 야기
 - 따라서 지금부터 '기술을 통한 교육 혁신'과 '인간적 가치·윤리 중심의 교육'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수적
- 핵심 원칙
 - AI 활용 효율성과 교원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 설계
 -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학습 기회 제공
 - 개인정보 및 생체 데이터의 안전성과 주권 보장

5) Macro, Meso, Micro 레벨에서의 정책 방향성

(1) Macro 레벨: 국가 차원의 교육 정책 방향

- Macro 레벨은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예산·교육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미래 교육 비전 및 거버넌스 확립

- 국가 교육 비전 수립: 인구구조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가 교육 비전을 국정 과제로 명확히 설정
- 거버넌스 체계 강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 교육위원회 등 협의 기구를 통해 장기적·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법·제도·재정 기반 강화

- 교육 재정 확충: 국가 차원에서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초중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교원 역량 강화 예산을 확보
 - 농어촌·도서벽지 등 '지역 원격학습센터' 구축 사업(국가 차원의 대규모 예산 투입)
- 탄력적 학제 개편 검토: 학제(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에 대한 재검토 및 학습 자율성을 높이는 유연한 학사 운영 제도 도입
- 교육 격차 해소 제도 마련: 지역·계층 간 디지털 격차,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에듀테크 접근성 지원법(가칭)'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미래 역량 중심 국가 교육과정 개정

- 핵심 역량 명확화: 창의성,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 리터러시, 인성·시민성 등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국가 교육과정의 중심 축으로 설정
- 융·복합 교육 확대: 과목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형 교과(예: AI+수학, 예술+과학) 확대 및 프로젝트형 학습을 유도하는 국가적 가이드라인 제시
- 교육·복지 연계 & 디지털 전환
 - AI 기반 학습이력 통합관리(K-에듀테크 플랫폼) 등 전국 공교육 데이터 시스템 설계

(2) Meso 레벨: 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차원의 실천

- Meso 레벨은 개별 학교, 학급, 교사, 학생, 학부모 차원에서 직접 실행되는 세부 프로그램·실천 방안

■ 지역 및 학교 차원의 교육 운영 체제 혁신

- 교육청-학교 간 협력 모델 구축: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운영 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업무를 재구조화하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
- 지역 단위 교육 혁신 클러스터: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 커뮤니티 스쿨, 메이커 스페이스 등)

■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사 공동체 지원

-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교육청 주도로 교사 대상 AI·에듀테크 활용 연수, 융합 수업 설계 워크숍, 혁신 교사 커뮤니티 운영
- 교사 협력 및 멘토링 체계: 초임 교사와 경력 교사를 연결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지역 차원에서 구축하고, 협력 수업(협동 교사제) 등 운영 지침 마련

■ 학습 환경 및 인프라 구축

- 디지털 학습 인프라: 지역 단위의 공공 Wi-Fi 확충, 교실 내 태블릿·노트북·스마트 기기 보급, 클라우드 기반 LMS(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기반 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교내 위생·보건·안전 설비 개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녹화·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 운영

(3) Micro 레벨: 학교·교실 차원의 교육 활동 및 학습 방법

- Micro 레벨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학교법인·지역사회 단위에서 시행되는 정책

■ 학생 주도 학습 및 개별화 교육

-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활성화: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 과정을 탐구·협업하도록 지원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성 육성
- 맞춤형 학습 지원: 수준별·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AI 튜터(챗봇, 지능형 학습 플랫폼 등)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도에 맞춘 학습 경로 제공

■ 융합형 교과 운영 및 교수·학습 혁신

- STEAM(융합교육) 및 복합 교과 운영: 수학·과학·기술·예술·사회 등을 융합한 통합 교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방면의 사고력 및 창의성 함양
-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결합하여 학습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학습 몰입도 제고

■ 학습자 성장 중심 평가 및 피드백

- 과정 중심 평가: 시험 성적에만 집중되지 않고 학습 과정(프로젝트 참여도, 협업, 자기주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강화
- 디지털 포트폴리오: 학생별 학습 이력과 성취 결과를 온라인 포트폴리오로 축적하여, 학부모·교사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피드백 제공

■ 인성·사회성·공동체 교육 강화

- 사회참여 프로젝트: 봉사활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환경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

〈표 19〉 Macro, Meso, Micro 레벨 별 분석 결과 및 정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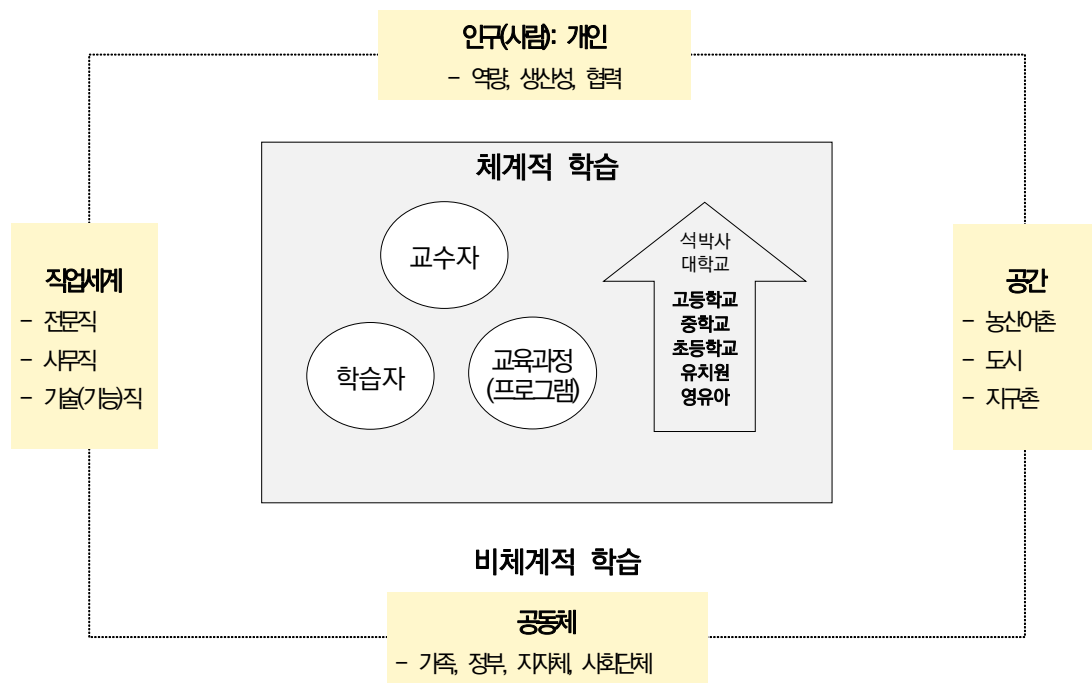
	CLA 분석	문헌 및 정책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시나리오 분석
Macro	• 공공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및 질적 개선 •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개인주의와 공동체 가치의 균형 잡기 • ‘가족’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다양한 서사 확산	• 학교-지자체-지역사회 협력체계 법제화 • ‘늘봄학교’ 전담 운영비 지원 • 교사 자격·평가체계 재설계 • 교원 정원관리·교원수급 체계 개선 • ‘다(多)교과 지도’ 지원 체계 수립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 입시 중심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격차 해소 • 전인교육 강화 및 학습 부담 완화 • 평생교육 체계 확립으로 경제·사회 변화 대응	• AI 교사 활용 체계 확립과 교원 역량 재정의 •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습 인프라 구축 • 블록체인 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영 및 표준화 • 인간 교사와 AI 간 협업 구조 설계
Meso	• 부모 역량 지원 및 가족친화적 제도 확대 • 생애주기별·체험형 콘텐츠(지역단위 운영) 개발 •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 맞춤형 방과후 교육과정 개발 등 초등 ‘늘봄학교’ 고도화 • 시·도교육청-지자체 행정 및 지원체계 통합 • 소규모학교·통합학교 운영 혁신 • 교육·복지 연계 & 디지털 전환	• 교사의 자율성 확대와 지원 강화 • 지자체와 협력한 ‘국내 유학’ 혹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 환경·지역사회 문제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	•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 재정·인프라 배분, 지자체-학교 협력 • AI 교사-인간 교사 간 역할 분담 체계화 • 학교-지역사회-산업체 간 프로젝트 중심 학습 확대
Micro	• 교사의 전문성 강화 • 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맞춤형 방과후 활동, AI 튜터링 등에서의 개인별 학습 지도 • 교육복지 협력관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개별 상담·사례관리	• 맞춤형 학습 및 상담·멘토링 • 부모·교사 간 소규모 코칭, 학습 워크숍	• 멘토링·상담 전문성 강화 • 학생·교사의 데이터 관리 권한 설정 및 활용 • 프로젝트 학습 과정에서의 개별 지도·코칭

(4) 학습 공간에서의 위상

■ Macro, Meso, Micro 차원에서 초중등교육의 학습 공간에서의 위상

- (Macro) 학교에서 학습(교육)은 일(직업세계), 가족과 공동체 등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최근 지역간 학습 격차와 대졸자 수도권 이동에 의한 지역인재유출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영향
- (Meso) 체계적 학습으로서의 초중등교육은 학교(공공/사립), 학원,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 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등)의 위계적 의존성을 보유: 교육 시스템에 영향
 - 진로, 자격, 법제도 등의 시스템 이외에 네트워크(교수학습 네트워크, 혁신 증진 네트워크, 교수학습 전문성 네트워크 등)와 정책 거버넌스는 초중등교육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침
- (Micro) 교수자, 학습자, 교육과정 등은 인적자원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교수학습법(pedagogy)에 의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 가르침(교수)의 실행, 학생 학습의 상호 작용, 가르침의 전문성 등의 발현 공간

[그림 21] 미래 교육시스템과 학습환경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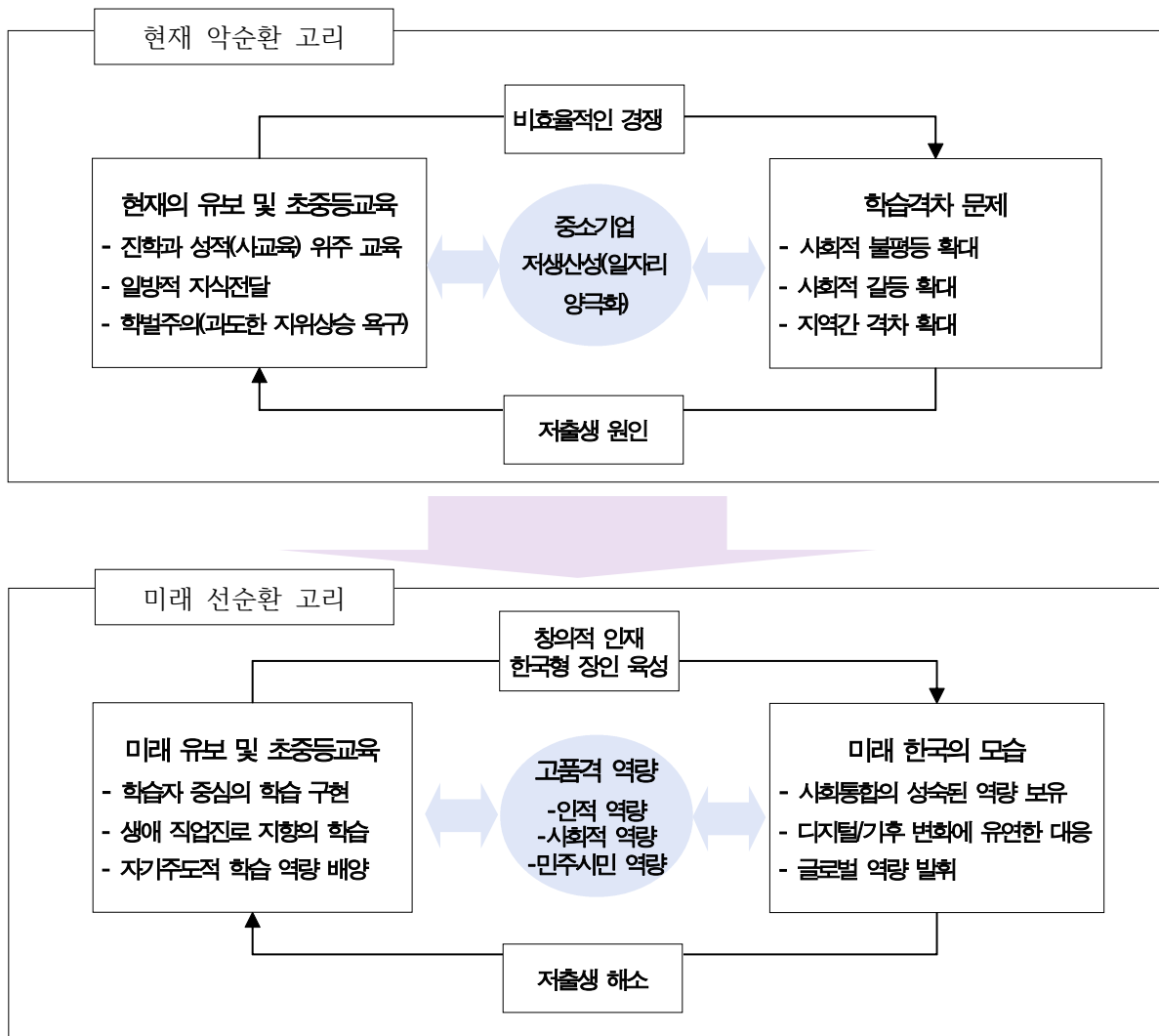


■ 미래 교육체제와 저출생 해소 간 선순환 고리 구축

- 지나친 학벌 중심 사회와 교육 과정의 경쟁 심화가 학습자의 창의성·다양성을 저해하고, 동시에 사회적 불안정과 일자리 양극화를 부추겨 저출생 문제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발생

- 선순환 고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 교육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교육-일자리-복지’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
- 학습자가 주도성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제도가 마련된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저출생 문제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

[그림 22] 초중등교육과 저출생 사이의 악순환과 선순환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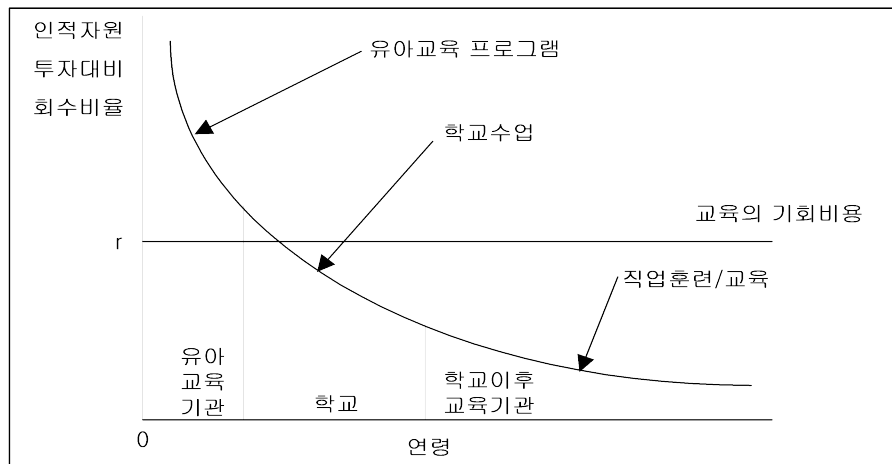


- 하지만 학령기 초기 단계에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매우 높으며, 학령기에 학습이 성인기에 학습 연계되게 하는 새로운 전략이 중요
-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직업 훈련은 모두 인적자본 투자로서, 각 단계·대상·목적에 따라 투자 대비 회수율(ROI)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
- 조기에 투자할수록, 사회·기업·개인이 협력할수록 ROI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생 해소, 사회통합, 국가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

급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

- 특히, 유아 교육 등의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 효과로는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기초적 언어·정서·사회성을 증진

[그림 23] 인적자본 투자 대비 회수율



자료: 김형만 외(2018), p.35.

6. 분야별 · 단계별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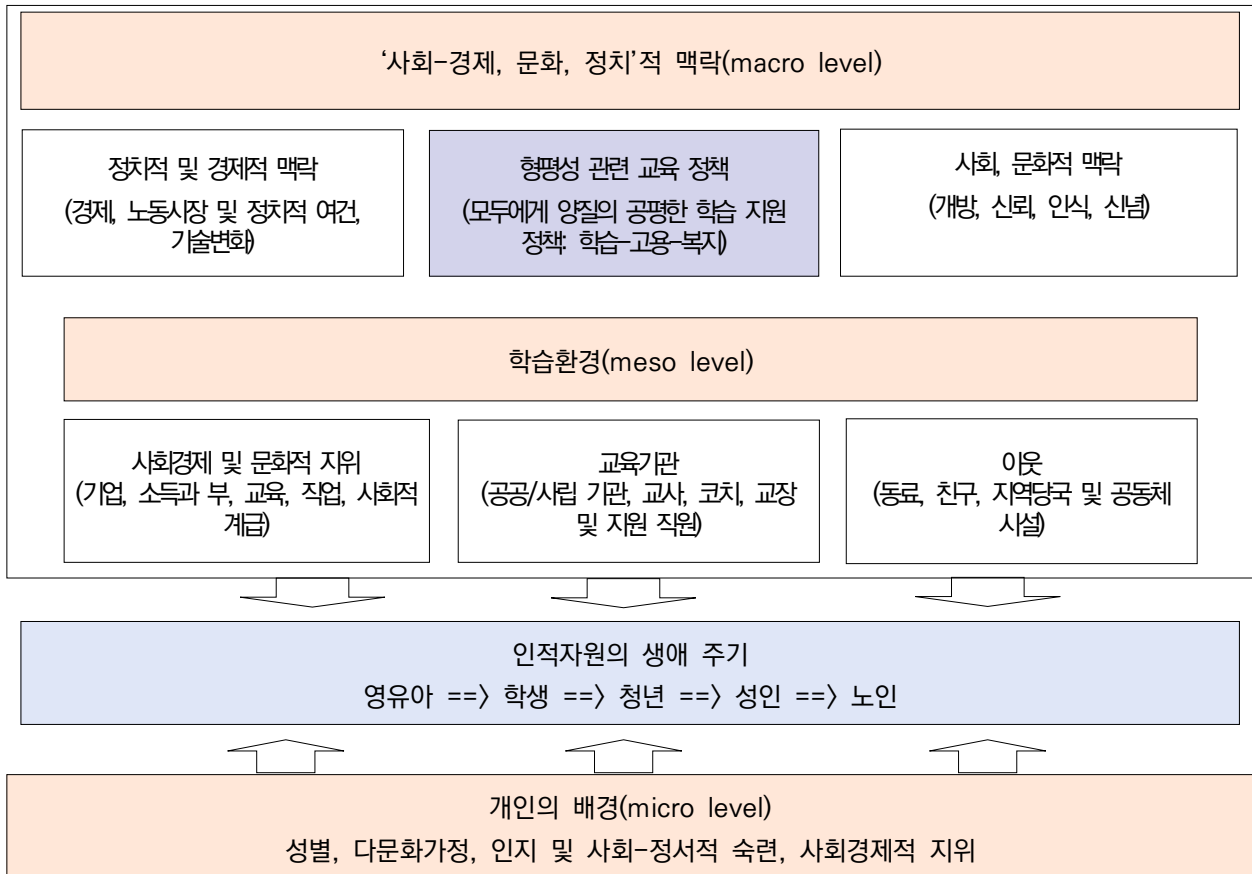
1) 미래 추진 과제의 지향점과 영역

(1) 지향점

■ 생애 학습을 위한 역량 배양: 모두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all)

- 초·중등교육에서 개인들이 당면하는 생애 단계별 학습에 스스로 참여할 역량을 배양
 -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 등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기르고 활용하는 개인적 토대
 - 과거 숙련은 현재의 숙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즉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부터 습득한 숙련은 평생학습 참여 유인의 결정에 영향(OECD, 2015: 39)

[그림 24] 모두를 위한(for all) 생애 학습의 모습



자료: 'OECD(2017), p.17.

-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인지적 숙련, 사회적 및 정서적 숙련, 횡단숙련(transversal skills)을 충분히 함양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으로 전환

- 학습 격차 등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형평성을 고려하는 모두의 학습을 통한 생애 학습 기회 창출

■ 창의적 학습 기반 확립: 재능발굴 시스템으로 전환

- 학습자 중심의 학습 전개

- 개인의 잠재적 특성을 반영하는 학습(개별화 학습 등)으로 학습자의 눈높이, 창조, 표현, 협업 및 발견 등에 대한 성향에 맞게 교수학습 방법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습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 창의성,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실 내의 환경을 조성하고 소셜미디어 및 환경적 위험 등을 해결할 대안 모색

〈표 20〉 창의적 학습을 위한 혁신적 교수학습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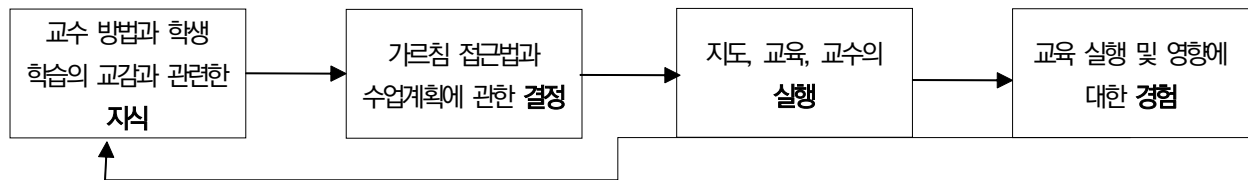
학습 유형	주요 내용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온라인 및 그룹의 역할	-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은 학생이 먼저 작업한 다음 교사의 도움을 받아 연습하고, 분명하게 하면서 이해를 심화 - 학생 그룹이 학교 실험실과 교실을 번갈아 교사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콘텐츠를 적용하는 실험 기반 모델 - 개별 학생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번갈아 맞춤형 일정을 따르는 블렌딩
게임 학습(gamification): 놀이	- 놀이를 통해 학습에서 중요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웰빙을 지원 - 게임을 통해 학습 참여 유인(피드백, 배지 및 목표, 도전)을 도모 - 감정적 요소(내러티브 및 정체성, 협업 및 경쟁)를 통해 자기조절학습, 협업, 탐구 및 창의성을 촉진
계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ICTs 및 디지털 리터러시	- 논리적 추론: 결과를 분석하고 추론 - 분해: 복잡한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분해 - 알고리즘: 루틴을 설명하고 단계별 지점 만들기 - 추상화: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여 문제의 본질을 포착 - 패턴: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솔루션을 식별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 복잡한 세상에서의 탐구	- 학생들의 기존 이해를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 가설과 가치 사이를 이동하고 상충되는 아이디어를 다루는 반성적 관찰 - 경험과 반성을 이해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추가적 개념화 - 학생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을 실천에 구현하는 적극적인 실험
체험 학습(empodied learning): 신체, 감정 및 창의성	- 학교기반 체육 문화: 개인적 자질과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자원으로서 체육의 역할에 초점 - 예술 통합 학습: 예술을 다른 과목과 연결하여 학생 참여 촉진 - 메이커 문화: 땀질과 도구 및 인공물의 제작
다중문해력과 토론기반 교육(multiliteracies and discussion-based teaching): 언어적 다양성 및 질문	- 상황적 실천은 학생의 삶의 경험을 사용하여 학습자 커뮤니티 내에서 의미 있는 교실 활동 만들 - 비판적 프레이밍은 학생들이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학습한 내용에서 건설적 비판과 거리를 두도록 장려 - 변형된 연습은 학생들이 학습을 다른 상황과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

자료: OECD(2018)을 참조하여 작성.

■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 전환

- 교사는 교실의 여러 가지 과제를 상시적인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공교육 시스템(scaffolding system)의 재설계: 학습 공간 운영에 실무 커뮤니티와 전문개발을 지원
- 학습 현장의 혁신 로드맵을 작성하고, 교사가 협력적 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자율성과 협력적 전문성을 제공하여 학습에 새로운 내용과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기반 마련: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실행, 경험이 연계되어 교수학습 역량이 상승 작용하는 구조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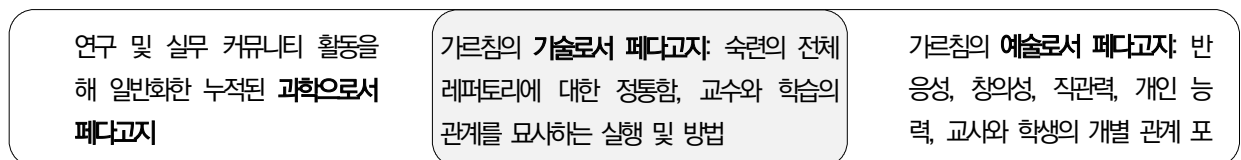
[그림 25] 교수와 학습에 대한 지식과 실행의 연계



자료: OECD(2018), p.36.

- 가르침 기술에서 교수학습 방식의 과학과 예술로 진화하여 학습자의 개별 학습 성향을 수용하도록 교수자의 전문성을 강화

[그림 26] 교수학습에 있어서 과학, 기술, 예술의 상호 작용



자료: OECD(2018, p.37).

■ 다원화되는 학습 수요의 충족

-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규모가 증가해 왔고, 향후 더욱 확대될 예상이며, 그 결과 학습 수요가 다원화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다문화 교수학습 기회 제공
- 대학 진학 중심에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및 숙련 전환이 빠르게 진전될 상황에 대비하여 미래의 노동시장 숙련 변화를 고려하는 초·중등 단계 학습 방식의 새로운 틀 모색
- 지역의 인구, 산업, 공간적 특성에 의한 학습환경을 고려하면서 지역의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산업 및 과학기술 등의 영역과 연계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종합적

인 인재 육성 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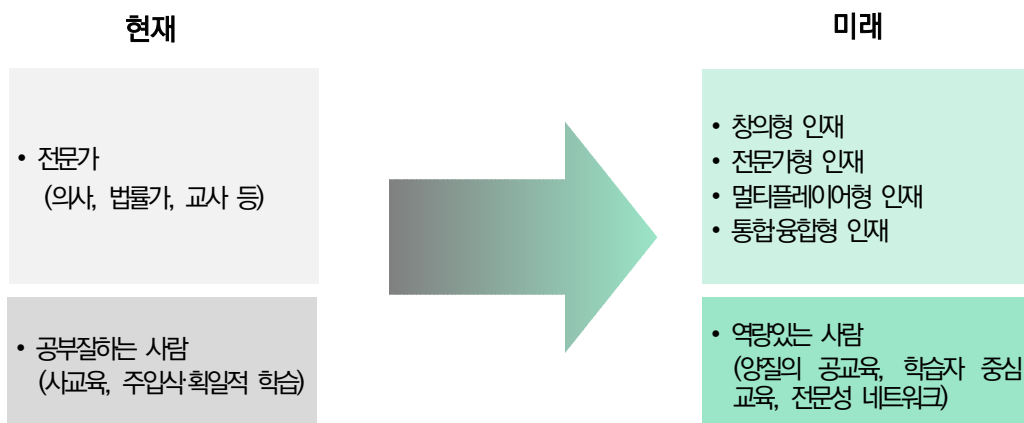
■ 학습 인프라의 통용성 강화

- 중장기적인 학과 및 전공 선택이 미래의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중장기 전망 체제 구축 등을 토대로 직업진로정보의 실효성 강화
 -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정성적 정보 축적을 위한 직업 분야별 현직 고경력자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플랫폼 운영: 직업정보 생성과 교육 전문성 공유 체계, 교육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기반
 -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 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 생성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종합(통합)할 기반 확립
- 진로정보 및 진로교육을 현재의 대학 진학 중심에서 직업 세계로 이어지는 생애 직업진로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직업상담 구현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진로교육법 등의 법령 중심에 근거한 정책 추진에서 여타의 여러 법령에 정하는 제도적 장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법령 간의 연계성 확보

■ 시험 점수보다는 역량 중심의 인재 육성

- 미래의 초·중등교육은 스스로 학습할 역량을 기르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통한 통섭·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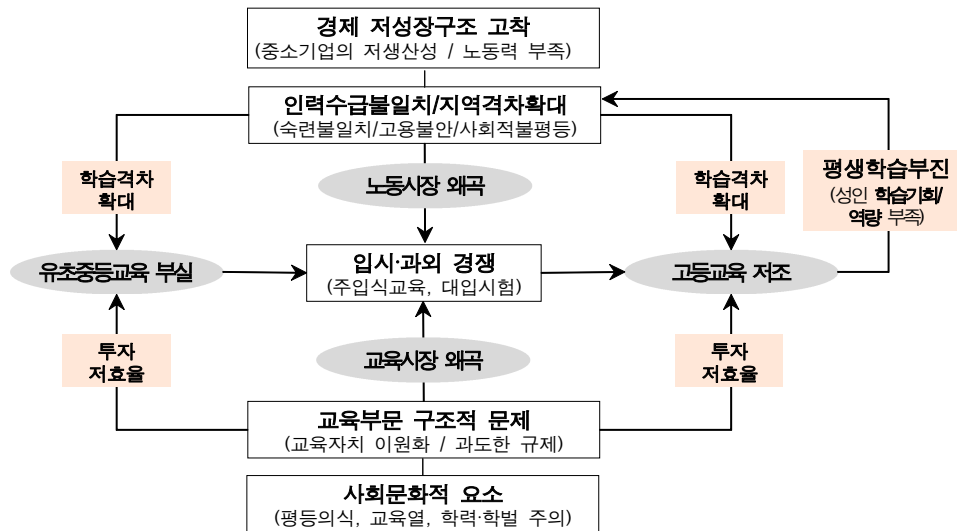
[그림 27] 미래의 인재상



■ 교육의 형평성과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과의 조화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래의 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의 조화로운 접근이 중요

[그림 28] 유초중등교육과 인재의 양성 및 활용의 동태적 연계



(2) 추진 과제 영역

-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의 통폐합과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구현함에 의해 인구의 유입에 더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 양질의 초중등교육은 PIAS 성적 과 같은 수치적 성과 또는 성적이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역량을 배양하여 개인의 잠재력 또는 창의력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열린 교실 또는 열린 학교가 확립될 필요가 있음.
- 해방 이후 한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높은 교육열은 교육의 팽창과 함께 교육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디지털 전환 등으로 미래에는 비정형의 가상공간의 확장에 대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등장
- 1968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시행, 1973년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등의 학습 수요의 팽창과 이후 공교육 및 사교육 그리고 무상교육 등의 학습 복지가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및 AI를 이용한 학습으로 진화(<부표 1> 참조).
- 하지만 여전히 획일적인 교육과 점수에 의존하는 학습의 결과 길러진 인재의 활용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유보 및 초중등 교육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
-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PIASA 성적은 높지만(<부표 1> -<부표4> 참조) PIAAC의 결과 성인의 언어 및 수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 2주기 조사 결과 1주기에 비해 그 성적이 더욱 낮아짐([부록그림 1] - [부록그림 4] 참조)
- 한편 대학진학률은 빠르게 증가하면서([부록그림 5] 참조)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부록그림 6] 참조)되었지만, 성인의 역량이 낮은 현실은 학령기 교

육에 있어서 성적 위주의 양적인 인재 양성의 결과로 추정

- 이상을 고려하여 미래의 유보 및 초중등교육의 정책은 선진국 중 선도 국가로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인구경쟁력을 높일 고품질 학습 체계 확립, 모두를 위한 학습, 생애 학습의 기반, 지역 중심의 학습, 교육인프라 재확립'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대략 20개의 주요 과제를 도출

〈표 21〉 5대 영역 18개 추진 과제

영역	주요 추진 과제
교육 품질 고도화	• 교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 혁신
	• AI 교사 활용 체계 확립과 교원 역량 재정의
	• 인간 교사와 AI 간 협업 구조 설계
	• 교사 양성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선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 창출	• 재능 발굴과 역량 중심 교육 강화
	• 교육 기회 불평등 및 격차 해소
	• 전인교육을 통한 정서적 불안 해소
	• 공동체 역량 교육 및 사회정서학습(SEL) 교육 강화
생애 학습 이동성 확립	• 평생학습 체계와 초·중·고교육의 연계 강화
	• 체험형 학습 및 프로젝트 활성화
지역의 정책추진 역량 확보	•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활력 제고
	•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습 인프라 구축
	• 지역 공동체의 허브로서 '학교'의 위상 전환
교육 인프라 재확립	• 국가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 공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충 및 재배분
	•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 입시·평가 제도의 점진적 개편과 공정성 확보
	• 공교육-사교육 간 균형 조정 및 협력 모델 모색

※ 위 주요 추진과제는 전문가의 면담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

2) 영역별 추진 과제

(1) 교육 품질 고도화

■ 교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 혁신

○ 교사 전문성의 재정의

- 미래 교육에서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AI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이끌어내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형' 교사가 필요
- 교사 양성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획·지도, 코칭·멘토링, IT 리터러시, 사회정서학습

(SEL, Social Emotional Learning)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

○ 교사의 교수학습 전문역량 강화

- 교원의 전문성 활용 체계 재확립: 산업체 전문가, 은퇴 고경력자 등의 교수학습 지도자로 육성 및 활용, 기존 교사와의 전문성 교류 협력 체계 구축
 - 교수자의 교수학습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수학습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교원 양성 프로그램 고도화: 교원 양성 과정에서 신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일반대학 등에 개방
- ※ AI, 빅데이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육 방법론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교사 양성과정에도 통합해 미래 지향적 역량 강화

○ 교사의 교수학습 혁신

- 혁신형 학습 방식 구현 기반 확립: 창의적 학습, 토론, 게임,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학습의 구현을 구체화; STEM 학습 등의 학습방식 개발과 적용 등
- 교수자의 신 페다고지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교사의 거꾸로 학습, 적응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의 학습 경험 공유 지원 및 플랫폼 구축
- 실습 중심 교육: 예비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 확대

■ AI 교사 활용 체계 확립과 교원 역량 재정의

○ AI 교사 표준 및 인증 제도 마련

- AI 교사의 알고리즘적 편향, 학습 경로 설계 정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공 표준 및 인증 체계 필요
- AI 교사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및 관련 기관이 충분한 기술 검증과 품질 관리 수행

○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프로그램

- 지식 전달을 담당하던 교사의 역할이 '정서적·윤리적 멘토', '관계 조정자'로 확장되는 만큼, 교원 양성과정 및 현직 교사 연수과정의 전반적 개편
- 프로젝트형 교육, 상담·코칭 역량, AI 분석 결과 활용 능력 등을 강화하는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입

○ 새로운 교육 직무와 인력 수요 대응

- AI 교사의 시스템 관리, 데이터 해석, 윤리적 검수 등을 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문가가 필요

- 정부 차원에서 교사·에듀테크 전문가·데이터 엔지니어가 협력할 수 있는 '교육혁신 센터' 설치·운영 고려

■ 인간 교사와 AI 간 협업 구조 설계

○ AI 교사-인간 교사 간 역할 분담 체계화

- AI 교사가 실시간 학습 분석과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책임진다면, 인간 교사는 정서적 지원, 윤리적 판단, 팀 프로젝트 조정 등을 핵심 역할로 전환
- 이를 위해서는 'AI 주도 학습'과 '인간 교사 멘토링' 사이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커리큘럼 설계 지침 마련

○ 멘토링·상담 전문성 강화

- 인간 교사가 주로 정서·관계·윤리 분야를 담당하게 되므로, 상담학·심리학·갈등 조정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
- 교사 자격 기준에 '심리 상담 능력', '윤리적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되도록 법·제도 개선 검토

○ 협업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 인간 교사와 AI 교사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의 학습 이력, 정서 상태, 프로젝트 참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이를 통해 중복 평가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정밀한 맞춤형 지도·멘토링 체계 확보

■ 교사 양성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선

○ 교사 양성 및 활용 체계 재확립

-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미래의 환경을 고려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하기 위한 교원 학습 및 자격 갱신 체제 도입
- 다양성 포용: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학습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 제공
- 교원의 역할 다변화: 교사들이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코치, 멘토, 그리고 학습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교사들이 경력 중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
- 인력 배치 최적화: 지역 간 교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 특히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 적합한 인센티브 제공

○ 교사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개선

- 공정한 평가 체계: 교사들이 단순히 학생의 학업 성취도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실천, 학생과의 소통 능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 AI·디지털 기술 활용 및 프로젝트형 교육에서 성과를 내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승진 기회 제공
- 보상 및 동기 부여: 우수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 부여를 강화
 - 단순 '시험 대비 성적'만 보는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 '혁신 수업 사례', '협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

(2)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 창출

■ 재능 발굴과 역량 중심 교육 강화

○ 평가방식 다양화 및 단순화

-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순화하고, 학생의 창의력·적성·협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모색
- 자격증·실습·프로젝트 중심 평가 등 대안적 평가 방식 도입으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 유도

○ 교사의 자율성 확대와 지원 강화

-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목표를 반영하여 수업과 평가를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 부여
- 교원 양성·연수 단계에서 '맞춤형 교육 설계' '학습 코칭' 등의 역량 함양을 강화함으로써, 교사가 창의적인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시 중심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 대입 전형에서 고교 학습 과정을 넘어 실습·연구·프로젝트 등의 경험을 평가하는 방식 확대
- 기술·직업 훈련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진로 경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시 경쟁 완화

○ 학습자 중심의 재능발굴 교육시스템 확립

- 학생의 잠재적 학습 역량 발굴: AI 기반 수준별 학습 및 학습 이력 관리체계를 확립하고⁹⁾, 학생들의 학습지도 가이드라인 개발

9) 현재 도입 준비 중인 AI 교과서는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의 전학 등이 있을 경우 적응하는데 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학습 이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 관리하지 못함에 의해 학습의 종합적인 성과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인의 재능 발굴을 위한 상담기능 강화: 학생들의 진로상담에서 직업정보와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성검사 및 상담 기회 확대
- ※ 핀란드의 경우 모듈식 교육과 맞춤형 학습으로 경쟁 대신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사의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로 학생 개별화 학습 가능
- ※ 또한 핀란드는 3단계 지원 모델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 기회 보장

■ 교육 기회 불평등 및 격차 해소

○ 보편적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보육·유아교육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 강화
- 영유아기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여, 소득·지역·가족배경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학교 현장에 고성능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사·학생 대상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 확대
-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외 지역에는 온라인 학습 및 디지털 장비 지원을 우선 강화하여, 지역 간·계층 간 격차 축소

○ 소외계층 학습기회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학교, 정부, 공동체 협력에 의한 위기 징후 발견-상담-맞춤형의 유기적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개인의 역량개발 기회 창출
- 돌봄교실의 내실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대상 돌봄교실을 학교-지역 사회-지자체가 협력하는 품격 높은 돌봄으로 발전하도록 늘봄학교의 품질 고급화

○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

- 학습 부진·특수교육·이중언어(다문화) 등 학생 유형별 세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핀란드의 3단계 지원 모델 참고)
- 학교 내 상담 교사·교육 복지사·지역사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 전인교육을 통한 정서적 불안 해소

○ 전인교육 강화 및 학습 부담 완화

- 인지 발달뿐 아니라, 정서·사회성·도덕성 등을 고루 성장시키는 전인교육 강화
-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자율 프로젝트나 협동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

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움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

○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등 가정 친화적 제도(고용 정책)와 교육정책 간 협력을 유기적으로 추진
- 학교는 지역 복지기관, 상담센터, 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생과 가정에 종합적·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 모국어 교육, 심리 상담, 한국어 보충 교육 등 다층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정서적 안정 및 성공적 학습 지원
 - 한국어 기초학력 배양: 초중등 교육에 외국인 학생 수용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하기 위한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제고하여 다문화 교육 영역을 확대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
 -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요소 반영하도록 설계하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보조 기자재 활용 등 구현
-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교류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민자·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성취도 제고
 -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시간에 학교 내외 시설을 이용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의 심리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 핀란드는 이민자 학생을 위한 모국어 교육 강화로 사회 통합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

※ 일본도 이민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포용적 사회 실현에 노력

■ 공동체 역량 교육 및 사회정서학습(SEL) 교육 강화

○ 학습자 중심의 '사회적 연대' 교육 강화

- AI가 지식 전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더라도, 대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갈등 조정 능력, 시민의식 등은 학교에서 직접적인 경험과 학습이 필요
- 교과 과정과 생활 교육 전반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공동체 내 협업과 연대 의식을 장려

○ 온라인에서의 안전망 구축

- 메타버스와 SNS로 옮겨 간 학생들의 소통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과 괴롭힘 문제를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 교육과 관련 법·제도(가령 24시간 모니터링, 신고 시스템 등)를 보강
-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생활을 통합적으

로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3) 생애 학습 이동성 확립

■ 평생학습 체계와 초·중·고교육의 연계 강화

○ 기초·기본 역량 교육의 중요성 재확인

- 디지털 전환 속에서 성인은 평생학습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유연하게 습득할 수 있으나, 초·중·고 시기에 길러지는 기초 인성, 학습 태도, 자기주도성은 이후 교육의 토대로 작용
- 이에 따라 '교양교육', '인성교육', '윤리·사회성 교육'을 내실화하고,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 역량을 강화

○ 유보 및 초·중등교육의 고등교육과 연계

-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대학의 혁신: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함에 의해 고품질 인재양성을 하는 대학이 생존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입시 위주의 교육을 재능발굴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 기반 마련
- SETAM 학습의 수직적 연계: 과학과 인문 분야를 연계하면서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이 유보 및 초·중등교육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할 기회를 창출
- 대학생과 초중등 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기회 창출: 로봇 동아리 등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의 동아리 활동을 대학의 동아리와 연계하는 활동의 장을 마련(예,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형 로봇대회 개최 등)

○ 평생학습의 기반이 되는 유보 및 초·중등교육 실현

- 기초학습 역량(읽기, 쓰기, 수리, 리터러시)이 문제해결력으로 이어져 학습의 성과를 내도록 학습 방식을 전환¹⁰⁾: 창의적 체험활동, 자기주도 학습(프로젝트기반 학습, 평생학습 태도 형성 등)의 확대
- 은퇴 고경력자의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 부여: 은퇴한 고경력자 또는 고학력 주부 등의 경험을 초·중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보조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 기준 마련

※ 핀란드는 전주기 학습 지원을 통해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 시스템으로 사회적 안정성 확보

○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이동성 확대

10) 우리나라 OECD 15세 대상 PISA 성적(수학, 읽기, 과학)은 높지만(<부표 2>-<부표 4> 참조), 16-64세 대상 PIAAC 성적(리터러시, 수리, 문제해결)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부록그림 1] - [부록그림 3] 참조). 더욱이 2011년 1주기 조사보다 2022년 2주기 조사에서 이들 성적이 더욱 떨어지고 있으며([부록그림 4] 참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져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노동자의 비율이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부록그림 5] - [부록그림 6]) 참조),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부록그림 7] 참조). 이러한 현상은 입시 또는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창의 또는 문제해결 능력이 취약한 양적인 고학력화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문제해결 또는 창의력 향상 교육이 요구됨.

-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의 고도화 통한 직업교육을 선택할 유인 강화: 중소벤처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면서 직업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통한 일-학습 차원의 개인 선택권 확대
-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학 등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학생들의 적성을 바탕으로 생애 학습으로 최고의 고수가 되는 한국형 장인 육성 시스템 확립(장원섭, 2015)

○ 경험학습의 새로운 구상

- 체험학습의 다원화: 기존 현장 방문 및 실습 형태의 체험학습¹¹⁾에서 산업체 등에서 체험을 통한 일(직업)에 대한 체험으로 확대하여 유보 및 초·중등 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 자유학년제의 내실화: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 기간에 진로탐색, 토론 수업,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등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행의 체험학습과 연계
 - ※ 핀란드는 'SkillsFuture'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중심에서 기술 중심 경로로 다변화
 - ※ 일본 후쿠이현의 경우 체험형 학습과 산학 협력으로 지역 정착 유도

○ 성인·직업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중·장년층이 재교육을 받을 때, 초·중·고 시절 기초 과목 내용을 다시 공부하거나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등 세대 간 융합 학습 프로그램 시도 가능
- 지역사회 내 학교·도서관·평생교육센터·기업이 협력해 '공동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습 기록 통합관리 시스템 확립

-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 데이터를 연결·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초·중·고에서 습득한 역량과 성과가 성인이 된 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
- 이를 통해 개인의 학습 이력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채용·인증 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위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역량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체험형 학습 및 프로젝트 활성화

○ 교실 수업·평가 혁신

11) 체험학습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학습 동기를 높이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학습활동임. 체험학습의 유형은 현장 견학(박물관, 공장, 자연 환경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 실습 활동(요리, 공예, 과학 실험 등 직접적인 실습), 사회 참여 활동(봉사 활동, 지역 사회 조사 등)이 있음.

- 탐구·프로젝트 기반 수업, 토론·협업 학습, 학생 개별 맞춤형 피드백(교사 차원)
- 교사가 AI 학습 데이터(학생별 취약 영역 등)를 바탕으로 맞춤 과제를 내주고, 소집단 멘토링 운영

○ 학급 운영 및 생활지도

- 학급 규칙 설정, 학생 생활습관·출결·성취도 관리, 개별 상담 및 프로젝트·동아리 활동, 교실 내 소집단 협업, 학생 자치활동(학급 자치회) 등

○ 부모-교사 간 소통, 가정 연계 학습

- 담임교사가 가정과 주기적으로 연락해 학습·생활 전반을 상담하고, 학교에서 부모 교육 소규모 특강(육아 심리, 가족 재정 등)을 열고, 참여자 간 스터디·커뮤니티 활동 독려

○ 생애주기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학교 내 소단위 실천)

- 유·초등 아이들이 함께 식물 키우기, 동물 돌보기, 마을 탐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중·고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지역봉사, 소규모 창업 동아리, 진로캠프 등 운영

○ 교사-학부모 자원 봉사, 지역 전문가 초청

- 학급이나 학교 단위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강·멘토링·소그룹 프로젝트 운영하고, 개인적 관계망(동문, 지역주민 등)으로 초청 강사를 섭외해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진행

(4) 지역의 교육 및 정책 역량 확보

■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활력 제고

○ 지역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의 적극적 연계

- 저출산 대책을 단순히 출산 장려금이나 일부 세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주거·육아·교육·고용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로 확장
-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정 친화적 노동환경(유연근무제·재택근무), 육아휴직 제도 정비 등을 강화
- 수도권 집중, 지역 인구 소멸이 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인구정책과 교육-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
-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삼아, 돌봄·문화·평생학습 등을 통합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지역사회가 함께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

-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 개발
- 특히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들은 향후 지역사회에서 복합적인 기능(교육, 복지, 문화)을 담당하여 학교가 통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통해 농업, 관광, 첨단 기술 등 지역 경제와 연계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 ※ 캐나다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앨버타 주의 AISI 사례처럼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 필요를 반영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습 환경 개선 가능
- ※ 일본의 경우 국내 유학제도를 통해 도심 학생을 지방 학교로 유치해 지방 인구 활성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도모
- ※ 핀란드도 지역 기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동일한 고품질 교육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장려

○ 지역 산업 및 단체와 연계하는 학습 운영

-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이 주관하는 산업과 협력하는 초·중등교육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지역의 단체와 협력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시민단체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 등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일본의 경우 교육과 환경, 지역사회 발전을 결합하여 지방 경제와 교육 지속 가능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이현은 지역 특화 교육을 통해 체험형 학습과 산학 협력으로 지역 정착 유도
- ※ 캐나다의 경우 학교 통합-지역사회 연계: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전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 산학협력 및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IT, 바이오, 문화콘텐츠, 농어촌 특화산업 등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춰, 초·중·고 시기부터 기업·기관과 연계한 '직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지역 내 창업 및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학습 기회 창출

- 지역의 대학에서 초·중등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현재의 지역 대학에서 늘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학 또는 대학원생이 주도하고 초·중등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지역의 대학이 구축하고 있는 메이커 공간에서 초·중등학교 실험·실습을 하는 대학과 초·중등교육의 공동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초·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협력체제 구축: 현재의 RISE에서 지역의 대학이 초중등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에 대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2의 RISE 체제 설계

○ 지역 내의 창업교육과 연계

- 지역 단위에서 창업 경험을 초·중등교육에 연계: 지역의 스타트업 등 창업가들이 창업의 과정 및 경험을 소개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내 창업기업이 초·중등학교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및 세금 우대 정책 추진

■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습 인프라 구축

○ 보편적 디지털 학습권 보장

- VR 교실,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첨단 기기가 기반이 되면서, 경제력·지역 격차에 따라 학생 간 학습 환경 차이가 더욱 커질 가능성 상승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학습 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를 적극 확대하고,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무상 기기 지원, 인터넷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

○ 지역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 지원

- 도서·산간 지역, 농어촌 등은 첨단 인프라 구축 자체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 특화 에듀테크 사업'을 설계해, 지자체별로 필요한 VR·AI 설비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운영 노하우 전수

○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 대규모 IT 기업, 에듀테크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학습 환경 마련
- 기업은 기술과 자본을, 정부는 제도와 규제·정책적 지원을 맡는 형태의 파트너십 모델 구축

■ 지역 공동체의 허브로서 '학교'의 위상 전환

○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 모델 육성

-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복지·문화·학습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민간단체·기업과 연계해 다목적 시설로 재구조화
 -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을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쓰는 '공동체 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추진

○ 학교-지자체-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 초등 '늘봄학교'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인력·프로그램 분담을 협의·법제화
- 민간·마을교육공동체(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협력 체계 구축

○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민, 학부모, 지역 복지관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획(가족 축제, 마을 축제, 공동체 돌봄)
- 학교가 지역 내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공동육아 협동조합·코워킹 스페이스 활성화

-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재정·행정 지원을 하여, 부모들이 함께 육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지역사회 기업·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학교 활성화(지역단위 특성화)

- 교육복합센터화(학교+도서관+문화·체육+복지시설) 추진 시, 실제 건물 리모델링·운영은 시·군·구 단위 예산과 조례로 실행
- '지역상생학교' 모델(농촌체험학습, 마을 공동체 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특색 있게 운영

○ 지역 원격학습센터 운영

- 농어촌·도서벽지 학생들이 디지털 수업이나 AI 튜터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장소·인력을 마련하고 기업·대학과 연계

○ 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 거점 센터

- 유아교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유보통합) 등은 실제로는 도(道)나 시 단위에서 구현
- 지역 특성에 따라 예산 매칭 비율, 프로그램 운영 규모 조절

(5) 교육 인프라의 재확립

■ 국가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 도입

- 미래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부여

-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민간기업이 협력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참여와 협력의 범위를 확대

○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재정립

- 교육부는 교육 전체 정책과 관련하여 기획, 법령 제정, 예산 배분, 대입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교육청은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실행하고, 학교 지원 및 운영 관리와 같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

※ 특히, 지역 우선 교원 배치 전략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 중앙과 지방 정책의 학교 현장에서 정합성 확보: 교사와 학교 관리자와가 소통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현장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교사들과의 소통 채널 확대
-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에 대해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역할에 대해 책임 지고 개선하는 구조 마련

○ 법·제도적 인프라 정비

- 유보 통합의 단인 관리체계 법적 위상 확보: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최소 1년 이상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역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확보
-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제를 위한 인프라와 법적 기반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원 수급, 학교 시설, 교과 선택권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 기반 확립
- 학교 자율성 확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 교사 채용, 예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 공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충 및 재배분

○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설정

- 고령화로 인해 복지·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교육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투자 영역으로 인식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
- 교육재정 투자가 단기 성과 위주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역량·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계획

○ 기회의 형평성 제고

- 사교육·민간 에듀테크 이용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저소득층과 취약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와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학교 단위에서도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 등,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정책 실행

■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 학습 정보 인프라 재확립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AI 교과서와 연계하기 위한 기술 표준 설계: 미래에 AI 교과서에 기반을 두는 학습이 진행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개별화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AI 프로그램의 학습이력 관리를 위한 기준(기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관리 활용¹²⁾
- 신기술에 바탕을 두는 실습 및 체험학습 구현: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활용하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코딩과 컴퓨터과학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공공 주도의 에듀테크 생태계 구축

- 에듀테크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민간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술·인프라·콘텐츠 지원
 - 예를 들어 공교육용 ‘AI 학습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되, 모든 학생이 양질의 디지털 교육자료와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체계 마련

○ 학교 현장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 학교가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혁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ICT 인프라 확충을 주도적으로 지원
- 현장 교사가 AR·VR·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설계해

○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모델 정립

- 디지털 학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 의식, 협업 역량, 인성 함양 등을 위해선 대면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 토론, 실험, 체험학습 등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도록 유도

12) 현재 NEIS에서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를 제출하며,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교과서 운영은 다수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학습이력 관리를 위한 기술 표준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혼합형 학습(hybrid learnin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 설계와 교과 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변경

■ 입시·평가 제도의 점진적 개편과 공정성 확보

○ 비교과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대학과 기업이 비교과 역량(프로젝트, 봉사, 창업 등)을 중시하게 되면, 여유 있는 가정이 다양한 활동·컨설팅을 통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방지
- 비교과 역량을 평가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검증 체계를 마련해 '스펙 부풀리기'를 막고, 교육 본질에 맞는 자기주도적 활동을 장려

○ 디지털 포트폴리오 체계 표준화

- 학생 개개인의 프로젝트·학습 기록,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 포트폴리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기록·검증·보안 기준 마련
-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시스템(PeLMS 등)을 운영하거나, 민간과 협력해 투명성을 높여야 지역·계층에 따라 정보 접근도가 달라지는 문제 해소 가능

○ 단계적·융합형 평가 방식 도입

- 전통적 지필고사뿐 아니라, 프로젝트 성과나 팀 협업 역량, 문제해결 능력,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개편
- 다만, 급격한 전환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범운영 → 확대 적용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교사 연수·학생 안내 등 준비 단계 마련

■ 공교육-사교육 간 균형 조정 및 협력 모델 모색

○ 공교육 주도의 에듀테크 플랫폼 강화

- 사교육이 첨단 기술을 선점하고 고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기보다,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공 에듀테크 플랫폼을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일관되고 균질한 학습 기회 제공
 - 이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교육의 고급 서비스 역시 공교육이 일부 흡수·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사교육 업체와의 협력 통한 상생 모델 개발

- AI·VR 콘텐츠 등은 민간 사교육 업체가 우수한 역량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공교육 기관이 이들과 협력하여 교재·콘텐츠 개발, 교사 연수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는 '공동 개발 모델'을 모색
- 다만, 협력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며, 특정 업체 독점이나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제가 필요

3) 영역에 따른 단계별 과제 추진 방안

■ 단기(2025~2026)

- 선전 배경 및 논리: 즉각적인 실천 가능 과제. 부분적 제도·정책 보완이 가능한 과제, 학교 현장에서 빠른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선정
 - 교사의 전문 역량 강화나 교수학습 혁신과 같은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
 -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문학습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제도 개선 등은 법·제도적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
 - 교사 양성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선도 지금 시작하면 곧바로 시험 운영이 가능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수정하는 형태로 진행 가능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인프라 구축은 정책 의사결정 후 예산 확보, 현장 배포 및 설치 등 단기간 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제
 - 즉, 단기 과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빠른 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현장에서의 수용성도 높은 사안에 초점

■ 중기(2027~2030)

- 선정 배경 및 논리: 구조적·제도적 변경을 본격화할 수 있으며, 단기 추진의 성과를 확장하고 안정화시키면서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통합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
 - AI 교사 활용 체계 확립, 교원 역량 재정의 등은 단순한 현장 적용 수준을 넘어, 교육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제도 개편과 예산 투입이 요구
 - 따라서 단기 과제에서 성과를 확인한 뒤, 기술·제도적 기반을 좀 더 다듬어 중장기적 안착 유도 필요
 - 교육 기회 불평등과 격차 해소, 전인교육(정서지원, 상담체계 등), 평생학습과 초·중·고 교육 연계 강화 등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중앙·지자체, 교육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
 - 이러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데에는 약 3~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2027~2030) 시점에 추진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 공교육 재정 확충 및 재배분 역시 국회, 정부 간의 합의와 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 따라서 중기 과제는 단기 성과를 토대로 보다 심화·확산하며, 구조적 개선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교육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가는 단계로 정의

■ 장기(2031~2040)

- 선정 배경 및 논리: 교육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규모 거버넌스 개혁과 단기·중기 성과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구조가 확립될 수 있는 과제로 선정
- 인간 교사와 AI 간 협업 구조 설계, 공동체 역량 교육(SEL) 강화, 국가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등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
- 이는 법·제도, 예산, 사회 인식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가능
- 입시·평가 제도의 대폭 개편, 공교육-사교육 간 협력 모델 정착 등도 실험적 시도와 충분한 검증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 접근이 필수적
- 학교의 지역사회 허브화 역시, 기존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므로 전 사회적 합의와 인프라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문화적 변화가 뒤따라야 가능
- 즉, 장기 과제는 사회·문화·제도 전반에 걸친 거시적 변화를 전제로 하며, 단·중기 성과를 안착시키고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최종 단계

■ 시기별 구분의 의의

- 단기(2025~2026): 교육현장에서 즉각적인 실천과 성과와 부분적 제도 보완·정비를 통한 기술·역량·인프라 구축의 '기초 다지기'
- 중기(2027~2030): 단기 성과의 확장·안착을 확인하고, 구조적·제도적 개선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 평생학습 연계 등 '통합적 과제' 본격 추진
- 장기(2031~2040): 근본적·혁신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과 사회·문화적 변화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
- 결국, 단·중·장기로 구분함으로써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하고, 점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변화의 유도가 가능
- 단기 과제로 바로 실행 가능한 사안을 추진해 현장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게 하고, 중기 과제에서는 구조적·제도적 혁신을 본격화해 안정화시킨 다음, 장기 과제에서 교육계 전반을 아우르는 대대적 개혁을 이루는 전략적 로드맵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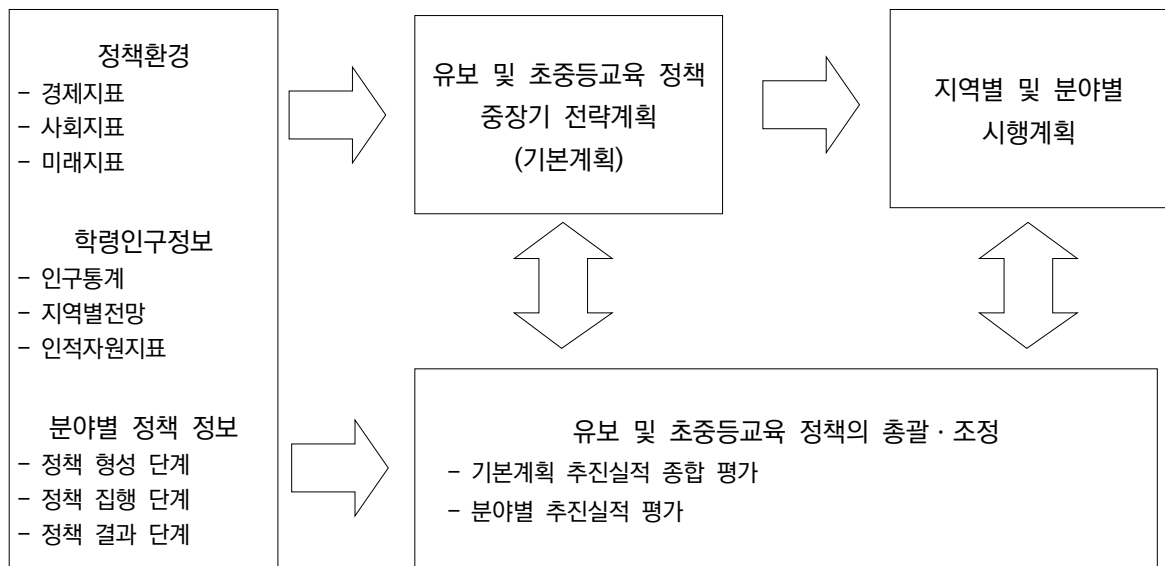
〈표 22〉 영역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과제

	교육 품질 고도화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 창출	생애 학습 이동성 확립	지역의 정책추진 역량 확보	교육 인프라 재확립
단기 (2025-2026)	- 교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 혁신(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연수, 워크숍, 전문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 교사 양성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선(교사대사범대 교육과정 조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에 제도 보완 가능)	재능 발굴과 역량 중심 교육 강화(기존 교육과정수업방식에 역량 중심 접근법 도입)	체험형 학습 및 프로젝트 활성화(교과 수업 내 프로젝트 수업 확대, 지역사회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자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학습 인프라 구축(학교 현장에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학습 플랫폼 등 ‘기본 인프라’ 확대 보급)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교육과정 및 교사 역량이 어느 정도 구축된 이후, 초·중등 전반에 걸친 디지털 교육 구현)
중기 (2027-2030)	AI 교사 활용 체계 확립과 교원 역량 재정의(AI 기반 교육자원 도구 활용 가이드라인 및 지원 체계 구축)	- 교육 기회 불평등 및 격차 해소(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학습 자원, 학습 안전망 구축 등) - 전인교육을 통한 정서적 불안 해소(학생 정신건강정서지원 체계 구축, 상담교사 확충, 교과 융합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학습 체계와 초·중·고교육의 연계 강화(중등 이후 직업·진로교육, 지역 평생교육원과 학교의 연계 모델 구축 등)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활력 제고(중기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산·학·관 협력) 발굴)	공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충 및 재배분(교육재정 배분 구조 개선, 필요 자원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보완 등)
장기 (2031-2040)	인간 교사와 AI 간 협업 구조 설계(실험적인 ‘혼합형 학습’이나 AI 코칭 모델 시범 사업 등)	공동체 역량 교육 및 사회정서학습(SEL) 교육 강화(교과서·교육과정 전반에 SEL 요소 내재화, 지역사회가정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동체의 허브로서 ‘학교’의 위상 전환(학교 시설·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공유,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공간화 등)	- 국가 교육 거버넌스 재정립(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학교 간 권한 재조정, 교육자치 강화 등 큰 틀 개혁) - 입사평가 제도의 점진적 개편과 공정성 확보(공정성과 다양성을 모두 고려한 평가 선별체계(대폭 개편) - 공교육·사교육 간 균형 조정 및 협력 모델 모색(사교육 의존도 축소, 공교육·사교육 협력형 프로그램 정착)

○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 확립

- 앞서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체계적으로 구체화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계획(중장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 결과를 환류하는 추진체계 확립이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지만, 유보 및 초중등교육에 특화된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산업체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환경과 관련해서는 교육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교육의 사회 문화적 위상, 미래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분석과 인구통계 및 인력수급전망을 바탕으로 직업, 기술, 산업 분야별 소요 인력을 산출함.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 중장기 전략계획(기본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와 중앙정부가 협업하여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의해 정책의 기획과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
- 정책의 총괄·조정은 미래에 교육, 고용, 지역공동체 등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또는 수정 기본계획에 반영

[그림 29] 유보 및 초중등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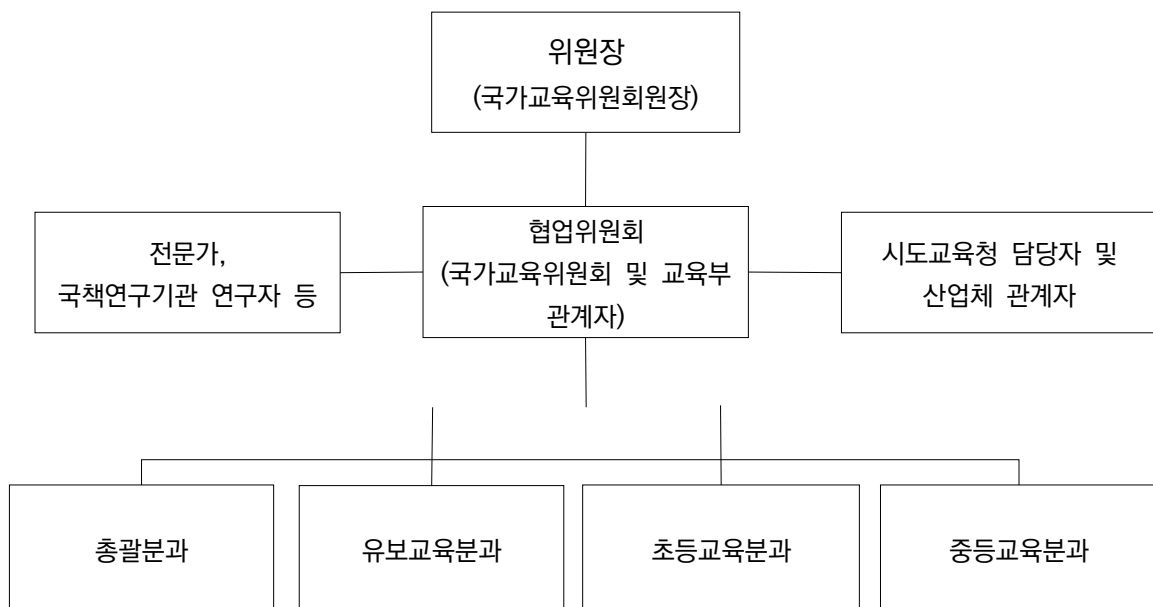
○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협업위원회를 통해서 1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보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생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

- 협업위원회는 위원장 아래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를 확립함에 의해 기획과 정책 실행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에 네 개 분과의 배치를 고려
- 총괄분과는 중장기계획 수립의 총괄, 전반적인 정책 정보, 인적자원 정보, 환경분석 등의 기초 정보를 생산하여 정책의 총괄조정을 기획하고, 나머지 분과는 분야별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

[그림 30] 가칭 유보 및 초중등교육 정책 추진위원회의 구상도



○ 향후 과제

- 현재의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계획의 수립할 전문성을 결집하기는 어려우며,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
- 또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 이외에 지자체 또는 공동체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이들의 참여도 중요
-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미래의 매우 중요

참고문헌

- 김형만(2021), 인적자원 이론과 정책, 박영사.
- 김형만 외(2024) 직업·평생교육 발전 방안 연구, 국가교육위원회.
- 김경애 외(2015). 학생 수 감소 시대 미래지향적 육체제 조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김아름, 최윤경, 심현기, 박유경(2023).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곤련 지방단위 업무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3-01.
- 김지영 (2018).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342호.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3.12.05.), 교육부.
- 교육부(2023).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
- 대한민국 정부(2005; 2010; 2015; 2020). 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박남기(2021) 저출산 시대 대응을 위한 초·중등교육 관련 이슈와 정책 방향 탐색. 열린교육연구, 29(1), 189-216.
- 박성우 (2019). 일본 제1행복도시 후쿠이현, 비결은 ‘교육혁신’, 제주의 소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290> (검색일: 2024.09.29.)
- 보건복지부(2022. 1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 우해봉 이상립, 장인수, 강성호, 김근태, 김안국, 김정호, 독고순, 박시내, 외 (2021).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저출산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회. 협동연구총서 21-10-01.
- 이길재, 이정미, 심현기, 박태양(2023). 시도교육청 교원 정원 운영 분석·진단. 교육부 교원정책중점연구소 수시연구-2.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역고용 동향브리프』, 2018년 7월호, 2-21.
- 이성희, 김진희, 이상민, 이선영, 최예슬, 김민희, 김용, 심현기, 이덕난(2023).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연구보고 RR2023-02.
- 이형근 (20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11).
- 앤디 하그리브스, 데니스 셸리 (2023). 학교교육 제 4의 길 2(이찬승, 홍완기 역)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장원섭(2015), 장인의 탄생, 학지사.
- 정종우, 이동원, 김혜진 (2024). 임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4-26호
- 켄 로빈슨, 루 애로니카 (2015).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정미나 역) 21세기북(원본출판 2015년)
- 파시 살베리 (2016)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이은진 역) 푸른숲
-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4), OECD PIAAC 2주기 2023 성인스킬조사 주요 결과.
- 황에스터(2018).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9539> (검색일: 2024.09.29.)
- 허문구 외(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 Baker, M., Gruber, J., & Milligan, K. (2005). Universal child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4), 709-745.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11832/w11832.pdf
- City of Hamilton (2023). City's Implementation of Early Learning Child Care Plan Confirms Significant Cost-Savings for Hamilton Families.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www.hamilton.ca/city-council/news-notice/news-releases/citys-implementation-early-learning-child-care-plan>
- City of Hamilton (2024).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greement.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www.hamilton.ca/build-invest-grow/operating-business/child-care-licensees/canada-wide-early-learning-and-child-care>
- DesignSingapore Council (2024). National design education committee unveils blueprint for Future Design School to prepare students and workforce for changing economy.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designsingapore.org/news/national-design-education-committee-unveils-blueprint-for-future-design-school-to-prepare-students-and-workforce-for-changing-economy/>
- Fortin, P. (2021). What can we learn from Quebec's child care experiment?, *The Globe and Mail*.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theglobeandmail.com/opinion/article-what-can-we-learn-from-quebecs-child-care-experiment/>
- Fukui Prefectural Government (2024). Education in Fukui,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pref.fukui.lg.jp/english/education.html>
- Education Disruptor (2024). The Future of Education: Transforming Canada's Schools.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educationdisruptor.net/the-future-of-education-transforming-canadas-schools/>
- Eric, A. (2022). How does Quebec's universal daycare work, and what can the national \$10-a-day programs learn from it?, *The Globe and Mail*.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quebec-universal-daycare-lessons-10-a-day/>
- European Commission (2020).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Finland.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ec.europa.eu/social/BlobServlet?docId=13637&langId=en>
- European Commission (2023).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ational Education Systems, Finland.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inland/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 European Commission (2023). Lifelong learning strategy, Finland.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inland/lifelong-learning-strategy>
- Fukui Prefectural Government(2024). Education in Fukui.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pref.fukui.lg.jp/english/education.html>

- Government of Canada (2020). Canada's Youth Policy.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www.canada.ca/en/youth/programs/policy.html>
- Government of Canada (2021). Budget 2021: A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Plan.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1/04/budget-2021-a-canada-wide-early-learning-and-child-care-plan.html>
- Government of Ontario (2024). Canada-Ontario early years and child care agreement.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www.ontario.ca/page/canada-ontario-early-years-and-child-care-agreement>
- Isha, S. & Wibawarta, B. (2023).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Open*, 4, 100239. <https://doi.org/10.1016/j.ijedro.2023.100239>
- Kamenetz, A. (2019). The teacher's role in Finland's phenomenon-based learning. KQED.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kqed.org/mindshift/55006/the-teachers-role-in-finlands-phenomenon-based-learning>
- MEXT (2020a). Education in Japan Beyond the Crisis of COVID-19: Leave No One Behind.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mext.go.jp/en/content/20200904_mxt_kouhou01-000008961_1.pdf
- MEXT (2020b). Implementation Plan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Japan (The Second ESD Implementation Plan).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mext.go.jp/en/unesco/title04/detail04/sdetail04/mext_00030.html
- McClusky, M. (2018). The global legacy of Quebec's subsidized child daycare, Childcare Canada.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childcarecanada.org/documents/child-care-news/19/01/global-legacy-quebecs-subsidized-child-daycare>
- Manitoulin-Sudbury District Services Board(MSDSB) (2022). Update: Implementation of the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Plan between the Province of Ontario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msdsb.net/update-implementation-of-canada-wide-early-learning-and-child-care-plan-between-the-province-of-ontario-and-the-government-of-canada>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18). 'Learn For Life' - Preparing Our Students To Excel Beyond Exam Results.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moe.gov.sg/news/press-releases/20180928-learn-for-life-preparing-our-students-to-excel-beyond-exam-results>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2). Removal of mid-year exams will help nurture joy for learning.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moe.gov.sg/news/forum-letter-replies/20220317-removal-of-mid-year-exams-will-help-nurture-joy-for-learning>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a). Learn for Life: Forging Our Collective Future.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moe.gov.sg/news/press-releases/20230301-learn-for-life-forging-our-collective-f>

uture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b). What you need to know about Full SBB.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moe.gov.sg/news/edtalks/what-you-need-to-know-about-full-sbb>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c). Exemption from taking a Mother Tongue Language.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moe.gov.sg/primary/curriculum/mother-tongue-languages/exemption>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d). Learning a Mother Tongue Language in primary school. Retrieved September 29, 2024, from <https://www.moe.gov.sg/primary/curriculum/mother-tongue-languages/learning-in-school>
- OECD (2017),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ll: Overcoming Inequality throughout the Life Cours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8), Teachers as Designers of Learning Environments: The Importance of Innovative Pedagogies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0). Education Policy Outlook in Finland. OECD Educational Policy Perspectives No.14. <https://www.oecd-ilibrary.org/deliver/f162c72b-en.pdf?itemId=%2Fcontent%2Fpaper%2Ff162c72b-en&mimeType=pdf>
- OECD (2021). Education Policy Outlook 2021: Shaping Responsive and Resilient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5e40a16-en>
- OECD (2022). Finland's Right to Learn Programme: Achieving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OECD Education Policy Perspectives, No. 61. <https://doi.org/10.1787/65eff23e-en>
- OECD (2024), Do Adults Have the Skills They Need to Thrive in a Changing World?: Survey of Adult Skills 2023, OECD Skills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b263dc5d-en>.
- OECD (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4,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24, OECD Publishing, Paris.
- People for Education (2024). \$10 a day child care for all – Are we there yet? People for Education.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peopleforeducation.ca/our-work/10-a-day-child-care-for-all-are-we-there-yet/>
- Simcoe County (2024).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Directed Growth. Retrieved September 28, 2024, from <https://simcoe.ca/residents/children-services/early-learning-child-care-poster/canada-wide-early-learning-and-child-care-directed-growth/>

부록 1. 2050년 미래 초중고 교육의 4가지 시나리오

■ Continue: 문제와 기회의 공존

2050년, 한국의 교육 현장은 지난 몇십 년간의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분명히 새로운 풍경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지역에 따라 폐교가 늘어났으며, 지역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여전히 사교육 의존, 그리고 입시 중심의 풍토라는 문제들을 완전히 떨쳐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현실은 곳곳에서 느껴진다. 한때 가득 찼던 교실은 대부분 빈 자리가 많고, 작게 편성된 학급 단위로 공부하는 풍경이 흔해졌다.

수도권의 대형 학교와 지방의 소규모 학교 간에는 인프라와 교사 수급에서부터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도시 지역은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어 폐교가 속출하고,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는 학교들도 초·중·고 과정을 한데 묶어 통합 운영하는 등 옛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다. 교사들은 늘어나는 디지털 장비와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려 애쓰지만, 지역에 따라 인프라 보급률이 떨어져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곳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환경 전체가 낙후된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AI와 AR, VR 등 최첨단 기술이 교실과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학생들은 태블릿이나 홀로그램 장치를 통해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학습하고, 인공지능이 그들의 학업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전통적인 교과뿐만 아니라 로봇 공학, 코딩, 미디어 제작,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도 많아졌다. 교사들은 그 과정에서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협업과 토론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창의력과 인성, 윤리의식을 길러내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예술과 철학, 심리학 과목의 비중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입시에만 집중하려는 학부모와 학생이 존재해 양극화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롭고 풍부한 학습 경험이 가능해졌지만, 문제는 그 혜택이 모든 지역과 학생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도시와 주요 혁신학교에는 최신 장비와 잘 훈련된 교사들이 몰리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은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50년이 되었어도 교육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공교육 투자 우선순위가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입시 문화 역시 변화와 정체가 동시에 존재한다. 대학과 기업들은 성적뿐 아니라,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 봉사, 협업 능력, 창업 성과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에 반영하려 노력한다. 이런 ‘비교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입시 제도가 겉보기에는 다양해졌지만, 실제로는

이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낸다. 전문 컨설팅 업체나 AI 기반 개인 교습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은 더욱 세밀하고 밀착된 지도를 받는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은 좋은 기기를 마련하기도, 양질의 학습 자료와 멘토를 접하기도 어려워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평생교육이 확산되면서 중장년층도 학교라는 울타리를 찾아온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술을 익히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전국의 평생학습 센터와 민간 교육 서비스는 활기를 띤다. 기업과 지자체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AI 및 디지털 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우려 애쓴다. 다만, 프로그램의 질이 제각각이어서 어떤 곳에서는 첨단 실습 시설과 전문 강사진이 갖춰져 있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는 이마저도 수강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글로벌 교류 역시 활발해졌다. 수도권에 위치한 몇몇 학교들은 해외 명문 대학이나 국제기구와 연계해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개설하고, 첨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학생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언어 역량과 문화 이해뿐 아니라, 무대가 ‘한국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자신감까지 심어준다. 문제는 이 기회 역시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고속 인터넷과 우수 교사, 탄탄한 재정 지원이 필수인데, 현실에서는 소수의 학교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서류형 학위보다는 실제 역량과 이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점은 큰 변화로 꼽힌다. 개인의 학습 기록과 경력을 전자 포트폴리오나 디지털 이력관리 시스템(PeLMS)으로 관리하고, 이를 채용이나 입학, 진급 심사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흐름이 확산된다. 학교나 학원이 아닌 온라인 MOOC나 VR 강의, 국제 교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얻은 역량도 국가나 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덕분에 학생들은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혹은 한번 정해진 전공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듯 2050년의 교육은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개인 맞춤형·평생학습 시대를 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격차, 계층 간 격차, 입시 문화의 답습 등 과거에서 이어져 온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형태로 남아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 그리고 상위층과 하위층 사이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으며, 기술 인프라와 교사의 전문성, 교육행정 정책이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2050년 한국 사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 모델과 개인화된 기술 환경이 자리를 잡았음에도 여전히 ‘인간다운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고민이 이어진다. 지식 전달이 자동화된 시대에서 학생들은 오히려 비판적 사고나 책임감, 공감 능력을 제대로 훈련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자 해도, 입시 문화나 지역별 예산 차이 등으로 인해 현실의 장벽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현장 곳곳에서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해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수업 방식이 시도되며,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세대 간의 학습 폭이 넓어지는 희망적인 변화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결국 2050년에도 한국의 초·중·고 교육은 문제와 기회가 뒤섞여 있다. 예전보다 선택지가 늘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짊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지역 격차, 사교육 의존, 입시 문화라는 해묵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AI와 디지털 환경 덕분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동시에 존재한다. 공교육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갈등 속에서도 곳곳이 미래형 수업 모델을 시도하고, 교사들은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인간적 성장 지도’에 집중하려 애쓴다. 반면, 사교육 업계는 끊임없이 진화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AI 인프라 격차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 Collapse: 학교의 파산

2050년의 한국은 더는 학생들이 등굣길로 북적이지 않는다. 길가에 서 있던 교문들은 낡아 녹슬고, 정적만 감도는 운동장에는 종종 아이들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여겨졌던 초·중·고등학교들은 이제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간신히 버티는 형편이다. 학령인구 자체가 급감해 더 이상 학교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는 노인 복지와 의료 문제에 예산을 쏟아붓느라 공교육 현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다.

사실 초·중·고 공교육이 망가지는 조짐은 2030년대부터 서서히 나타났다. 저출산이 가속화되어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지방의 작은 학교들이 하나둘 폐교되기 시작했고, 수도권에서도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이 거듭되었다. 그사이 에듀테크와 AI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굳이 낙후된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에서 고성능 디바이스만 있으면, AI가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주었고, 실시간으로 성취도 분석과 개별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었다. 소위 ‘에듀테크 스튜디오’라는 사교육 센터는 화려한 AR·VR 콘텐츠를 갖추고, 개인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교과 과정을 설계해 주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국가 주도의 공교육 플랫폼도 뒤늦게나마 도입됐지만, 시장을 이미 장악한 민간 플랫폼과 비교해 품질이나 접근성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기술 혁신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공교육 체제는 급격히 신뢰를 잃었다. 지식 습득을 중시하던 기존 방식은 2040년대 들어 본격화된 ‘AI-로봇 협업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았다.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팀 협업 역량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획일적인 교과 수업과 지식 암기는 더 이상 매력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혁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은 예산 부족과 관료적 절차에 발목 잡혔고, 교사들은 ‘AI 시대의 역량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웠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학교가 일부 생겨났지만, 그 역시 한정된 재정과 인력 문제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렇게 학교가 위기에 빠진 사이,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사교육이나 AI 플랫폼에 눈을 돌렸다. 기업이나 사교육 기관은 ‘학교보다 더 앞선 기술’을 내세우며 학습자 맞춤형 솔루션을 계속 선보였다. 월정액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시간에 AI 튜터와 1:1로 수업을 듣고, 메타버스 공

간에서 전 세계 인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낭비라는 인식까지 확산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고가의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구비해 ‘홈스쿨링’에 준하는 환경을 갖추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질 낮은 무료 또는 저가 플랫폼으로 몰리며 극단적인 교육 격차가 나타났다.

결국 2050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건물 자체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린 곳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소수의 학교마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교사 수는 턱없이 모자라고, 그나마 남은 교사들은 행정 업무나 복지 업무에 시달린다. 젊고 유능한 인력은 대거 사교육 업체나 IT 기업으로 떠나, 교실 현장은 중·장년층 교사들 중심으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 되었다. 한때 인성 교육과 공동체 함양의 근간이었던 ‘학교’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아이들과 청소년을 불러모으지 못한다.

학교가 사라지자, 아이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자라난다. 동년배와 어울리는 교실 문화 대신, 메타버스와 SNS가 어린 학생들의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었다. 대면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생 간 갈등은 즉각적인 폭력이나 분쟁보다는 온라인 괴롭힘 등의 형태로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했다. 학교가 젊은 세대가 공동체성을 익히는 통로였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뒤늦게야 ‘공동체 교육’을 복원하려 시도했지만, 폐교가 속출한 뒤라 제도적·물리적 인프라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일부 대안적 흐름은 존재했다.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에서는 혁신가들과 학부모 모임이 힘을 합쳐 ‘커뮤니티 스쿨’을 만들거나, 자연 속 체험학습 모델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무조건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서로 어울리며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장려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 가정이 AI 플랫폼에 의존하는 분위기라 이러한 시도는 소수 운동으로 머무를 뿐이었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공공의 재화’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품목’이 되어버리자,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할 때마다 구독형 강의를 수강하고 짧은 기간의 자격증을 따는 식으로 학습을 이어 나간다. 대학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 되었고, 기업들도 정규 학력을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실무 능력과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더 직접적으로 검증해 채용을 결정한다. 한편, 이런 구조에서도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양질의 학습 기회를 얻기 어려워, 사회·경제적 계층 간 격차가 더욱 극심해진다.

초·중·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2050년의 한국은, 한때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과 공동체 형성을 가능케 했던 길을 잃어버렸다. 아이들은 AI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지식을 습득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과 사회적 책임, 정서적 성장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상아탑 대신 거대 에듀테크 업체와 사교육 시장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교육은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역량을 원하는 때에만 구매하는 일’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 속에서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지역 사회는 이미 청년 인구가 떠나 도시 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을 지켜내야 했는지, 왜 공교육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녔는지 뒤늦게 깨닫는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 공교육 시설이 폐쇄되었고, 교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다시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결국 2050년 한국에서 초중고 교육의 붕괴라는 극단적 상황은, 학교라는 제도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이루어내는 공적 장치였음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교육이 지닌 공동체적·공익적 가치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이, 한 번 무너진 뒤에야 비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폐허 위에서 일부 혁신가들이 작은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려 애쓰고 있지만, 사회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그 노력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함이 감돈다.

‘학교의 파산’ 이후, 사람들은 묻는다. 이토록 번영하던 나라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IT 강국으로 자리 잡았던 나라가 어떻게 교육마저 붕괴시키게 되었는가?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간과해 온 문제들—지독한 저출산, 고령화, 지역 불균형, 교육 재정 우선순위, 공교육 혁신의 실패—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미래 이익만 좇고, 사적 서비스로만 교육을 대했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되돌릴 수 없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 Discipline: 강력한 통제와 규제 기관으로서의 학교

2050년의 한국은 더는 예전과 같은 삶의 풍경이 아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된 이상 기후와 기후 난민, 해수면 상승,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사회 전반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도시의 여름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덥고, 겨울에도 폭설 대신 흄비 같은 이변이 자주 나타난다. 이런 재난이 거듭되자, 정부는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라는 강력한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개인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총량 규제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관리하도록 강제한다. 대중들은 “지금은 통제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에 비교적 순순히 따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 역시 탄소 배출량 억제, 자원 절약,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나 입시를 위해 경쟁하는 곳’이었던 학교는 이제 ‘사회·환경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더는 교실에 난방을 맘껏 틀 수 없고, 전자 기기는 필요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실 한쪽 벽면에서는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 지수가 뜨는데, 그 수치가 초록색에서 노란색, 주황색으로 변지면 교사와 학생들은 다급히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학생들 손에 쥐어졌던 최신 스마트폰도 이제는 지문 인식 게이트나 관리자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통제된

편의품’이 되었다.

교육과정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다. 국어, 영어, 수학처럼 예전의 핵심 과목 비중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윤리·도덕·환경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입식 교과서는 서서히 사라지고, 프로젝트나 토론 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문제를 푸는 대신, 지역 하천으로 나가 수질 검사와 쓰레기 수거를 하거나, 학교 텃밭에서 직접 채소와 과일을 기르고, 수확한 농작물을 급식에 활용한다. 또, 분기마다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가 정규 과목처럼 진행되어, 자연재해 현장을 복구하거나 고령자들과 함께 생태 공원을 가꾸는 등 공동체 활동이 생활이 된다. 성적표에서도 ‘협력 능력’과 ‘공동체 기여도’가 대학 입시와 취업의 큰 평가 요소로 자리 잡았기에, 이전 시대의 ‘혼자 치고 나가서 1등하기’ 문화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모습 역시 크게 바뀌었다. 교사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강사라기보다, 학생들이 올바른 윤리적·환경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코치’나 ‘멘토’ 역할에 가깝다. 아침에 교실 문을 열 때부터, 책상 정리나 점심 잔반 처리, 공공 교통 이용 상황까지 학생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한다. 학부모들 또한 높은 성적보다 자녀가 어떤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환경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자녀에게 대학 입시 사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들이 있긴 하지만, 사교육 자체가 법적·사회적으로 부정적 시선을 받으며,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되다 보니, 이제는 교묘하게 숨어들어가야 할 만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체계가 완전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디까지가 ‘공익적 통제’고, 어디부터가 ‘개인의 자유 침해’인지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대한 갈등이 커진다.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후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옹호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기술과 자본이 풍부한 도시는 스마트 센서나 최첨단 녹색 건물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서 또 다른 빈부 격차와 지역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변화를 희망적으로 본다. 이전 시대에 비해, 학생들은 협동과 소통에 훨씬 능숙해지고, 봉사와 생태 보전에 참여하는 문화가 널리 퍼졌다. 학교 텃밭에서 손수 키운 농작물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웃음짓고,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하천 정화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미래 세대가 “지금의 기후 재앙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 길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2050년의 학교는, 강력한 통제와 규제가 뒤섞인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생태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말이 현실로 구현되는 셈이다. 물론 이 길이 무조건적인 디스토피아인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인가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예전처럼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살 길을 찾는’ 교육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고된 길인지, 아니면 억압적인 질서 속의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인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도전과 선택에 달려 있다.

■ Transformation: ‘학교’라는 개념의 축소

2050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과거처럼 강의실, 책상, 칠판이 가득한 모습이 더 이상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집 가까운 ‘학습 스튜디오’에 모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집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VR 교실에 접속한다. 오전 9시 정각에 올리던 종도, 오후 3시에 일괄적으로 집에 가는 풍경도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 학생들은 인터넷을 열고, 자신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나 AI 교사의 가상 강의실로 자유롭게 들어간다. ‘등교’와 ‘하교’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 셈이다.

이들이 접속하는 ‘교실’의 주인은 인간 교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AI 교사다. 웨어러블 기기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에서 전송되는 뇌파, 맥박, 집중도 등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AI 교사는 학생이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학습 난이도가 맞는지, 스트레스 지수는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만약 어떤 과제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AI는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흥미로운 예시 문제로 전환해 ‘성공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반대로 학생이 특정 분야에 강렬한 호기심을 보이면, 미리 준비된 심화학습 자료를 추천하거나, 다른 학생 혹은 전문 멘토와 협업할 수 있는 가상 스페이스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인간 교사의 역할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여전히 교사는 존재하지만, 더 이상 하루 종일 칠판 앞에서 지식을 설명하지 않는다. AI가 1대1 맞춤형 피드백을 담당하는 동안, 인간 교사는 정서적·윤리적 멘토로서 학생을 이끈다. 예를 들어, VR 실험 중에 어떤 윤리적 딜레마를 마주했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AI의 중립적 분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며 길을 찾아준다. 지식을 가르치는 강사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내면과 관계를 돌보는 ‘코치’에 가까운 셈이다.

한편, 초등·중등·고등 교육을 나누던 기존의 학령 구분도 갈수록 모호해졌다. 과거에는 7살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해 6년을 다니고, 그다음 3년의 중학교와 3년의 고등학교를 거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그런 수순을 굳이 밟을 이유가 없어졌다. AI 교사 시스템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흥미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학습 모듈(Module)’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열 살짜리 학생이 선형대수학의 기초를 이해할 정도로 수학 실력이 출중하다면, 초등 교과 범위를 벗어나 바로 심화 모듈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열다섯 살 학생이 생물 기초가 부족하다면, 초등 단원부터 다시 복습하되 자신의 나이나 학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목 단위로 성적을 매기던 전통도 사라져 간다. 숫자로만 표기된 시험 점수나 등수 대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학생의 역량을 증명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예전이였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을 봤다’는 식으로 성적표가 발급됐겠지만, 2050년 학생들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며, 어느 부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는가?”를 디지털 기록으로 남긴다. 그리고 이 기록은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정부나 기업, 대학이 필요할 때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학생에게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고용 제안을 하기도 한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성과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된 셈이다. 열여섯 살짜리 학생이라도, 이미 AI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 혁신적인 앱을 개발해 사회적 이익을 창출했다면, 성인의 나이가 되기 전에도 기업의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물론 이런 미래 교육 모델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단 교사들의 재교육 문제가 대두된다. AI가 대부분의 지식 전달을 맡게 되면서, 인간 교사는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어떤 역량을 더 개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게다가 모든 교육이 첨단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기술 격차가 심한 취약 지역이나 빈곤층 학생들이 오히려 더 뒤쳐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공공 학습 센터나 장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꿈의 교육’은 특정 계층에게만 열리는 문이 될 공산이 크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윤리다. 학생 개인의 뇌파, 집중도, 감정 상태 등이 AI에게 낱알이 전송되므로, 그 엄청난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블록체인으로 보안이 강화된다고 해도, 생체 데이터가 노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 AI가 분석해 내놓는 학습 경로가 학생의 잠재력을 온전히 반영하는지, 혹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의 교육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 맞춤형’이자 ‘창의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 급급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곧 학습의 핵심이 된다. AI 교사가 제공하는 과학적·논리적 안내와, 인간 교사가 주도하는 윤리·정서적 멘토링이 조화를 이루면서, 교육은 점차 ‘인간성을 기술과 접목해 확장하는 장(場)’으로 자리 잡아 간다.

결국 2050년의 교육은 ‘학교’가 지닌 물리적·제도적 의미가 희미해지는 동시에, 배움의 기회는 장소와 시간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각자의 재능과 흥미에 맞춰 무한히 분기되는 학습 경로 속에서, 아이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한 사고방식과 다채로운 협업 능력을 기르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윤리·제도적 과제 또한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전을 넘어, 인간 교사와 AI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휴머니즘과 기술의 조화’가 과연 얼마나 성숙한 결실을 맺을 것인가, 2050년대 이후 교육의 진정한 모습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부록 2 주요 통계 자료

〈표 1〉 시기별 주요 초·중등교육 정책

시기	주요 정책
문교부 (1948-1990)	- 새교육운동전개, 1945 - 초등학교 의무교육정책, 1946 - 6-3-3-4 단선형 학제, 1948 - 교육의과학화 운동 전개 195* - 라디오학교, 1951 - 초등학교 실과교육; 1차·3차교육과정 1954 - 중고등학교 실과교육; 1차교육과정, 1954 - 초등학교 의무교육 6년계획, 1954 - 교육과정 개편운동 전개, 1954 -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 1962 -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계획, 1962 - 고등학교 실과교육; 제2차교육과정, 1963 - 제2차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 1967 - 실과교사 특별수당 지급규정 제정, 1968 -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 1968 - 중학교입사: 무시험 진학제도, 1969 - 완전학습 수업전략, 1969 -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정책, 1971 - 사립학교 시설설비 지원, 1971 - 한국교육개발원, 라디오학교 방송인수, 1972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973 - 중고등학교 실과교육; 3차교육과정, 1973 - 새수업체제, 1973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센터 설치 1974 - 고등학교 추천입학제; 고등학교평준화, 1974 - KBS 텔레비전, 과외방송 송출, 1980 - 한국교육개발원, TV고교교육방송 실시, 1980 - 7.30교육개혁조치: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해소방안, 1980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 개국, 1981 - 초등학교 실과교육; 4차·6차교육과정, 1982 - UHF 교육방송 개국, 1981 - 초등학교 실과교육; 4차·6차교육과정, 1982 - 중고등학교 실과교육; 4차교육과정, 1982 - 중학교의무교육제, 1984 - 중고등학교 실과교육, 제5차교육과정, 1987 - 학내 의사수렴기구 설치, 운영, 1988 - 한국교육개발원부설 교육방송(EBS)으로 분리, 독립, 1990
교육부 (1990-2001)	- 중고등학교 실과교육; 6차교육과정, 1992 - 열린교육운동 확산, 1993 - 5.31 교육개혁: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5 - 1교실 1인터넷PC, 1996 - 에듀넷 설립, 1996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1996 - 초·중등학교 학교평가 실시, 1996 - 교육정보화정책: 교육정보화 촉진계획 입안, 1996 - 중고등학교 실과교육; 7차교육과정, 1997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통: RISS, 1998 - 초등학교 실과교육; 7차교육과정, 1998 -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수업), 1998 - 초등학교 급식 전면화, 1999 - 수행평가제, 1998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설립; KERIS, 1999 - 고등학교 급식 전면화, 1999 - 학교종합평가 실시 방안 제시, 1999 - 컴퓨터 선택교과로 개설, 2000 -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2000
교육인적자원부 (2001-2008)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4 - 중학교 급식 전면화, 2002 - EBS 위성방송, 수능강의 및 무료 인터넷 서비스, 2004 - 초·중등학교평가 이원적 평가체계, 2006 - 중고등학교 실과교육; 2007년-2015년 개정 교육과정, 2007 - 2007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7 - 학교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실시로 전환, 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3)	- 사교육비 대책을 위한 대선공약: 학교민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2008 - 교과교실제, 2008 -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9 - 학교평가운영위원회 도입, 2010 -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2011 -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적용, 2011 -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자율성 법적 보장, 2012 - 초·중등학교 평가의 성과중심주의 도입, 2012 - 초·중등학교 평가 권한 교육감 이양, 2012
교육부 (2013-현재)	- 전자정부 3.0에 따른 교육부 정점과제, 2013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2013 - 사교육비 부담 완화, 2013 -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2013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2013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2013 - 초·중등 SW교육 활성화 방안, 2015 - 자유학기제, 2016 - 중학교 자유학년제, 2018 - 늘봄학교 추진 방안, 2024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

자료: <http://history.moe.go.kr/m4-n3>에 최근 정책 추가.

〈표 2〉 PISA 2022 OECD 회원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

수학			읽기			과학		
국가명	평균	OECD 국가순위	국가명	평균	OECD 국가순위	국가명	평균	OECD 국가순위
일본	536	1 ~ 2	아일랜드	516	1 ~ 6	일본	547	1 ~ 1
대한민국	527	1 ~ 2	일본	516	1 ~ 6	대한민국	528	2 ~ 5
에스토니아	510	3 ~ 4	대한민국	515	1 ~ 7	에스토니아	526	2 ~ 4
스위스	508	3 ~ 5	에스토니아	511	1 ~ 7	캐나다	515	2 ~ 9
캐나다	497	5 ~ 13	캐나다	507	1 ~ 8	핀란드	511	3 ~ 14
네덜란드	493	4 ~ 20	미국	504	1 ~ 14	호주	507	4 ~ 15
아일랜드	492	5 ~ 18	뉴질랜드	501	3 ~ 12	뉴질랜드	504	4 ~ 20
벨기에	489	5 ~ 20	호주	498	5 ~ 14	아일랜드	504	4 ~ 20
덴마크	489	5 ~ 19	영국	494	6 ~ 17	스위스	503	5 ~ 21
영국	489	5 ~ 20	핀란드	490	6 ~ 20	슬로베니아	500	5 ~ 21
폴란드	489	5 ~ 20	덴마크	489	6 ~ 23	영국	500	5 ~ 23
오스트리아	487	5 ~ 20	폴란드	489	6 ~ 24	미국	499	4 ~ 26
호주	487	6 ~ 20	체코	489	7 ~ 23	폴란드	499	5 ~ 23
체코	487	5 ~ 20	스웨덴	487	7 ~ 25	체코	498	5 ~ 24
슬로베니아	485	6 ~ 21	스위스	483	9 ~ 27	라트비아	494	7 ~ 26
핀란드	484	6 ~ 24	이탈리아	482	9 ~ 27	덴마크	494	7 ~ 26
라트비아	483	6 ~ 25	오스트리아	480	10 ~ 28	스웨덴	494	7 ~ 26
스웨덴	482	6 ~ 27	독일	480	9 ~ 29	독일	492	6 ~ 28
뉴질랜드	479	7 ~ 28	벨기에	479	10 ~ 28	오스트리아	491	7 ~ 28
리투아니아	475	16 ~ 29	포르투갈	477	10 ~ 29	벨기에	491	9 ~ 28
독일	475	8 ~ 30	노르웨이	477	11 ~ 29	네덜란드	488	7 ~ 29
프랑스	474	15 ~ 29	라트비아	475	13 ~ 29	프랑스	487	11 ~ 29
스페인	473	18 ~ 29	스페인	474	15 ~ 29	헝가리	486	11 ~ 29
헝가리	473	16 ~ 30	프랑스	474	11 ~ 29	스페인	485	14 ~ 29
포르투갈	472	17 ~ 30	이스라엘	474	11 ~ 29	리투아니아	484	14 ~ 29
이탈리아	471	16 ~ 31	헝가리	473	14 ~ 29	포르투갈	484	13 ~ 29
노르웨이	468	19 ~ 31	리투아니아	472	15 ~ 29	노르웨이	478	18 ~ 30
미국	465	18 ~ 32	슬로베니아	469	17 ~ 29	이탈리아	477	18 ~ 31
슬로바키아	464	20 ~ 32	네덜란드	459	19 ~ 32	튀르키예	476	21 ~ 31
아이슬란드	459	26 ~ 32	튀르키예	456	29 ~ 32	이스라엘	465	27 ~ 31
이스라엘	458	23 ~ 32	칠레	448	29 ~ 34	슬로바키아	462	28 ~ 31
튀르키예	453	28 ~ 32	슬로바키아	447	29 ~ 34	아이슬란드	447	32 ~ 34
그리스	430	33 ~ 33	그리스	438	31 ~ 34	칠레	444	32 ~ 34
칠레	412	34 ~ 34	아이슬란드	436	31 ~ 34	그리스	441	32 ~ 34
멕시코	395	35 ~ 37	멕시코	415	35 ~ 37	콜롬비아	411	35 ~ 37
코스타리카	385	35 ~ 37	코스타리카	415	35 ~ 37	코스타리카	411	35 ~ 37
콜롬비아	383	35 ~ 37	콜롬비아	409	35 ~ 37	멕시코	410	35 ~ 37
OECD 평균	472		OECD 평균	476		OECD 평균	485	

※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임

※ OECD 평균은 OECD 37개국 각각의 평균에 대한 평균임

자료: 보도자료(2023.12.05.), p.4.

〈표 3〉 PISA 2022 전체 참여국의 영역별 국제비교

수학			읽기			과학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싱가포르	575	1 ~ 1	싱가포르	543	1 ~ 1	싱가포르	561	1 ~ 1
마카오(중국)	552	2 ~ 4	아일랜드	516	2 ~ 9	일본	547	2 ~ 5
대만	547	2 ~ 6	일본	516	2 ~ 11	마카오(중국)	543	2 ~ 5
홍콩(중국)	540	2 ~ 6	대한민국	515	2 ~ 12	대만	537	2 ~ 7
일본	536	3 ~ 6	대만	515	2 ~ 11	대한민국	528	2 ~ 9
대한민국	527	3 ~ 7	에스토니아	511	2 ~ 12	에스토니아	526	4 ~ 8
에스토니아	510	6 ~ 9	마카오(중국)	510	2 ~ 11	홍콩(중국)	520	4 ~ 11
스위스	508	7 ~ 10	캐나다	507	2 ~ 13	캐나다	515	5 ~ 13
캐나다	497	8 ~ 18	미국	504	2 ~ 18	핀란드	511	6 ~ 18
네덜란드	493	7 ~ 26	뉴질랜드	501	3 ~ 17	호주	507	7 ~ 21
아일랜드	492	9 ~ 22	홍콩(중국)	500	3 ~ 18	뉴질랜드	504	8 ~ 25
벨기에	489	9 ~ 24	호주	498	6 ~ 18	아일랜드	504	8 ~ 25
덴마크	489	9 ~ 24	영국	494	8 ~ 22	스위스	503	9 ~ 25
영국	489	9 ~ 24	핀란드	490	9 ~ 26	슬로베니아	500	9 ~ 26
폴란드	489	9 ~ 24	덴마크	489	9 ~ 30	영국	500	9 ~ 27
오스트리아	487	9 ~ 28	폴란드	489	9 ~ 30	미국	499	7 ~ 32
호주	487	9 ~ 25	체코	489	9 ~ 28	폴란드	499	9 ~ 28
체코	487	9 ~ 26	스웨덴	487	10 ~ 30	체코	498	9 ~ 29
슬로베니아	485	10 ~ 28	스위스	483	13 ~ 32	라트비아	494	11 ~ 32
핀란드	484	10 ~ 30	이탈리아	482	13 ~ 33	덴마크	494	10 ~ 32
라트비아	483	10 ~ 32	오스트리아	480	13 ~ 34	스웨덴	494	11 ~ 32
스웨덴	482	10 ~ 32	독일	480	13 ~ 34	독일	492	10 ~ 35
뉴질랜드	479	11 ~ 33	벨기에	479	14 ~ 34	오스트리아	491	11 ~ 33
리투아니아	475	18 ~ 36	포르투갈	477	14 ~ 34	벨기에	491	11 ~ 34
독일	475	11 ~ 37	노르웨이	477	14 ~ 34	네덜란드	488	10 ~ 35
프랑스	474	16 ~ 37	크로아티아	475	15 ~ 34	프랑스	487	14 ~ 35
스페인	473	21 ~ 36	라트비아	475	16 ~ 34	헝가리	486	15 ~ 35
헝가리	473	19 ~ 37	스페인	474	19 ~ 34	스페인	485	18 ~ 35
포르투갈	472	20 ~ 37	프랑스	474	15 ~ 34	리투아니아	484	17 ~ 35
이탈리아	471	18 ~ 38	이스라엘	474	14 ~ 34	포르투갈	484	16 ~ 35
베트남	469	16 ~ 39	헝가리	473	16 ~ 34	크로아티아	483	18 ~ 35
노르웨이	468	23 ~ 38	리투아니아	472	19 ~ 34	노르웨이	478	22 ~ 37
몰타	466	24 ~ 38	슬로베니아	469	20 ~ 34	이탈리아	477	18 ~ 38
미국	465	21 ~ 39	네덜란드	459	21 ~ 40	튀르키예	476	24 ~ 38
슬로바키아	464	24 ~ 39	튀르키예	456	34 ~ 38	베트남	472	23 ~ 38
크로아티아	463	24 ~ 39	칠레	448	34 ~ 42	몰타	466	33 ~ 39
아이슬란드	459	30 ~ 40	슬로바키아	447	34 ~ 43	이스라엘	465	32 ~ 40

※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임

※ 전체 참여국 중 평균 점수 상위 37개국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자료: 보도자료(2023.12.05.),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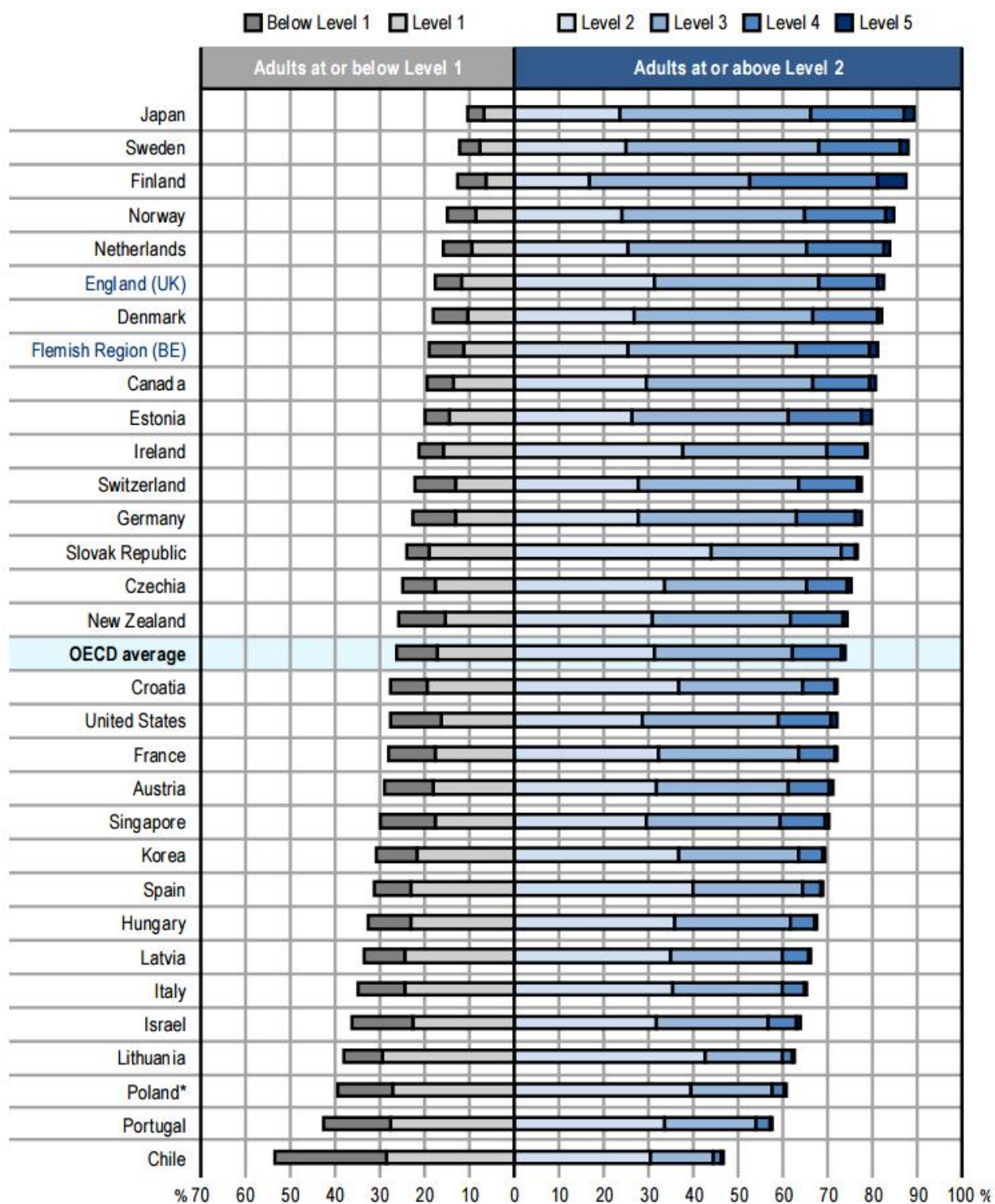
〈표 4〉 우리나라 PISA 주기별 결과

영역		연구 주기 참여국 수 (OECD 회원국 수)	PISA 2000 43개국 (28개국)	PISA 2003 41개국 (30개국)	PISA 2006 57개국 (30개국)	PISA 2009 75개국 (34개국)	PISA 2012 65개국 (34개국)	PISA 2015 72개국 (35개국)	PISA 2018 79개국 (37개국)	PISA 2022 81개국 (37개국)
수학	평균 점수		547	542	547	546	554	524	526	527
	순위	OECD	2	1~4	1~2	1~2	1	1~4	1~4	1~2
		전체	3	1~5	1~4	3~6	3~5	6~9	5~9	3~7
읽기	평균 점수		525	534	556	539	536	517	514	515
	순위	OECD	6	2~3	1	1~2	1~2	3~8	2~7	1~7
		전체	7	2~3	1	2~4	3~5	4~9	6~11	2~12
과학	평균 점수		552	538	522	538	538	516	519	528
	순위	OECD	1	2~3	5~9	2~4	2~4	5~8	3~5	2~5
		전체	1	2~4	7~13	4~7	5~8	9~14	6~10	2~9

- ※ 1. PISA 영역별 점수 추이 분석은 해당 영역이 처음 주영역인 주기를 기준으로 하며, 영역별 기준 주기는 읽기 PISA 2000, 수학 PISA 2003, 과학 PISA 2006임
2. 주기별 주영역: PISA 2000(읽기), PISA 2003(수학), PISA 2006(과학), PISA 2009(읽기), PISA 2012(수학), PISA 2015(과학), PISA 2018(읽기), PISA 2022(수학)
3. PISA 2000(43개국)은 PISA 2000(32개국)과 PISA 2000 PLUS(11개국)를 합한 자료임. PISA 2000 PLUS는 OECD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PISA 2000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2001년에 PISA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4. PISA 2009(75개국)는 PISA 2009(65개국)와 2010년에 PISA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OECD 비회원국(10개국)을 대상으로 PISA 2009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시행한 결과를 합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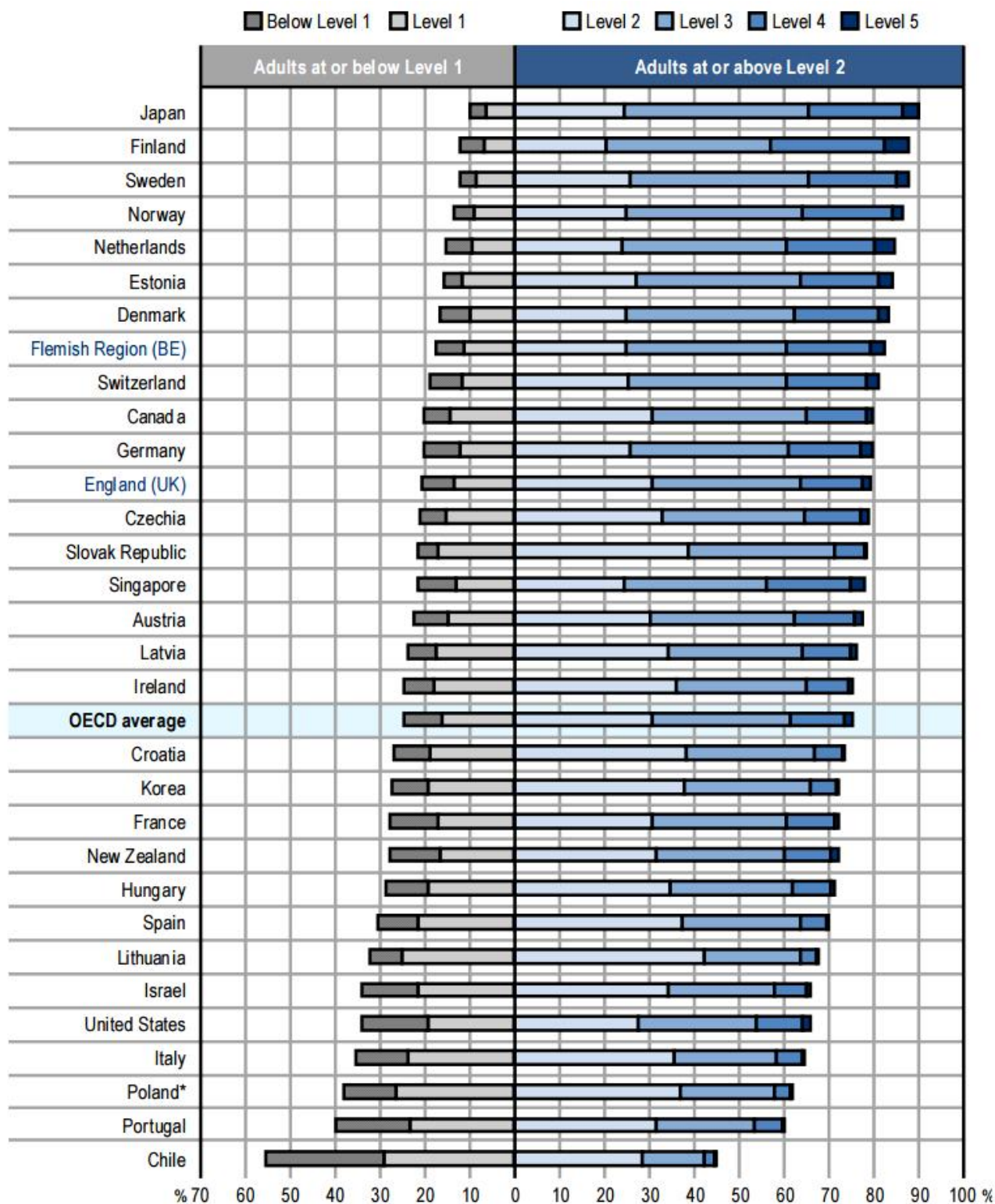
자료: 보도자료(2023.12.05.), p.6.

[그림 1] 성인 언어능력 수준별 비율 국제비교: PIAAC 2주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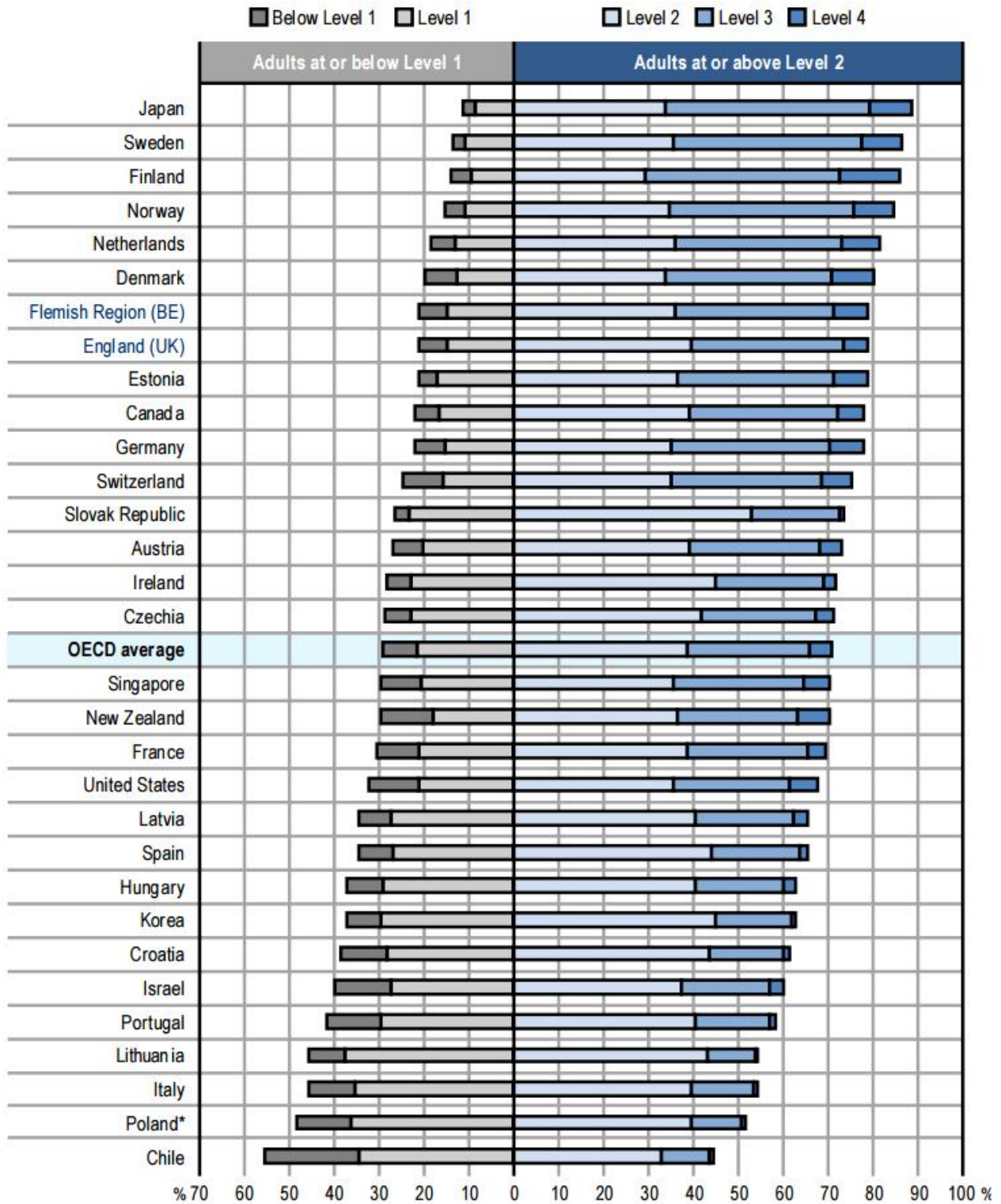
자료: OECD(2024). p.64.

[그림 2] 성인 수리능력 수준별 비율 국제비교: PIAAC 2주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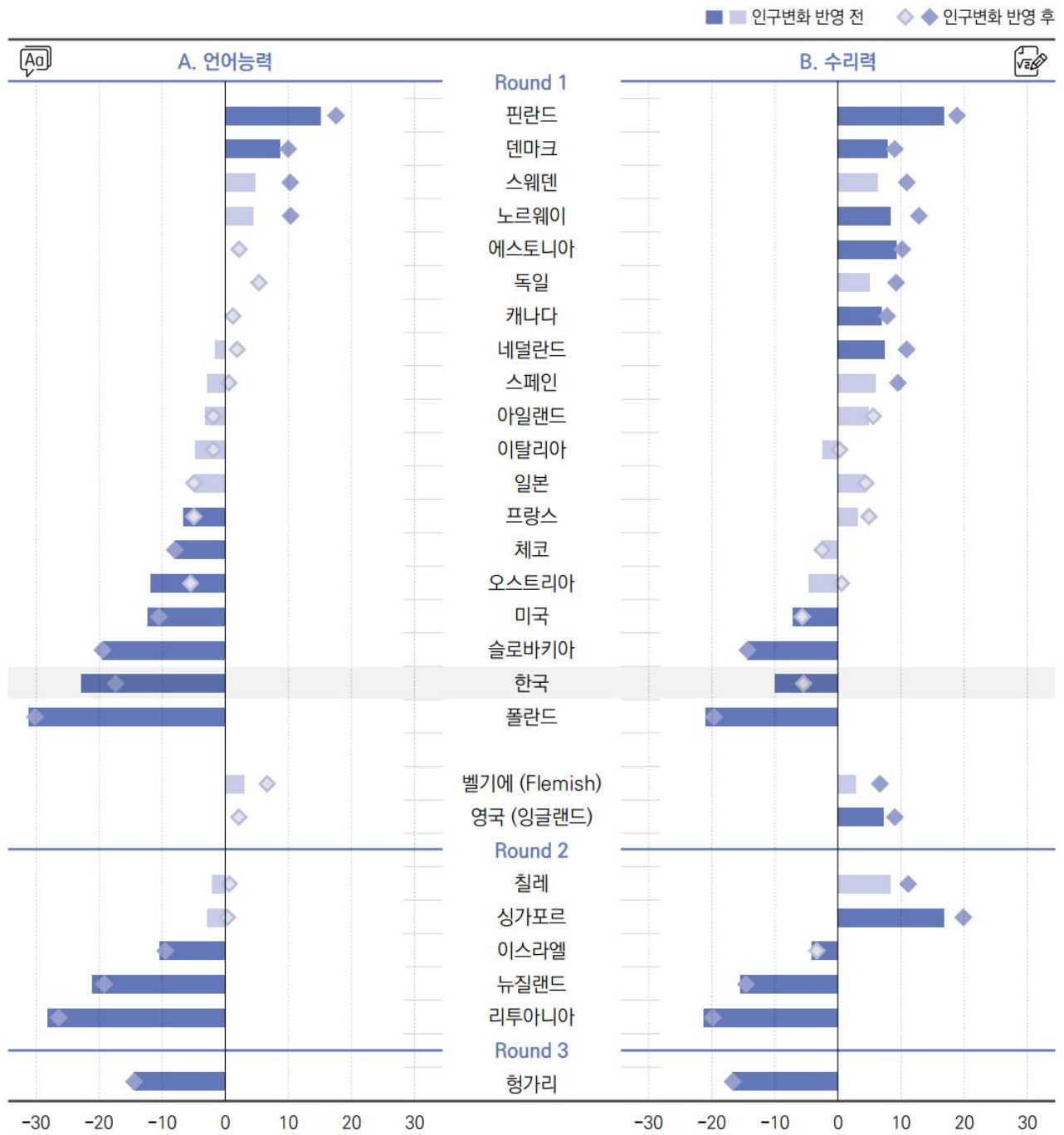
자료: OECD(2024). p.65.

[그림 3] 성인 적응적 문제해결 능력 수준별 비율 국제비교: PIAAC 2주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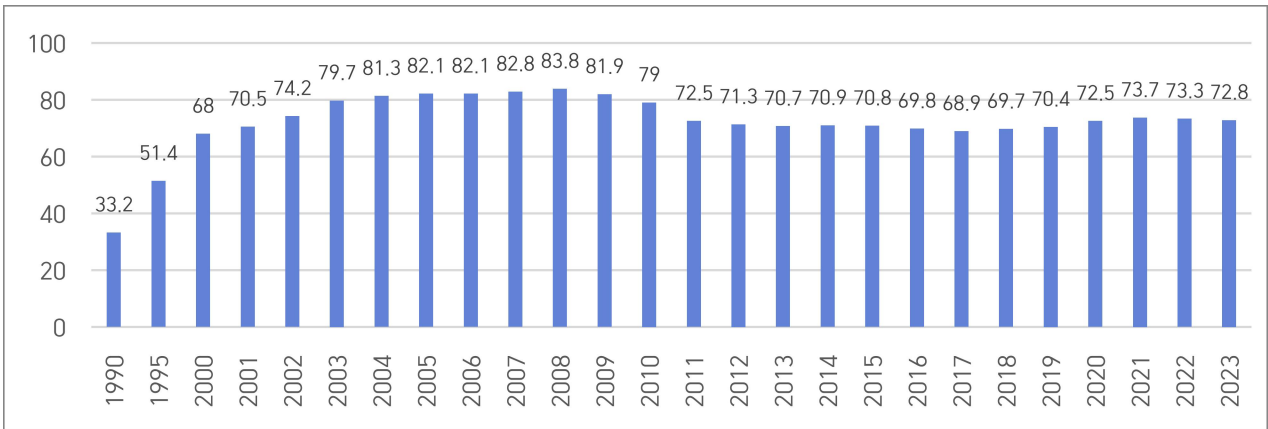


자료: OECD(2024). p.66.

[그림 4] PIAAC 1주기와 2주기의 언어능력 및 수리능력 점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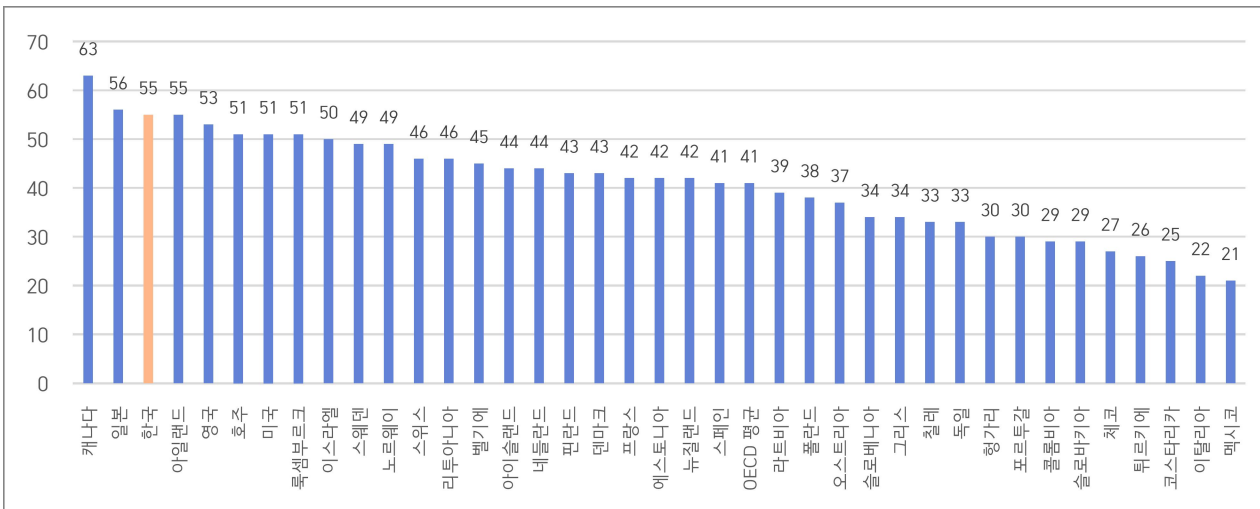


[그림 5]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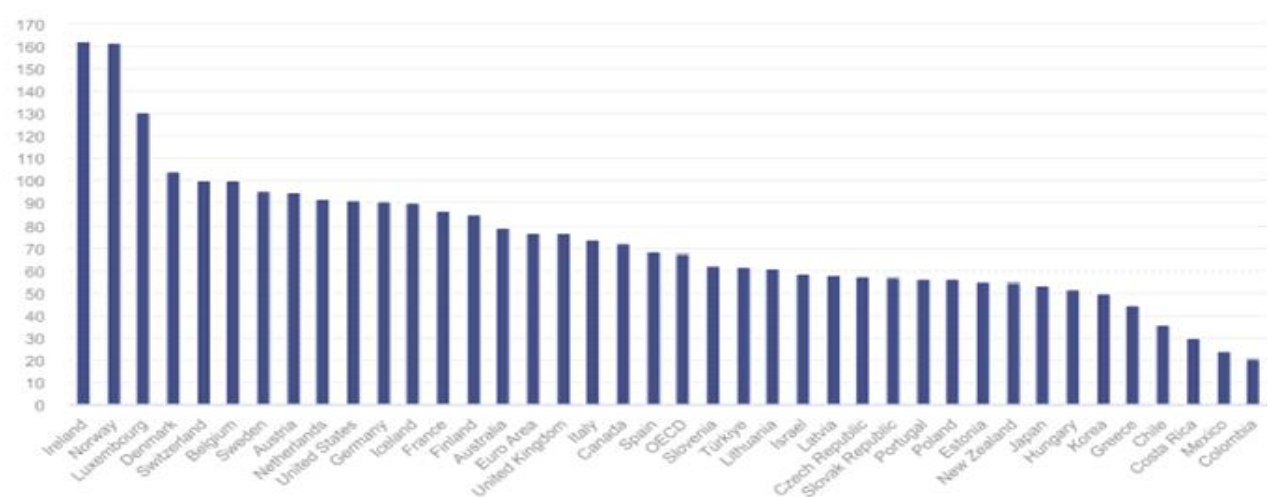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그림 6] OECD 국가 15-64세 노동력 중에서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단위:%)



자료: OECD(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p.60.

[그림 7] OECD 국가의 노동생산성 비교(근로시간당 GDP)



자료: OECD(2024),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 2024, p.30.